

한·중·일의
민족주의 특성과
갈등 완화 방안

진행남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한·중·일의 민족주의 특성과
갈등 완화 방안

목 차

I. 문제의 제기	1
II. 민족주의와 갈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	5
1. 민족주의 개념의 진화	5
2. 국가 간 갈등과 민족주의의 상호작용 논의	13
III. 한·중·일 3국 간 갈등의 현황	17
1. 영토·해양경계 갈등	17
2. 과거사 갈등	31
3. 안보·경제패권 갈등	44
IV. 한·중·일 민족주의의 부상 배경 및 특성	49
1. 동북아에서의 민족주의의 부상 배경	49
2. 한국 민족주의의 부상 배경 및 특성	52
3. 중국 민족주의의 부상 배경 및 특성	56
4. 일본 민족주의의 부상 배경 및 특성	61
V. 한·중·일의 민족주의와 갈등의 상호작용 검토	65
1. 민족주의와 영토·해양경계 갈등의 상호작용 검토	66
2. 민족주의와 과거사 갈등의 상호작용 검토	70
3. 민족주의와 안보·경제패권 갈등의 상호작용 검토	73
VI. 한·중·일의 민족주의 대응 및 갈등 완화 방안	74
1. 한·중·일의 민족주의적 갈등의 유형별 완화 방안	74
2. 한·중·일의 민족주의적 갈등의 층위별 대응 방안	82
3. 국가정체성과 지역정체성의 공존 방안	87
4. 한국의 포지셔닝 파워의 적극 구사	92
5. 갈등 현안에 대한 언론의 공정보도 노력	96
6. 인터넷 민족주의에 대한 대응 방안	101
VII. 맺는 말	107

한·중·일간의 영토 갈등, 과거사 갈등을 비롯한 다양한 갈등 양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할 때 주목되는 것이 이들 나라의 '정체성' 문제가 대외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러한 정체성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는 요소 중 하나를 민족주의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한·중·일간의 갈등들을 △영토·해양경계 갈등 △과거사 갈등 △안보 갈등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국의 민족주의의 특성을 탐색해서 이들 갈등과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했다.

검색어: 민족주의, 영토갈등, 해양경계갈등, 과거사 갈등, 안보 갈등

I. 문제의 제기

동북아 주요 3국인 한·중·일 간에는 근래 들어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영토와 과거사 등을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20세기에 슈퍼파워로서 ‘세계의 경찰’ 역할을 자임하던 미국이 21세기 들어 상대적인 쇠퇴의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단극체제도 함께 막을 내리고 있다. 반면에, 개혁개방으로 30여년의 고도성장을 구가해온 중국은 오늘날 미국과 대등한 ‘신형대국관계’를 주장하면서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향해 줄달음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면서 자신감과 정체성이 크게 흔들리던 일본은 2012년 자민당이 재집권하면서 전후체제를 부정하는 급진적인 우경화로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가난과 질곡의 근대사를 딛고 세계 15위의 경제력과 한류 등 소프트파워 자산까지 축적하면서 선도적 중견국으로 올라선 한국은 이에 따른 상당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동북아 강대국들 간의 체스판에서 만만한 종속변수에 머물기를 거부하고 하다.

2012년 8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지인 독도를 방문한 데에 대해, 일본은 주변국 배려의 징표라 할 수 있는 이른바 ‘근린제국 조항’마저 폐기하고 분쟁지역화를 겨냥한 도발 행보를 서슴지 않고 있다. 또 영유권 귀속 결정을 후대에 맡기기로 한 약속을 깨고 일본이 일방적으로 국유화 조치를 감행한 센카쿠 열도(중국어명: 댜오위다오)에 대해, 중국이 결코 순순히 넘겨줄 수 없다는 결의를 다지면서 양국의 갈등은 급기야 일촉즉발의 무력시위 양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일본은 증거가 엄존하는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과 난징대학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의 역사를 수정하는 데에 골몰하고 있다. 특히 아베 신조 총리는 주변국의 극구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를 강행한데 이어, 2014년에 들어서서는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미명 아래 평화헌법에 대한 ‘해석개헌’의 편법까지 동원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결여된 ‘보통국가’를 향한 길을 재촉하고 있다.

최근 들어 민족주의의 ‘판도라 상자’가 열린 가운데, 이러한 영토 분쟁과 해

양경계를 둘러싼 마찰을 비롯, 과거사 갈등과 안보전략적 대립, 나아가 지역 헤게모니 다툼까지 얽히고설킴으로써, 동북아는 그 ‘상승효과(synergy effect)’로 말미암아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형국이다. 한·중·일 3국 국민들 간에는 혐오감이 급등한 반면 호감도는 크게 떨어지고 있어 조기 관계개선의 전망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한·중·일에서 고조되고 있는 민족주의는 지나친 자기정당화로 인해 지역협력의 열린 구도를 저해하고 있다.

일본의 아사히(朝日)신문이 2014년 2월~3월에 한·중·일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¹는 3국 관계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국에 대한 호감을 묻는 질문에 한국 응답자는 67%가 ‘일본이 싫다’고 답했고 4%만 호감을 보였다. 일본인도 ‘한국이 싫다’는 응답이 34%로, ‘좋다’는 응답(8%)의 4배가 넘었다. 중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조사에서 상대국이 싫다는 응답은 각각 74%, 51%로 절반을 넘었다. 호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각각 11%, 4%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과 중국이 싫다는 일본인의 응답은 2005년 조사 때보다 각각 12%포인트, 23%포인트 늘었고, 특히 중국인에 대한 호감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 2014년 4월 8일 자).²

한·중·일의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는 급속도로 증가해 왔다. 2012년 중국은 한국·일본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한·일은 중국에 대해 각각 제3위(2,151억 달러), 제2위(3,290억 달러)의 교역상대국으로 됐다. 일본은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2위(1,032억 달러) 교역상대국이며, 한국은 일본의 제3위 교역상대국이다(외교부, 2013). 인적 왕래도 활발해 2013년에는 1,740만명이 3국을 오갔다.

¹ 아사히신문의 조사는 일본 유권자 3,000명을 상대로 우편(회수율 68%)으로 시행됐고, 한국과 중국에서는 18세 이상 남녀 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는데, 유효 응답자는 한국 1,009명, 중국 1,000명이었다.

² 특히 과거사문제에 대한 인식차가 두드러졌다. 식민지배·중일전쟁 등에 관해 한국인은 97%, 중국인은 88%가 매듭지어진 일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반면에 일본은 47%만 해결되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48%는 이미 끝난 일이라고 답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도 한국 응답자의 95%는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게 정식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에서는 정식으로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이 63%나 됐다. 야스쿠니 신사의 성격에 대해 한국인(73%)과 중국인(77%)은 군국주의의 상징이라고 평가했지만, 일본인 상당수(64%)는 전사자를 추모하는 곳이라고 답했다(동아일보, 2014년 4월 8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핵심 3국 간에는 영토와 과거사, 해양경계 등을 둘러싼 갈등과 마찰이 증가일로에 있고, 심지어 종전에는 없었던 문화갈등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국제관계에 대한 자유주의·신기능주의적 접근은 물론이고 현실주의적 접근으로도 설명하기 어렵다. 그동안 동아시아에서의 지역협력은 명시적으로든 아니든 유럽식 통합모델을 지향점으로 삼아 왔다. 유럽식 통합은 자유주의·신기능주의적 접근의 유효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즉, 국제레짐의 발전이나 지역적 수준에서의 경제협력 등이 국제관계의 부정적 성격을 약화시키고 지역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은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의 ‘확산효과(spill-over)’가 지역통합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동북아에서는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크게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군사적 영역에서의 갈등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이남주·배기찬, 2009).

최근 동북아에서 각종 갈등의 증가는 일견 경제협력의 증진이 안보적 차원의 국가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결국 힘의 분포가 국제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주장하는 현실주의적 설명이 더 타당하다는 증거로 보인다. 중일 간의 경쟁과 같은 현실주의적 요인이 동북아 갈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북아 국가들은 현실주의적 설명이 예측하는 것과 왕왕 다르게 행동한다. 이를테면 일본이 동북아에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고자 한다면 한국이나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영토·역사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은 곧잘 반대의 선택을 한다. 중국도 미국에 대한 힘의 균형을 추구한다면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일본의 역사 문제 등에 과도한 반응을 하기 십상이다.

이러한 자유주의·신기능주의적 접근이나 현실주의적 접근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동북아 국가들의 ‘정체성’ 문제가 대외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다. 그리고 국민국가로서의 이들의 정체성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는 요소 중 하나가 민족주의다. 우선, 동북아에서 경제·사회 협력의 확산효과가 약한 것은 교류와 접촉의 증가가 정체성의 충돌을 동반하는 경

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동북아에서는 세력균형의 논리에 따라 안정적인 국제질서가 만들어지기도 어렵다. 예를 들어 중국과 러시아는 국경협상의 타결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극동지역으로의 한족 진출은 양국 사이의 민족주의적 갈등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남아 있다. 즉, 민족주의라는 요인이 유럽의 통합모델이나 세력균형과 같은 안정적인 지역질서가 형성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한·중·일 협력을 증진시키려면 3국 간 갈등과 민족주의 사이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춰 그것이 작동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에 기초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는 것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이남주·배기찬, 2009).

여기서 민족주의 자체가 부정돼야 하거나 소멸시켜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민족주의와 갈등이 상호작용해서 에스컬레이트(escalate)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일이다. 따라서 한·중·일 각국의 민족주의의 특성을 파악해서 3국 간 갈등과의 상호작용을 분석, 이를 토대로 동북아 갈등을 완화하고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하기 위한 방안을 탐구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민족주의 개념의 진화를 살펴보는 가운데, 가장 높은 차원의 갈등인 국가 간 갈등과 민족주의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 것인지를 논의한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는 민족주의와 국가 간 갈등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가운데 본 연구의 논의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기 위한 것이다.

둘째, 한·중·일 3국의 갈등 현황을 △영토·해양경계 갈등 △과거사 갈등 △안보·경제패권 갈등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3가지 유형의 갈등 가운데 한·중·일 간에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돼온 갈등들의 형성 과정과 그 배경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는 향후 효과적인 갈등 완화 방안을 모색해 나감에 있어서 당면하게 될 주요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오늘날 동북아 지역에서 이처럼 민족주의가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배경을 개관하는 한편, 한·중·일에서 각각 민족주의가 부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원인을 살펴보는 가운데 그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고유의 역사와 문화

를 지니고 있는 3국이 상이한 근대적 국민국가 형성 과정과 오늘날의 다양한 국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민족주의를 발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 국가 간에 불거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향과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넷째, 한·중·일의 민족주의와 국가 간 갈등의 상호작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는 민족주의와 국가 간 갈등에 어떠한 변수가 개입되면서 어떠한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탐색해 보기 위함이다.

다섯째, 3국의 민족주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구체적인 갈등 완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과 함께 ‘열린 민족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3국 간의 제반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민족주의 차원의 접근을 통해 유용한 실천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II. 민족주의와 갈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민족주의 개념의 진화

1) 민족의 개념 및 특성

‘민족’은 원래 영어 ‘nation’이라는 용어를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것이다.³ 전통시대 용례를 담은 한자어 사전에 민족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거나 전근대적 용례가 나와 있지 않은 것이 이를 암시한다. 우리의 전통적 사고방식에 근거하면 인종과 종족, 민족 간에 구별은 없었으며 현재도 이러한 개념들은 혼용되고 있는 경향이 남아있다. 서구에서도 18세기 이전까지는 nation이라는 개념을 별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자본주의의 발흥과 함께 근대적 의미의 국민국가가 성립된 이래 nation이란 용어가 비로소 대중화되었다. nation은 우리말의 민족·국

³ nation의 어원은 라틴어 ‘natio’에서 비롯됐으며, 탄생(birth)·자연(nature)·종족(race)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어원에서 출발한 민족의 개념은 후대에 이르러 문화적·지역적·혈연적으로 형성된 특정한 그룹을 뜻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이완범, 2006).

가·국민 세 용어의 뜻을 모두 함축하고 있다(이완범, 2006).

인류학자들에 의하면, 인류사회의 진화는 대체로 개인(man, individual)이라는 단순 개체로부터 시작돼 가족(family)·지족(支族; lineage) 혹은 씨족(clan)·부락(tribe)·부족(nationality)·민족(nation)·민족국가(nation-state)의 발전과정을 거쳐 왔다는 것이다. 민족은 혈연관계와 동일한 문화를 기초로 형성된 단체로서 개인은 민족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분자라 할 수 있다. 혈연으로 구성된 가족이 외혼(外婚)을 통해 점차 지역화·경제화·조직화·종교화를 거치면서 민족으로 성장하며, 이러한 민족은 비교적 배타성을 지닌 사회를 구성하게 되고 최후에는 대외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려고 한다.

혈연과 문화가 같은 하나의 민족이 탄생된 후 민족의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의 운명을 좌우할 국가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국가를 민족국가라 한다. 현대국가의 대부분은 민족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민족 국가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세계 190여개 국가 중 극소수의 국가만이 단일민족국가를 유지하고 있을 뿐, 절대 다수는 복합민족국가로서 존재하고 있다(이완범, 2006). 한편 한·중·일 동북아 3국의 경우 서구와는 달리 근대 이전부터 민족이 형성되었다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홉스봄(Eric J. Hobsbawm)이 ‘역사적 민족(historic nation)’이라고 지적했듯이, 동북아에서는 이미 고대로부터 상당히 동질적인 인종과 문화를 중심으로 일정 지역의 기반위에서 정치적 실체를 구성해 왔다. 한편 서구에서도 그들의 민족형성이 고대부터 있었다는 견해도 있다. 민족형성에 관한 근대주의적 정설(modernist)에 대해 전근대적 고대기원설(primordialist)이 대립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인들과 히브리인들은 민족의식이 있었으며 이것이 민족의 원류라는 것이다. 물론 중세의 보편주의가 민족의식을 말살했지만 그 원류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서양의 중세 보편주의에 비견되는 것이 동양에도 있었다. 그것은 중국 중심의 중화주의이다.⁴ 따라서 전근대적 원류를 ‘에쓰니(ethnie)’로 보고 근대적

⁴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인 진(秦)-한(漢)나라 때에도 화(華)와 이(夷)의 이분법으로 세계를 바라보았지만 중화의식은 송(宋)대에 내재화되었다(이완범, 2006).

nation과의 사이에 연속성과 단절성을 추구해 보는 시각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thnie’라는 말은 스미스(Anthony D. Smith)가 서구 nation의 기원을 살펴보기 위해 사용했는데, 생물학적이라기보다는 문화적인 의미를 갖는 ‘인종 공동체(ethnic community)’란 뜻을 지닌 프랑스어로, 동아시아의 족(族)이라는 개념과 상당한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이완범, 2006).

스미스에 의하면 ‘ethnie’는 여섯 가지 특성을 가진다. 첫째, 태고로부터 독특한 집합체의 이름을 가짐으로써 다른 부류와 구별되는 자신의 실체(essence)를 지닌다. 둘째, 자기네 나름의 선조의 내력에 관한 공통된 신화를 가진다. 셋째, 세대를 통해 전해 내려오는 공통의 경험과 기억 속에서 역사를 공유한다. 넷째, 크게 보아 언어나 종교뿐만 아니라 때로는 관습·제도·법·건축·의복·음식·음악·피부색깔·신체골격 등 여러 측면에서 공유된 문화특질을 지닌다. 다섯째, 특정한 영토를 지님으로써 그 지역 안에서 직접 거주하거나 혹은 고향이라는 상징적 연계성을 갖는다. 여섯째,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강한 정체성(identity), 귀속 의식과 연대감을 지닌다. 스미스가 말하는 ‘ethnie’는 신화·문화·역사의 공유를 통해 타자와 구별되는 명칭을 갖는 사람들로서 특정 영토와 관계되어 있으며, 서로 간에 연대감을 보이는 인종공동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여러 대륙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생성 내지 재형성된 민족의 시원체라고 할 수 있다(이완범, 2006).

2) 민족주의 개념의 진화

시원주의적 관점(primordialist)에서는 민족을 동일한 문화와 언어, 전통을 지닌 집단으로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가장 오래된 실체로 보는데, 이처럼 공통의 문화와 조상을 가진 대규모의 정치화된 종족집단의 역사성을 중시하는 관점을 ‘인종 민족주의’라고 한다. 이에 비해 민족을 이루려는 정치적 의도에 주목하는 도구적 관점(instrumentalist)에서는 민족이란 국민주권, 공공문화, 대중참여 등 근대적 의미의 법적·정치적 공동체라는 것이다. 이처럼 명확히 경계지어진 영토 안에서 민족을 사회 공동체의 기본단위로 보고 자유의지에 의거해

국가적 소속을 결정하려는 관점을 ‘국가 민족주의’라고 한다.

요컨대, 협의의 의미에서 보면 민족주의는 공동의 언어, 종교, 문화를 가진 민족이 하나의 독립된 주권국가나 정치공동체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는 이데올로기에 국한된다. 이에 비해, 광의의 의미에서 보면 민족주의란 특정 민족에 대한 충성심을 주장하는 보편적 이념과 정서를 말하는 것이다(Anthony D. Smith, 2010). 이처럼 관점에 따라 다양한 개념을 지닌 민족주의는 또한 그 표출되는 성격에 따라 공격적 민족주의, 방어적 민족주의, 수동적(반응적) 민족주의, 급진적 민족주의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서정경, 2013).

민족주의 개념은 시대 상황과 국가 사회마다 편차를 보여 왔다. 진덕규(2011)는 2차 대전 이후 민족주의 개념의 전개를 4단계로 나누고 있다.

- ① 제1단계: 주로 1940년대에서 1950년대가 제1단계에 속하는데, 이 시기의 민족주의에는 인종적 민족 단위에 의한 ‘일 민족 일 국가’의 형성이 기본적인 가치로 설정되었다. 이 관점에서 민족주의를 논했던 이론가로는 한스 콘(Hans Kohn), 카(E. H. Carr), 케두리(E. Kedourie), 스나이더(L. Snyder)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민족주의는 민족에 대해서 최고의 충성을 맹세하는 민족구성원의 감정 상태’라고 한 한스 콘(1959)의 정의는 민족주의에 대한 고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의 논의에서는 민족으로부터 민족주의가 자연발생적으로 표출된다는 식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민족은 인종, 역사, 전통, 종교와 자연스럽게 연관되고, 또 민족 구성에는 혈연적인 것이 기반이 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말하자면, 이 시기의 민족주의는 혈연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한 인종적 민족에 비중을 두었다고 하겠다.
- ② 제2단계: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는 민족주의를 민족공동체로서의 동일체를 이루는 기반으로 인식했다. 이 시기의 주요 민족주의 이론가는 칼도이치(Karl Deutsch)와 휴 시튼-왓슨(Hugh Seton-Watson) 등이다. 민족주의란 동일한 혈연이나 역사, 전통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영역 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 간에 ‘우리’라는 공통된 의식이나

문화가 이룩될 수 있다고 본 도이치(1966)는 민족을 어느 면에서는 동질적 문화 범주로 여겼다. 그는 특히 민족공동체의 조성은 언어에 의해 이뤄질 수 있으며, 따라서 언어는 민족 형성의 매개 변수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민족주의가 거세게 일고 있던 제3세계 신생국가에서는 혈연적 공동체에 기반을 둔 민족이나 민족주의 대신에 언어의 일정한 통용권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적·언어적 공동체를 민족적 단위로 설정하기도 했다.

③ 제3단계: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기로, 이 시기에는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시작된 종속이론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접합이 본격 논의된다. 앙드레 프랑크(Andre G. Frank), 카르도소(Fernando H. Cardoso), 프레비시(Raul Prebisch) 등은 민족주의를 더 이상 부르주아의 사상이 아닌 노동계급의 사상체계로 여기게 된다. 즉, 민족주의는 강대국의 식민지 침탈에 맞서는 저개발국가의 지향이념이 된다. 민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은 노동자 계급이고, 이들이 주장하는 민족주의만이 부르주아 자본주의의 국제화, 즉 자본주의 세계시스템을 붕괴시킬 유일한 사상체계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

④ 제4단계: 1980년대 후반부터 민족주의는 두 가지의 상반된 개념으로 나아간다. 하나는 기든스(A. Giddens)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민족주의 개념의 전개로 주류적 위치를 차지했다. 기든스(1987)는 민족주의를 ‘국민 국가의 발전을 위한 민족구성원의 가치체계’라고 정의했다. 다른 하나는 앤더슨(Benedict Anderson)의 진보적 민족주의론의 대두였다. 앤더슨은 민족주의를 역사적인 실체로 인식하기보다 관념적인 지적 상상물로 여겨,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로 개념 규정했다.⁵ 물론 그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지만 그의 관점은 역사적 실체가 경시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진덕규, 2011).

⁵ 앤더슨은 “가장 작은 민족의 구성원들도 대부분의 자기 동료들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며 심지어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도 못하지만, 구성원 각자의 마음에 서로 친교(communion)의 이미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상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족주의는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이 처한 시대와 환경에 따라 진화해 왔다고 하겠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한 민족주의의 반응성을 천착한 연구로는 민족주의 구성론과 신민족주의론을 들 수 있다. 우선, 민족주의 구성론은 민족주의 실재론과 달리 문화적·정치적 요인에 의한 민족주의 구성을 강조함으로써 다양한 민족주의 혹은 ‘열린 민족주의’의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류석진 외, 2013).

민족주의 실재론은 공동의 언어·혈연·문화공동체라는 객관적 요소에 민족의식이라는 주관적 요소가 더해지면서 공고해진 민족주의라는 실체가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엄밀한 학문적 입장이라기보다는 선형적으로 실재하는 분리적 단위로서의 민족에 초점을 맞추는 일반론이다. 민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요소로 평가되는 주권이라는 주관적 기반에 더해, 영토·언어·혈연·문화공동체라는 요소는 국민적 자긍심의 객관적 기반을 제공한다. 민족주의 실재론은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에서 강력하게 나타났다. 주권을 상실하고, 영토를 침탈당한 가운데, 문화 훼손과 고유언어 상실을 경험한 민족국가에서 민족주의 실재론은 주권 회복 차원에서 자기강화됐다. 그러나 탈식민사회에 접어들어 객관적 기반을 강조할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현대적 의미의 민족주의는 민족주의 실재론을 당위적으로 부각하기보다는 현재의 다양한 문화적 기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신애국주의로 변화하고 있다.

민족주의 실재론과 달리 민족주의 구성론은 특정 목적을 전제로 민족주의가 변화할 수 있다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입장을 보인다. 민족주의 구성론의 대표적 논자로서, ‘상상의 공동체’ 개념으로 유명한 앤더슨(B. Anderson, 2002)은 민족을 ‘본래 제한되고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되는 정치공동체’라고 정의한다. 민족주의 혹은 민족공동체는 현실에 존재하는 ‘민족’을 배경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구성되며 지속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재구성된다는 것이다. 특히,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민족주의에서는 출판자본주의와 미디어의 역할이 매우 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디어에 의해 증폭되는 민족주의 담론의 소비를 중시하는 강상중(2004)은 아무리 광적이고 퇴영적인 민족주의 사상일지라도 거기에는 로

고스적인 것과 파토스적인 것이 용해된 실천적 환기력이 엿보인다고 주장한다.

민족주의 구성론의 또 다른 축은 겔너(Ernest Gellner)나 홉스봄(Eric Hobsbawm)류의 정치적 구성론을 들 수 있다. 겔너(1964)는 민족주의는 영원한 형태의 구조가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형을 거듭한다고 보았다. 또 민족주의는 자기의식을 향한 민족들의 각성이 아니라 민족들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인위적’으로 형성됐으며, 실제의 인간 공동체의 분열과 소멸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한 형태의 대체물이라는 것이다. 특히 겔너는 민족주의가 국가 형성 과정에서 엘리트들에 의해 고안되었다고 주장했다.

사회주의권의 붕괴 후, 국민국가 쇠퇴와 민족주의 쇠퇴를 예언했던 홉스봄의 민족주의관은 훨씬 더 비관적이다. 홉스봄은 민족주의의 구성 요소로서 언어·영토·종교가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고, 민족주의의 구성요건이 매우 복합적인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상실된 공동체의 특수한 대체물로서의 민족주의가 집단적 소속감의 어떠한 변형을 동원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소속감이라는 감정은 근대 국가와 민족에 조응할 수 있는 거시 정치적 범위에서 잠재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러한 잠재적 작용을 하는 결속을 ‘원형 민족주의’라고 불렀다(Hobsbawm, 1994).

정치적 구성론에서의 민족주의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동원되는 하나의 사상적 수단인데, 실제로는 단독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항상 어떤 연쇄 고리를 이루게 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즉, 민족주의의 연쇄는 시민의식이나 애국심, 포퓰리즘, 인종주의, 자민족중심주의, 외국인 혐오, 배외주의, 제국주의, 감정적 애국주의 식의 다양한 조어에 의해 끊임없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이다(강상중, 2004).⁶

구성적 민족주의는 이처럼 민족주의의 변화의 모습을 풍부하게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민족주의 실재론 입장에서는 민족주의 이전에 이미 실재하고 있는 민족이 역사적으로 존재한다며 구성적 민족주의를 비판한다. 앤더슨이 민족 개념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정체성

⁶ 홉스봄(1994) 역시 동일한 주장을 하는데 보수주의와 민족주의의 결합,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결합 역시 정치적 구성의 사례가 된다고 할 수 있다(류석진 외, 2013).

의 중요성과 이 정체성이 어떻게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고 있는가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민족주의 실재론에서는 민족은 상상되기 이전에 실재한다며 이러한 앤더슨의 설명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한다(김영명, 2002; 신용하, 2006).

둘째, 민족의 구성 과정에 대한 실증 분석이 필요하다는 비판이다. 즉, 상상의 형성 과정과 매개 작용에 대한 앤더슨의 분석은 취약하다는 것이다(류석진, 1999). 한편, 국내의 논의에서는 구성적 민족주의 자체가 이미 서구중심적이기 때문에 약소국 내부의 민족주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한다(김영명, 2002; 신용하, 2006).

셋째, 상상이라는 핵심 개념에 대한 상이한 해석 때문에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구성적 민족주의의 특징은 실재론자들이 비판하듯 허구성에 대한 강조라기보다는, 실재하지 않은 정체성을 이데올로기적 수단으로 변화시키는 ‘의도’에 대한 비판에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김영명, 2002). 즉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나 민족의 실체에 대한 규명 없이, 특히 애국주의 등으로 변용되어 배타성, 즉 외부에 대한 공격을 위해 동원되고, 내부를 결속시키는 국가 강화 효과로 이용된다. 애국심이나 인종주의가 민족주의와 결속되면 목숨을 건 다든지,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등의 행태가 도출되며, 그 과정은 혈통이 아니라 언어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류석진 외, 2013).

모든 이데올로기가 그렇듯이 민족주의 또한 시대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개념적 내포와 특징이 변화한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근대 민족주의가 국가로서의 자주권 확보, 민족 자결권과 자립이라는 분명한 정치적 목표를 향해 형성된 것이라고 한다면, 세계화·민주화·정보화 시기의 민족주의는 권역별·국가별로 매우 다른 양태를 보이며, 그러한 모습을 신민족주의의 분출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동북아 3국의 신민족주의의 특징을 분석한 조성환(2005)은 일본은 자유주의사관에 입각한 국가주의의 부활, 중국은 영토적 민족주의, 한국은 자주의 폐쇄적 민족주의가 비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북아에서의 신민족주의 분출은 세계화 자체에 대한 저항과 방어 차원에서라기보다는 냉전 체제 이완이라는 국제질서 변화의 측면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함으로써, 유럽의 지역화와 차이가 있을 뿐 세계화·민주화·정보화와 신민족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구성적 민족주의와 신민족주의는 각기 민족주의의 다의성과 고유 개념이 현재의 환경변화를 반영하며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민족주의의 흐름을 포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이들 개념은 인터넷에서의 국가갈등을 민족주의라는 키워드로 분석하는 데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한다(류석진 외, 2013).

2. 국가 간 갈등과 민족주의의 상호작용 논의

여기서는 갈등의 개념 정의와 함께, 가장 높은 차원의 갈등인 국가 간 갈등과 민족주의의 상호작용에 대해 검토해 본다.

1) 갈등의 개념 정의

‘갈등(conflict)’에 대한 논의는 여러 학문 영역에서 다뤄져 왔고,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돼 왔다. 국제정치학에서는 ‘갈등’에 대해 심리적·사회적·정치적 측면에서 △개인 간, △개인과 집단 간, △집단 간, △개인과 국가 간, △집단과 국가 간, △국가와 국가 간의 상이한 이익과 목표에 연관된 선택 및 결정 과정에서 파생되는 부조화한 역학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갈등은 정치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내적 갈등(inner conflict)’과 ‘외적 갈등(outer conflict)’의 형태로 표출된다.

‘내적 갈등’이란 정치행위자의 본성을 구성하는 내적 요소인 심성, 견해, 태도 등의 충돌을 지칭하는 것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싶지만 행위주체가 지닌 일반 상식이나 사회 규범이 그 행위를 억제할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제정치학에서는 ‘내적 갈등’의 경우 게임이론 혹은 정책결정과정론 등과 같은 미시적 접근 방법을 통해 정치행위자의 심리구조 내의 갈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반면에, ‘외적 갈등’은 정치행위자들의 내적 갈등의 심화에 의해 ‘집합적 행위주체’의 의사결정이 마비되고, 이로써 파생되는 교차압력(cross pressure)이 집단적·지역적·국가적 통합을 제약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Azar, 1990). 국제정치학에서 ‘외적 갈등’은 국제체제론 혹은 국제관계론 등과 같은 거시적 접근방

법을 통해 정치행위자들 간에 발생하는 사회적 구조의 갈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여기서 가장 높은 차원의 갈등은 국가 간의 갈등상황이라 하겠다(박창건, 2008). 요컨대, ‘갈등’이란 ‘어떤 동기나 목표를 충족시키는 데에 필요한 구체적인 반응이 다른 하나의 동기나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반응과 양립될 수 없거나 조화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정치적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구영록, 1975).

2) 국가 간 갈등

왈츠(Waltz, 1959)는 ‘인간 자신(man himself)’, ‘개별국가의 성격(nature of individual state)’, ‘국제적 무정부상태(international anarchy)’라고 하는 3가지 차원의 상이한 설명군(sets of explanation)을 통해 전쟁의 원인을 갈등 발생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왈츠는 국가 간의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전쟁’이라고 하는 물리적 충돌로 발전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국가 간의 물리적 충돌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전쟁과 갈등의 개념적 상관관계라 하겠다(Barringer, 1972).

전쟁은 갈등의 확대 과정이 가속화돼 절정에 도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갈등이 확산돼 어느 분기점에 도달할 때 ‘분쟁(dispute)’의 단계에 돌입하고, 분쟁이 해소되지 못하고 확대되는 어느 시점에서 ‘전쟁(war)’이 유발된다. 따라서 국가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은 △정치행위의 축적에 의해 형성된 내적·외적 갈등의 상관관계, △갈등을 만들어내는 특수 이익집단의 성격, △사회적·정치적 좌절감의 대외적 전환, △국제체제의 구조적 특징을 동시에 고려해서 분석해야 한다.

도이취(K. Deutsch, 1968)는 ‘전략적 특징을 지닌 합리적 갈등(rational conflict)’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면서, 국가간의 갈등이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전개했다. 도이취에 따르면, 국가 간에 발생하는 갈등이란 자기통제(self-control)와 상호통제(mutual control)의 부조화에 따른 정치행위자 간 커뮤니케이션 부족에서 초래된다. 일반적으로 국가 간 갈등이 발생

하는 것은 정치적 측면에서 타국의 의사를 개조시키거나 그밖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도, 경제적 측면에서 부족하거나 희귀한 가치를 획득하려는 욕망, 사회적 측면에서 열등한 자(inferiors)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상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시도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 간 갈등은 하나의 행동 공간에 둘 이상의 정치행위자가 존재하고, 서로 작용-반작용(action-reaction)의 정치행동을 심화시킬 때 발생한다.

한편 볼딩(Boulding, 1965)에 의하면, 갈등이란 ‘정치행위자들 간의 경쟁 상황에서 발생하는 지각(perception)의 혼동상태’다. 특히 국가 간 갈등에서 표출되는 왜곡된 지각은 서로 다른 교육, 제도, 문화, 언론에 의한 상호 간의 거래 방식을 하나의 통합된 사회화로 발전시키기 못해서 발생하는 ‘투영된 영상(mirror images)’이다. 따라서 지각의 부조화는 상대적인 이미지의 왜곡을 증폭시키고, 갈등을 규범(norms)의 일환으로 확산시킨다. 여기서 ‘규범 확산(norms diffusion)’이란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국제적 규범(international norms)과 이전부터 존재하는 국내적 규범(domestic norms) 간의 갈등에서 파생되는 역동적인 변화가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는 전이과정을 말한다(Acharya, 2004). 이러한 전이과정이 국가 간의 갈등을 공개적인 갈등으로 가속화시킨다는 것이다.

리차드슨(Richardson, 1960)은 국가 간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작용-반작용’에 의한 상호작용으로 설명했다. 리차드슨에 의하면, 한 국가가 정치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경계심을 느끼게 되면 물리적인 방법으로 힘을 증강하게 되고, 다른 국가 역시 이러한 힘의 증강에 정치적 두려움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또 다시 물리적인 힘의 증강을 가속화함으로써 결국 작용-반작용에 의한 경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작용-반작용 모델은 지네스(Zinnes, 1976)와 글레이저(Glaser, 1997)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는데, 이들은 ‘나선형 모델(spiral model)’을 통해 국가간 갈등 확산을 이념의 정체성 상충, 정치행위자들 간의 이익 대립, 국제체제의 구조 변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했다. 한편 저비스(Jervis, 1976)는 국제관계에서 자국의 안보를 추구하고 경쟁국가 간 상호작용이 갈등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나선형 모델’로 설명하고 있다. 요컨대, 작용-반작용 모델은 국가

들 사이의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정치적 행위보다, 갈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분석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박창진, 2008).

국가 간의 갈등을 처리하는 방안으로는 △중재 △조정 △협상 △법적 해결 △비공식적 합의 △폭력 △국민투표 등이 있다. 강제적인 권위가 확립돼 있지 않은 국제체제에서는 갈등의 '제도화'⁷로써 해결책을 추구해 나가야 하는 데 여기에는 당사자들이 협동해 게임의 규칙과 같은 절차와 법을 형성해 나가야 함이 관건이 된다(구영록, 1975). 이러한 제도화를 통한 갈등 처리 과정에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 간 갈등과 민족주의가 상호작용하는 메커니즘을 객관적으로 명료하게 밝혀낸 연구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단지 민족주의가 국가 간 갈등의 직간접적인 원인이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추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국가 간 갈등과 민족주의의 상호작용 메커니즘의 규명이 어려운 것은 무엇보다 민족주의 개념의 다의성 내지 모호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족주의 개념 자체가 시대의 흐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진화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가 간 갈등도 단일 요인으로 발생하기보다 다양한 요인이 작용되면서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게 보통이다. 따라서 민족주의가 국가 간 갈등의 유일한 변수로 작용하는 경우가 드물게 된다. 그리고 민족주의가 국가 간 갈등의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이외의 요인들과 어떠한 관계와 비중으로 국가 간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내기도 쉽지 않다. 이를테면 석유자원이 매장된 해양의 경제획정을 두고 벌어지는 국가 간 갈등에서는 민족주의 요소 보다는 경제적 이익 추구가 더욱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왕왕 목격하게 된다. 이처럼 민족주의와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는 게 일반적인 국가 간 갈등의 양상이고 보면 민족주의 요인

⁷ 갈등의 제도화란 갈등의 조건, 행위자들이 갈등에 임할 때에 추구하는 목표와 그들의 힘, 행위자들의 상호의존성, 새로운 규범의 창조와 같은 변화를 다루기 위한 규칙화된 절차의 수립을 의미한다.

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금물이라 하겠다.

그리고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은 민족주의가 국가 간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일방향적인 인과관계를 상정하는 것은 자칫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국가 간 갈등이 수면 아래 잠복해 있는 민족주의의 뇌관을 건드리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제주도의 전설 속 이상향인 이어도를 둘러싼 한중 간의 해양경계 갈등은 중국 측으로 볼 때는 경제적·전략적 이익이 걸린 문제이겠지만 한국 국민, 특히 제주도민에게는 휘발성 강한 민족주의 정서를 환기시키게 된다. 여기서 민족주의는 국가 간 갈등에 의해 표출되는 결과물에 가깝게 되는 셈이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민족주의가 국가 간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인 동시에 국가 간 갈등이 민족주의를 강화시키는 경우이다. 영토문제로 불거진 민족주의가 국가 간 갈등에 동력을 제공하고 국가 간 갈등은 민족주의에 자양분을 제공하면서 상호 확대 재생산되는 에스컬레이트(escalate) 작용으로 강력한 시너지효과를 내는 사례도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Ⅲ. 한·중·일 3국 간 갈등의 현황

여기서는 한·중·일 3국 간 갈등들을 상대적으로 갈등의 강도가 높은 △영토·해양경계 갈등 △과거사 갈등 △안보·경제패권 갈등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살펴본다.

1. 영토·해양경계 갈등

1) 독도

일본의 우경화 질주로 인해 한일 양국 간에 그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독도는 한국의 울릉도와 일본의 오키섬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일본의 오키섬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세종실록지리지」 등의 고문헌에 ‘바람이 불고 날씨가 청명한 날 울릉도와 독도가 서로 잘 보인다’는 기록에 대해, 오늘날엔 두 섬이 서로 보이는 것을 찍은 사진 등으로도 당시의 인식이 정확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도 독도에 대한 한국 영유권을 부정하기 위해 일본 영토론자들은 심지어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 허황된 주장과 왜곡된 논리를 확대 재생산해 왔다.

독도는 15~16세기 「고려사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는 ‘우산도’란 이름으로 조선의 영토임을 명확히 한다. 17세기에 공도(空島)로 관리되던 울릉도에 도항한 안용복이 일본어부들과 벌인 영유권 논쟁을 계기로, 조선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우산도’가 조선영토라는 확답을 받는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가 강화된 상황에서 일본군함 니이타나호는 “울릉도 사람들이 ‘독도’라고 쓴(書)다”고 조사일지에 기록했다(신용하, 1996). 1906년 울릉군수 심홍택이 일본의 독도 불법편입 조치를 보고하자, 정부는 통감부에 즉각 항의해 독도가 고유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점되기 전까지 독도 영유권은 포기된 적이 없었고, 일본의 독도 침탈 의도에 대한 대응 또한 단호했다(최장근, 2011).

반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록한 고문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은 1905년 2월 독도가 ‘무주지’라서 국제법의 ‘선점이론’에 입각해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하지만, 1904년 독도에서 강치잡이하던 나카이 요사부로 등 일본 어민들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은 이 당시 무인도였던 독도를 은밀히 자국 영토로 편입해 러일전쟁 중에 망루를 설치해 무단 이용했을 뿐이다. 독도는 일본의 패전 후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에 의해 일본 영토에서 분리됐는데, 일본은 1905년의 독도편입이 합법이라고 주장했지만 연합국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비준으로 맥아더라인이 없어지면 일본인들이 독도에 몰려올 것을 우려해 1952년 1월 18일 평화선을 선포해 독도관리를 강화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독도를 1905년 시마네(島根)현에 편입된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결연히 물리치자 1952년 시마

네현 관리들이 불법으로 독도에 상륙해 조업 중이던 한국 어민들을 추방하려 했다. 이에 격분한 울릉도 어민들은 1953년부터 자발적으로 독도수비대를 편성하게 됐고, 정부는 독도에 한국영토 표지석을 세우고 무인등대를 유인등대로 대체했다. 그 후 1980년대에는 최종덕씨가 독도에 상주하는 첫 민간인이 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한국인 상주와 시설물 설치에 항의하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한 것이라고 줄곧 주장해 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과정에서 미국에 로비한 결과, 연합국측이 독도의 지위를 불분명하게 한 데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최장근, 2011).⁸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도발은 강도를 더해 왔지만, 독도의 실효적 지배론에 입각한 한국은 때로 임기응변적 대응을 보이기도 했다.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독도 방문이 대표적이다. 이는 한일 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면서 양국관계도 최악의 국면으로 이어졌다(김용복, 2013). 일본의 대응은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2013년 2월 내각에 ‘영토주권 대책 기획조정실’을 설치하고, ‘다케시마(竹島: 일본식 독도 표기)의 날’ 행사에 처음으로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을 참석시켰다. 급기야 일본 정부는 같은 해 8월 1일 자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63.1%에 달한다고 발표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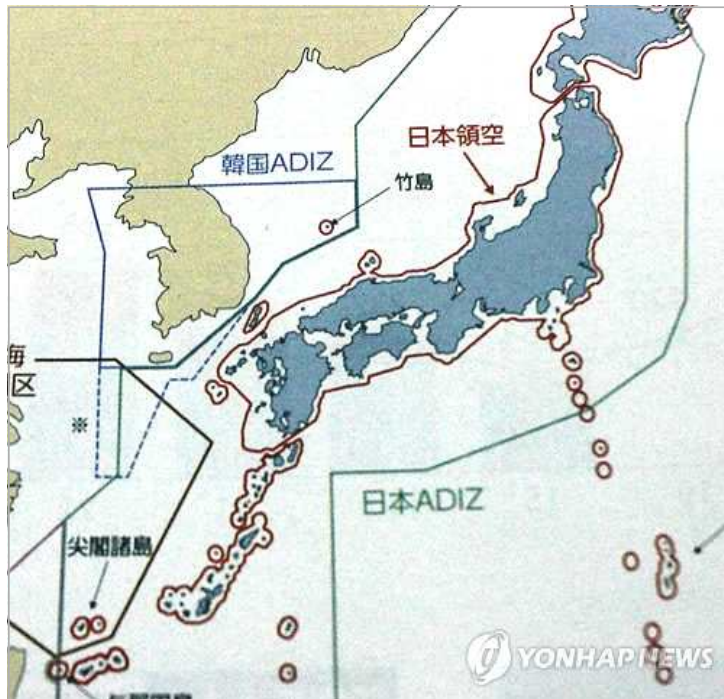
일본 정부는 2014년 4월 초등학교 5·6학년 사회과 교과서에 한국이 독도를

⁸ 나이토 세이추(内藤正中, 2009)는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 작성과정에 1947년 3월 20일의 1차 초안부터 1949년 11월 2일의 5차 초안까지는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했다. 그런데 1949년 12월 6차 초안에서 일본령으로 갑자기 바뀌었다. 7~9차까지는 독도를 취급하지 않았다. 6차 초안에서 일본령으로 취급된 것은 주일대표부 정치고문 시볼트(William J. Sebald)가 안전보장상 기상 및 레이더기지 설치를 위해 일본령으로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로비를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최장근, 2011).

⁹ 일본 내각부는 2013년 8월 1일 전국 성인 3,000명(1,784명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한 독도 관련 면접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케시마를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94.5%였다. 다케시마를 어떤 식으로 알고 있는지는 질문에 대한 복수 응답을 받은 결과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60.7%였다. 또 “현재도 한국이 불법 점령을 계속하고 있다”가 63.1%, “다케시마는 시마네현에 속한다”가 62.0%였다. 이번 조사는 내각 관방의 ‘영토주권 대책 기획조정실’이 2013년 6월에 실시했다(조선일보, 2013년 8월 2일 자).

불법점령하고 있다는 기술을 담은 김정 결과를 확정함으로써 장래의 한일관계에까지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은 또 2014년 4월 외교청서(외교백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명기했고, 같은 해 8월에는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방위백서를 10년째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아래 <그림 1>에서 보듯이 방공식별구역에 독도 상공을 일본의 영공으로 표시한 지도까지 추가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 침탈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연합뉴스, 2014년 8월 5일 자).

<그림 1> 2014년도 일본방위백서 지도



*출처: 연합뉴스, 2014년 8월 5일 자.

아베 총리는 2014년 1월 30일 참의원 본회의 답변을 통해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2014년 1월 30일 자). 그러나 일본 정부 스스로 ICJ에 제소하는 방식으로 독도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어려울 것임을 인정하는 문서를 1960년대에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연합뉴스 2014년 6월 10일 자).¹⁰

초기에 일본 정부의 독도 문제 대응 방침은 ICJ에서 해결하기보다는 미국의 협력을 얻어 풀어나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독도 문제에 대해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자 일본은 독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이 차선으로 강구하려고 했던 유엔 상정 방침 또한 미국의 자제 요청으로 무산됐다. 그러자 1954년 9월 이후 ICJ 제소를 주장했지만 한국 측의 거절로 더 이상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한 일본은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에서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 공문’ 형태로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여지를 남기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한국은 이 교환 공문을 둘러싼 교섭 과정에서 ‘양국 간 분쟁’에 독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게 해 향후 분쟁의 여지를 제거하고, 동시에 독도 현상 유지, 즉 한국의 독도 실효 지배를 변경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제거하도록 교섭에 임했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이원덕, 2012).

¹⁰ 일본 외무성 조약국 범규과가 1962년 7월 작성한 “일한 교섭관계 법률문제 조서집”은 “독도 문제”를 ICJ에 회부하는 절차에 관해 기술하면서 일본은 ICJ의 강제관할권을 인정하는 선언을 1958년 9월 15일에 했지만, 이는 마찬가지로 선언을 한 상대국에만 적용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한국이 ICJ에 가입하면서 강제관할권을 유보했기 때문에 한국이 동의하지 않는 사안에 관해 강제로 재판할 수 없다는 점을 의식한 설명이다. 일본 외무성은 또 한국이 선언하더라도 일본 측 선언이 선언일 이후에 발생한 사태나 분쟁에 관해서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도록 한정했기 때문에 독도가 이 선언에 따른 분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한국이 1952년 이승만 라인을 긋고 독도를 불법 점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ICJ의 강제관할권을 인정하는 선언이 이보다 늦게 이뤄졌기 때문에 강제 관할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인다. 결국 외무성은 이와 관련해 “독도 문제”를 ICJ에 넘기려면 한국이 ICJ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선언을 해야 하고 양국이 독도를 재판에 회부하는 것에 관한 특별합의를 해야 한다고 과제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작성 당시 극비 문서로 분류됐다가 나중에 비밀이 해제됐으며 1951~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 과정에서 작성한 외교 문서 중 상당수를 공개하라는 일본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3년 3월 공개됐다. 앞서 이케다 유키히코(池田田彦) 전 일본 외상이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총리가 한국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독도 영유권에 관해 ICJ에 제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은 이런 한계를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연합뉴스 2014년 6월 10일 자).

2) 센카쿠 열도

타이페이 북동쪽 120마일 지점에 위치한 8개의 무인도인 ‘센카쿠 열도(일본명: 尖角列島)/다오위다오(중국어명: 釣魚島)’에 대한 영유권 갈등은 중일 양국의 과거사와 결합돼 있다. 청일전쟁이 끝난 1895년 5월에 체결한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중국은 일본에게 대만과 부속도서를 빼앗겼다. 이때 중국은 센카쿠를 탈취 당했다고 주장하며, 카이로와 포츠담 정신에 의거해 일본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노획물로 빼앗긴 영토의 회복을 주장한다. 하지만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에 센카쿠가 명시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조약 협상 과정에서도 센카쿠가 논의된 적이 없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자국이 실효적 점유를 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는 청일전쟁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중일 간의 센카쿠 분쟁에는 미국이 깊숙이 관련돼 있다. 일본은 1951년에 미국과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을 인정받았다고 해석한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일본이 제국주의적 방식으로 침탈해 간 영토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부당하게 국제법적으로 정당화됐다고 주장한다(Gupta, 2010). 1960년에 체결된 미일방위조약은 제5조에서 방위동맹의 적용을 받는 지역은 일본의 행정통치를 받는 지역이며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다고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¹¹ 하지만 미국은 센카쿠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중립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상두, 2011).

냉전시대인 1980년대까지 센카쿠 영유권은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미·중·일은 소련에 대한 공동대응이라는 목표 하에 긴밀한 제휴를 했기 때문이다. 일본정부의 ‘조용한 외교’와 달리 일본의 우익단체 회원들은 1978년

¹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4년 4월 24일 일본 도쿄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센카쿠 열도가 미일안보조약 5조의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이 센카쿠 문제와 관련, 미일안보조약에 입각해 미국이 일본을 방위할 의무가 있다고 언명한 것은 처음이다. 일본은 그동안 센카쿠가 미일안보조약 5조 적용대상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표명해줄 것을 미국에 요구해 왔다. 오바마 대통령의 ‘센카쿠 발언’에 대해 중국은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소위 미일안보조약은 냉전시기의 산물로서 그것은 제3자를 겨냥할 수 없고 중국의 영토주권을 훼손해서도 안 된다”며 강력 반발했다(연합뉴스, 2014년 4월 24일 자).

에 중일평화우호조약이 체결되자 섬에 상륙하여 등대를 건설했다. 또한 이들은 1988년에 센카쿠 상륙 10주년을 기념해 새 등대를 건설하고 해상보안본부에 정식등록을 신청했지만 인가를 받지 못했다(최장근, 2006).

중일 양국 간에 충돌이 발생한 것은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의 조업과 에너지 자원 개발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었다. 1995년 말에 중국이 해양 탐사선과 석유 시추장비를 센카쿠 해역에 보내기 시작하자, 1996년 7월 일본 우익단체 회원 7명이 태풍으로 파손된 등대를 수리한다는 명분으로 섬에 상륙해 일본 국기를 게양했다. 이에 대만과 홍콩의 선박 50여척이 센카쿠로 몰려왔고 섬에 상륙해 중국과 대만국기를 게양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특히 1996년에 양국이 유엔해양법 협약을 비준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을 획정하면서 갈등이 격화되었다. 센카쿠 주변 해역에는 2천만 배럴의 석유와 175억 입방피트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일 양국은 해저 광물자원에 대한 개발권을 주장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광구를 설정하고 탐사에 나서게 된다. 특히 2003년 8월에 중국이 양국의 중간수역에서 가스전 개발을 시작했고, 이에 일본이 해저 지층을 조사한 결과 자국의 해저 매장 광물 자원이 도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개발중지를 요구해 마찰을 빚었다. 이런 가운데 2004년에는 중국 민간단체의 활동가들이 섬에 상륙했고, 중국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이에 대해 일본 중·참의원은 센카쿠 영토보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강력히 대응했다(손기섭, 2008).

센카쿠를 둘러싼 초기 갈등요인은 경제적 이득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여기에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경쟁이 추가됐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해안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했고, 그 결과 이 지역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달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날 중국 해군은 근해 적극 방어(anti-access/area denial)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게는 동중국해가 원유 수송과 교역에 필요한 해상교통로의 요충이다. 반면에 중국은 이 수송로를 가로지르는 태평양 진출로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2010년 9월 7일에 센카쿠 해역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간의 충돌사건이 양국 간에 국력대결로 비화됐던 데는 이러한 전략적 신경전이 배경에 깔

려 있었다. 중국 정부는 선장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미사일·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대일 수출을 중단했다. 전 세계 희토류의 93%를 생산하는 중국의 이러한 압박으로 일본은 선장을 구금한지 2주만에 석방함으로써 사태는 일단락됐다(고상두, 2011).

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조치는 대중국 저자세로 비춰져 칸 나오토 총리의 국내 지지 추락으로 이어졌다. 그 후 일본의 대응도 점점 수위가 높아져 2012년 9월 10일에 노다 총리는 센카쿠 열도에 대한 국유화를 선언했다. 2010년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의 충돌사건과 2012년 센카쿠 국유화를 거치며 영토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간의 대립은 건잡을 수 없이 확대돼 이제는 센카쿠 문제가 독도나 남쿠릴 열도(북방영토) 같은 여타 영토 문제를 완전히 압도하는 수준이 되었다. 중국은 센카쿠를 핵심적 이익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일본의 외교 정책 결정에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주목받는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국장(각료급)과 같은 핵심 관계자는 중국의 센카쿠 점거 시도에 대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배제하겠다는 각오를 갖지 않으면 ‘제2의 독도’가 돼 버린다면, 이러한 각오를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힌 데서 보듯이 일본은 단호한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서로 강경한 맞대응을 주고받는 긴장상태가 앞으로 도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강경대응을 부추기는 여론에 휩쓸려 일본 정부가 무리수를 두는 경우도 있어 더욱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2년 4월 동경도(東京都)가 센카쿠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해 국유화 논쟁에 불을 붙인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동경도 지사는 처음에는 정부가 매입하지 않으니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라도 매입해 센카쿠를 지키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일본 정부가 나서 국유화 조치를 취한 후 중국의 격렬한 반발로 중일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말을 바꿔 차라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매입하도록 내버려 뒀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노다 정권의 알뜰한 인기몰이였다고 국유화 조치를 비판했다. 망언을 일삼는 극우 정치인으로서 우경화의 상징적 인물인 이시하라의 센카쿠 국유화를 둘러싼 발언과 태도는 여론의 흐름에 따라 조변석개하는 정치적 포퓰리즘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조세영, 2014).¹²

3) 이어도

그동안 한중 간에 관할권을 놓고 갈등이 고조돼온 ‘이어도’ 문제는 유전 등 해저자원 부존 가능성이 높은 동중국해 대륙붕과 EEZ의 경계획정과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인 동시에, 동아시아 해역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무리한 주장을 펼치는 국제정치적 함의도 지닌 복합적 문제라 하겠다(진행남, 2012).

한국의 최남단 마라도로부터 남서쪽으로 80해리(1해리=1.852km), 즉 149km 떨어진 해역에 자리잡은 이어도는 동서 1.4km, 남북 1.8km에 이르는 타원형의 수중 암초로, 이어도의 정상은 해수면으로부터 4.6m 아래에 잠겨 있어 파도가 심할 때만 해수면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이어도로부터 가장 가까운 중국의 위산다오(余山島)까지는 155해리(287km)나 돼 마라도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다. 1900년 일본 큐슈에서 중국 상하이로 항해하다 이 수중 암초에 부딪친 영국 상선 ‘소코트라(Socotra)’호의 이름을 따서 국제해도에는 이어도를 ‘Socotra Rock(소코트라礁)’으로 표기하고 있다. 1951년 한국산악회와 우리 해군이 함정을 동원해 제주도민 사이에 전설로 내려오던 이어도를 탐사한 끝에 찾아내 ‘대한민국 영토 이어도’라고 새긴 동판을 가라앉혔다.

이어도는 수중 암초일 뿐, 유엔해양법협약 상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인 ‘섬’이 아니기 때문에 EEZ와 대륙붕을 갖지 못한다. 또 이어도는 밀물 때에도 수면위에 있는 ‘암석’이 아니기 때문에 12해리 영해나 24해리 접속수역도 설정할 수 없다. 요컨대, 이어도는 유엔해양법협약 상 섬이 아니기 때문에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영토 분쟁의 대상이 아니다. 단지 이어도 수역의 관

¹² 동경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매입보다 정부에 의한 국유화가 중국의 입장에서 훨씬 더 엄중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시하라가 센카쿠를 매입한 후 어선선박장 등 시설물을 설치해 문제를 야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부가 국유화하여 평온하게 관리하는 편이 나으며, 국유화의 목적은 현상변경이 아니라 현상유지에 있다고 중국 측에 사전 설명했다고 한다. 이러한 설명으로 중국이 납득하리라고 생각했다면 상황판단이 안이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센카쿠 국유화 방침에 대해 미 국무부의 클린턴 장관이나 캄벨 동아태차관보로부터 중국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유보적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일본 정부는 예정대로 국유화를 단행했다. 캄벨은 “(국유화 방침에 대해) 중국의 이해를 얻었다는 게 일본의 설명이었지만 나는 솔직히 그 말을 믿지 않았고 (일본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아사히신문, 2014년 1월 14일 자)고 언급했다(조세영, 2014).

할권을 놓고 한중 간에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향후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라 동중국해에서의 해양경계를 획정할 경우 이어도는 한국의 EEZ 내에 속하고, 또 자국의 EEZ에는 그 나라가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규정(유엔해양법협약 제56조, 제60조)을 근거로 2003년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준공했다(진행남,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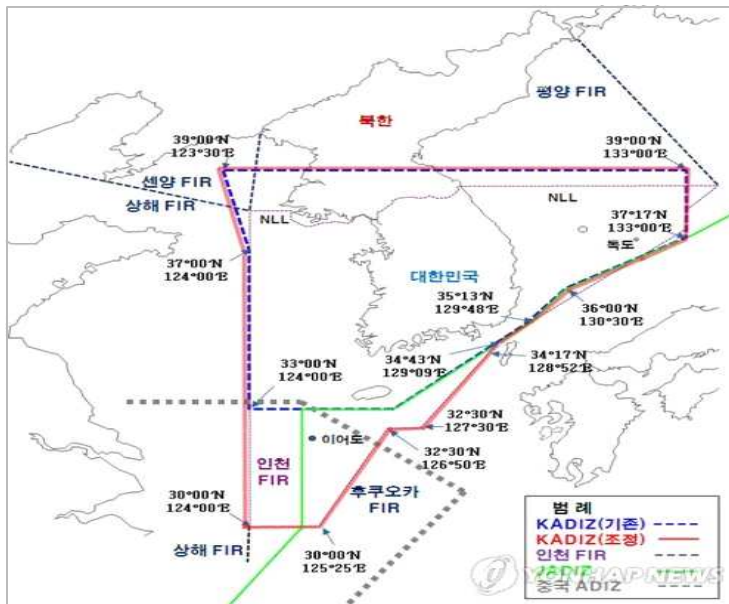
1969년 유엔 산하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는 “동중국해는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석유·천연가스의 매장 가능성이 있다”는 이른바 ‘에머리 보고서(Emery Report)’를 발표했다(구민교, 2011; 김영구, 1999).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1970년에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하고 그 시행령에 대륙붕 광구를 설정했는데, 이어도는 제4광구에 포함되었다. 한편 동중국해는 수심이 얇은 대륙붕으로 이뤄져 있어 중국 칭다오(靑島)의 북해 함대나 상하이 동해 함대의 경우 이어도 해역을 거치지 않고는 태평양으로 진출하기가 어려워 이어도는 군사 전략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김영구, 2008).

한국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에 나선 때부터 중국은 이의를 제기해 왔다. 2006년 9월 중국 외교부는 “쑤옌자오(蘇暗礁: 이어도의 중국명)는 섬이 아니라 수중 암초인데다가, 쑤옌자오가 속한 해역이 한중 양국의 EEZ가 중첩되는 곳이기 때문에 한국이 쑤옌자오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한 것은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다”며 항의했다. 또 2011년 6월에는 이어도 남서쪽 해상에 좌초한 석탄벌크선 ‘오리엔탈호프’호의 인양작업을 벌이던 한국 선박에 대해 중국은 관공선을 보내 작업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이에 한국 해경은 경비함을 급파해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중국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고 해 관공선을 돌려보내기도 했다(동아일보, 2011년 7월 27일 자). 또 2012년 3월 3일 중국 국가해양국은 이어도가 중국의 관할 해역에 들어 있다면서 감시선과 항공기를 동원해 정기 순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연합뉴스, 2012년 3월 10일 자).

특히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일본과 첨예한 갈등을 벌여온 중국은 2013년 11월 23일에 이어도 상공을 포함한 동중국해에 CADIZ(중국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KADIZ(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가 포함되지 않은 게 논란을 빚게 되자, 우리 정부는 2013년 12월 8일

KADIZ 확대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아래 <그림 2>에서 보듯이 이어도는 KADIZ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제주도 남단 KADIZ가 이어도 남쪽 236km 상공까지 확대되면서 우리 군의 식별과 탐지, 감시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한국군 당국은 이와 관련, 이어도 수역의 초계활동도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13년 12월 8일 자; 2013년 11월 23일 자).¹³

<그림 2> 한국의 새로운 방공식별구역 (KADIZ)



*출처: 연합뉴스, 2013년 12월 8일 자.

한국은 해양경계 획정에 있어서 ‘중간선(median line)’ 원칙에 따라 이어도가 한국의 EEZ에 속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중국 측과 해양경계 획정을 위해 그동안 10여 차례 협상을 벌여왔지만 아직 이렇다 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어도가 중국보다 우리 쪽에 훨씬 가까운 만큼 향후 중간선에 따라 해양경계 획정협상이 타결될 경우 이어도가 한국의 EEZ내로 편입될 것은 자명하다고 보고 있다(진행남, 2012).

¹³방공식별구역은 방공상의 목적으로 국가별로 영공 외곽 지역에 임의로 설정한 구역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자국의 육지영토가 자연적으로 연장된 대륙붕상에 이어도가 위치해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또 ‘형평의 원칙(equitable principles)’을 내세워, 해양경계 획정시 해안선의 길이와 국토면적, 인구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이어도가 자국의 관할 수역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학계는 서해와 동중국해 대륙붕의 상당 부분이 중국 내륙에서 흘러나와 퇴적된 실트(silt: 모래보다 잘지만 진흙보다 굵은 침적토)층이라며 한중 EEZ 경계를 이 ‘실트라인(silt line)’으로 획정할 것을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한국 측 제4광구와 제7광구 일부가 중국 측에 포함되게 돼, 중국의 실트라인 내에 속하는 이어도의 한국 관할은 부정된다(이어도연구회, 2011).

400해리 이상 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비교적 좁은 동중국해는 한·중·일 3국의 EEZ와 대륙붕이 중첩되는 수역이다. 따라서 한중 간 이어도 문제는 국제해양법적 쟁점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양경계 획정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국제 판례는, 동질적인 공유 대륙붕의 경계를 획정함에 있어서 해저의 지질학적 요소와 지구물리학적·지형학적 특징은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경향이 현저해 지고 있다. 즉, 폭이 400해리 미만인 해역에서는 단일 경계선인 잠정 중간선을 획정한 다음, 그것을 기준으로 관련 요소들을 고려하여 수정해 가는 방식으로 통합돼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이어도연구회, 2011). 국제해양법재판소는 2012년 3월 14일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 벵골만 해역에서의 해양경계 획정 사건 판결에서 이러한 잠정 중간선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어도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유리한 판례가 추가된 셈이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2).

한중 양국은 1996년부터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개최해 오고 있다. 그러나 2008년 12월까지 14차례 회담이 진행됐지만 양측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 부속서에서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조속히 가동한다”고 합의한 바 있어, 한국 정부는 이를 토대로 조속히 중국과 해양경계를 획정한다는 방침이다(연합뉴스, 2013년 12월 25일 자).

4) 해저자원 개발

약 240억톤의 석유와 1조4천억m³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동중국해에서는 해양경계 획정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해저자원 개발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1969년 ‘에머리 보고서(Emerly Report)’가 발표된 뒤 동북아 각국은 앞다퉈 동중국해 자원 개발을 위한 광구를 설정했다. 일본은 처음에는 동중국해의 복잡한 지질 구조와 중일 간 분쟁을 우려해 자국 내 민간기업의 석유가스 시굴을 허가하지 않았지만, 중국의 지속적인 동중국해 탐사와 개발이 상당한 진척을 보임에 따라 양국 간 갈등은 고조되기 시작했다(양희철, 2012; 김관원, 2012).

중국은 1998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법」을 제정해 동중국해 경계획정은 대륙붕 자연연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중간선에 따른 경계획정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은 2003년 8월 상하이 동쪽 약 350km 해역에 위치한 춘샤오(春曉; 일본명 시라카바·白樺) 석유가스전에 대해서는, 중일 간의 가상 중간선으로부터 중국 측으로 4.5km 떨어진 지점에서 개발에 착수했다. 이에 일본은 2004년 중간선 인근에서의 중국의 자원개발 행위가 ‘빨대효과’에 의해 자국 측 해역에 매장돼 있는 자원이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개발을 즉시 중지할 것과 함께 가스전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중국 측이 이를 거절하자 일본은 자국 기업의 동중국해 탐사 개발을 장려하기 시작했고, 2005년 7월 중국의 춘샤오 유전 남측에 위치한 3개 광구에 대한 민간기업의 탐사개발권을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의 이러한 행보는 중국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결과로 이어졌다.

중일 양국은 이로부터 2008년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동중국해 해양경계 획정과 공동개발을 포함해, 전반적인 갈등 완화를 위한 협상을 벌였다. 특히 2007년 11월 협상에서 일본은 동중국해 석유가스 자원에 대한 공동개발에 있어 자국이 주장하는 중간선을 중국이 인정할 것과 공동개발 범위에 중국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춘샤오 석유가스전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측이 주장한 합작 범위에 대해서는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

유로 거절했다. 양측은 이러한 입장 대립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협상을 장관급 회의로 격상시켰다(양희철, 2012).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양국 외교부는 2008년 6월 18일 동중국해 자원 공동개발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할 수 있었다. 합의문은 △중국의 가스전 룡징(龍井: 일본명 아스나로·翌檜) 주변 해역의 공동개발, △중국 국내법에 따른 일본기업의 춘샤오 유전 개발 참여 등으로 요약된다.¹⁴ 양국은 동중국해에서의 이러한 공동개발 협력이 ‘경제회정 문제 해결 전의 과도기적 합의’라는 점을 적시했다(양희철, 2012; 김관원, 2012).

2008년 6월 당시 양국은 춘샤오 가스전의 경우 구체적인 출자비율 등에 합의할 때까지는 개발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중국은 2009년 하반기 들어 단독으로 굴착 작업에 들어가자 일본 측이 강력 반발했다(연합뉴스, 2010년 2월 22일자). 이에 2010년 5월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일본 방문 시 양국은 공동개발을 위한 조약 체결 교섭에 들어가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7월 한 차례 회의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2010년 9월 센카쿠 열도 선박 충돌 사건 이후 양측 간 추가 협상은 중단됐다(매일경제, 2012년 3월 17일 자).¹⁵

이런 가운데, 중국은 동중국해 시후(西湖) 유전 내 핑후(平湖)와 찬쉐(殘雪) 등 2곳의 가스전 개발에 나섰다. 이들 가스전은 중일 중간선에서 서쪽으로 약 26km 떨어진 중국 측 해역에 있으며, 텐와이텐(天外天) 가스전에서는 북쪽으로

¹⁴ 합의문은 1. 중국의 가스전 ‘룡징(龍井; 일본명 아스나로·翌檜)’ 주변 해역에서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중일중간선’을 넘나드는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여 공동개발을 진행한다. 2. 일본은 중국이 이미 개발에 착수한 춘샤오(春曉, 일본명 시라카바·白樺) 가스전에 출자한다. 3. 그 밖의 중국 가스전인 ‘텐와이텐(天外天, 일본명 가시·檉), 뤄차오(斷橋, 일본명 구스노키·楠) 등의 주변해역에 대하여 쌍방은 계속 협상을 진행함과 아울러 경제회정은 잠시 보류한다. 중국의 춘샤오 가스전 개발문제에 대하여, 중일 쌍방은 일본 측이 출자하여 합작으로 개발하고 아울러 출자비율에 따라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다는 합의에 도달하였다(亞洲週刊, 2008년 7월 6일 자).

¹⁵ 특히 중국 군부는 동중국해 춘샤오 가스전 공동개발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나섰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정보화 전문위원회 주임으로 영토 문제와 해군 전략 수립을 담당하는 군 실력자인 인취 해군 소장은 2012년 3월 7일 아사히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춘샤오 가스전에 대해 “중국이 관할하는 해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본과 공동개발할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매일경제, 2012년 3월 7일 자).

약 33km 떨어져 있다. 일본 측은 동중국해의 경계선이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중국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그 중간선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연합뉴스, 2013년 7월 19일 자).

한편 2010년 9월 센카쿠 열도에서의 중일 선박의 충돌사건 직후, 중국 해군 동해함대 소속 구축함 2척이 춘샤오 가스전 해역에서 순찰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10년 9월 21일 자). 또 2013년 9월에는 중국 동해함대 소속 호위함이 가스전 보호 훈련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중국이 해군 주력함을 투입해 가스전 보호 훈련을 한 것은 분쟁 해역에서 에너지 개발권을 비타협적으로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연합뉴스, 2013년 9월 20일 자). 이에 일본은 2013년 11월 25일과 26일 동중국해 동경 125도30분(중일을 가르는 중간선) 동쪽 지역에 정찰기와 군함, 해상보안청 소속 대형 순시선, 어선들을 집결시켰다. 일본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후 동중국해 중간선 부근에 병력을 집중시키는 것은 중국의 공세강화에 맞서 이 선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2013년 11월 27일 자).

2. 과거사 갈등

1) 야스쿠니 신사 참배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본 국내에서의 정교분리 원칙을 둘러싼 논쟁은 물론, 한국·중국·대만 등 근린 아시아 국가들과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역사인식 문제, 식민지 출신자의 합사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해마다 8월이 되면 일본 총리나 각료 등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일본의 우파 정치인들은 근린 아시아에서의 참배 비판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하면서 심지어 일제의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박진우, 2014).

일본의 우파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하는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우선 가장 근원적인 문제로 근대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역사인식이 패전 이후에도 일관해서 존속돼 온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천황은 신의 자손이라는 고대신화로부터 근대의 황국사관으로 이어지는 사상사적 배경과 근대화 과정에서의 근린 아시아에 대한 우월감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둘째로 중요한 요인은 패전국 일본에 대한 미 점령군의 불철저한 전후처리로 인해 야스쿠니 신사가 패전 후에도 폐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종전 후 미 점령군은 정교분리의 원칙 아래 ‘신도지령(神道指令)’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일반의 종교법인으로 바꾸고 국가의 관리로부터 분리시켰다. 그러나 야스쿠니 신사를 존속시키고 침략전쟁에서의 전몰자를 ‘영령’으로 기리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시켰던 것이 그 후에 파생되는 갖가지 문제의 근원이 되었다.

셋째로 야스쿠니 신사의 존재는 근대 일본의 국가시스템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천황제가 패전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지 않은 사실과도 연관이 있다. 근대 일본에서 야스쿠니 신사는 천황을 위한 헌신적인 죽음을 현창하고 이를 통한 국민의 전의 고양과 전쟁 동원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다. 야스쿠니 신사와 천황제는 역사적으로 처음부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며, 그 어느 것도 패전 후 폐지되지 않고 온존한 것은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하겠다(박진우, 2014).

야스쿠니 참배가 동아시아 맥락에서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1959년에 B·C급 전범을 안장한 데 이어, 1978년에는 A급 전범 14명을 안장했기 때문이다. 또 야스쿠니 신사의 경내에 건립된 전쟁박물관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전쟁박물관은 근대 동아시아 역사에서 서구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탈에 대한 일본의 저항을 강조하고, 한국과 대만에 대한 식민통치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과 관련해서는 원폭투하를 강조해 일본을 전쟁 희생자로 미화하고 있다(조세영, 2014). 하지만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에만 주목한 채 맹목적인 반일감정에 편승해 야스쿠니를 비판하는 측면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야스쿠니 신사는 태평양전쟁뿐 아니라 근대 일본의 아시아 침략 과정에서 전사한 전몰자들도 합사하고 있는 곳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야스쿠니 신사와 한국의 역사적인 관계를 생각할 때 먼저 메이지 유신 과정에서 등장하는 ‘정한론’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근대국가 형성과, 조선에 대한 민족적 우월감을 근거로 하는 침략 야욕은 표리일체의 관계로 전개되고 있었고 ‘정한론’은 그 구체적인 표현이었다. 특기할 것은 근대 일본의 조선침략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강화도사건부터 한반도병합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는 조선인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전사한 일본인 병사들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돼 있다는 점이다.¹⁶ 이후 야스쿠니 신사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대외전쟁에서의 전사자를 합사하는 것을 본질적 기능으로 삼게 되었다. 말하자면 야스쿠니 신사는 메이지시대부터 대외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셈이다(박진우, 2014).

합사된 식민지 조선인의 분사 문제는 유족들의 소송으로 확대됐지만 오늘날까지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1945년까지 일본 군인과 군속의 신분으로 숨진 식민지 조선인 415명이 합사됐으며, 일본이 패전하고 조선이 독립한 후에도 전사한 시점에서는 ‘일본인’이었다는 이유로 1995년까지 총 21,181명의 합사가 이뤄졌다. 이는 곧 야스쿠니에 합사된 조선인은 죽어서도 여전히 대일본제국을 위해 희생된 ‘영령’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뜻해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는 굴욕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사자(死者)’에 대한 식민지 지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셈이라고 하겠다. 이처럼 일본은 식민지 출신자를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 합사하고 분사를 거부하는 한편, 한국이 독립됐다는 ‘국적조항’을 이유로 연금법과 원호법의 대상에서는 제외하는 모순된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남상구, 2005).

야스쿠니를 둘러싼 갈등은 2013년 12월 26일 아베 총리의 참배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 접어들었다. 중국은 과거 고이즈미 정권에 대해서 야스쿠니 참배를 이유로 5년간이나 정상회담을 거부(국제회의를 계기로 한 약식 정상회담은

¹⁶ 예를 들면, 강화도사건에서 죽은 1명의 일본인 병사가 그 이듬해에 야스쿠니 신사의 전신인 도쿄초혼사에 합사됐으며, 1879년 야스쿠니 신사로 개칭된 이후에는 1882년 임오군란에서 사망한 12명, 1884년의 갑신정변에서 사망한 6명의 일본인이 합사되었다(박진우, 2014).

제외)한 적도 있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정상회담의 거부를 넘어 외국 매체에 전방위적인 홍보 공세를 벌이는 등 국제적인 여론전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 강도를 볼 때 과거사를 둘러싼 중일 간의 마찰은 전례 없는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일본의 우파 정치인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 자신이 야스쿠니 참배에 관한 외부의 압력에 결코 굴복해서는 안된다는 경직된 인식을 갖고 있고, 대부분의 일본 국민은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강한 압력 때문에 총리가 참배를 중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는 고이즈미 정권이 이 점에서 흔들림이 없었던 것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극우파가 아니라 온건한 보수 세력조차도 역사 문제로 한국이나 중국이 강하게 나오는 것은 국민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국내사정 때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일본은 자신의 입장을 지키면서 상대방이 냉정함을 되찾기를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 관계자들 중에는 중일관계가 악화되었다고 하지만 중국도 일본과의 경제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중일관계가 그다지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든지, 한국이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계속 거부한다면 중일 정상회담을 먼저 추진할 것이라든지 하는 안이한 인식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조세영, 2014).

2) 교과서 왜곡

일본의 교과서 편찬은 검정제도로 운용되고 있다. 교육기본법과 학습지도요령 및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근거해 편찬한 교과서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검정을 실시해 이를 통과한 교과서만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교과서 편찬과 검정 과정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기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학습지도요령이다. 그러나 내각의 의결을 거쳐 문부과학성 고시로 관보에 게시되는 학습지도요령은 내용이 대단히 간결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실제의 교과서 편찬과 검정 및 교사의 수업에서 참조하기 위해 만든 것이 학습

지도요령 해설서다.

일본의 교육기본법은 아베 총리가 1차 집권할 때인 2006년 애국심과 향토애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60여년 만에 개정됐고, 이에 따라 중학교 학습지도요령과 그 해설서는 2008년에,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은 2009년에 개정 고시되었다. 이를 근거로 편찬된 교과서의 검정 결과가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공개됐다. 이로써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에 의한 일본 교과서 편찬은 일 단락됐다고 할 수 있다. 2012년과 2013년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의 민주당 정권 아래서 집필되었다(서현주, 2014).

그러나 2012년 12월 급진적인 보수우경화 성향의 아베 자민당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과거사를 부정하는 교과서 계약 움직임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우선 들 수 있는 것이 교과서 출판사 간부들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다. 일본의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3년 5월 28일 교과서 검정기준 개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자민당 작업팀 소속 의원 45명은, 채택률이 높은 3개 교과서 출판사(동경서적·실교출판·교육출판) 사장과 편집책임자를 당으로 불러 교과서 편집 방침을 물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서는 난징대학살과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 등에 대한 압박성 질문이 이어졌다는 것이다.¹⁷

자민당은 교과서 검정에 ‘학설로 확정된 사실 외에는 본문에 쓰지 못하게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해 난징대학살을 교과서 본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한국 등 침략 피해국의 심정을 배려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근린제국 조항’을 없애고, 각 교육위원회의 교과서 선택 기준과 검정위원 선정

¹⁷ 아사히신문은 작업팀 책임자인 하기우다 고이치 중의원 의원이 “교육기본법과 학습지도요령이 (애국심을 강조하는 쪽으로) 바뀐 만큼 교과서 기술도 변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더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들려 달라”고 말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여러 의원의 압박성 질문이 이어졌는데, 한 의원은 “난징사건(난징대학살)은 사건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을 포함해서 희생자 수를 두고 여러 주장이 있다. 왜 ‘십수만명’이나 ‘30만명’이라는 주장만 소개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다른 한 의원은 “위안부에 대해 옛 일본군의 강제성을 시사하는 강한 표현을 포함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독도 문제 등을 두고도 “경위 설명이 부족하다”거나 “편향됐다”는 압박성 발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기우다 의원은 모임 뒤 취재진에게 “(학습)지도요령의 범위를 좁히면 (교과서) 서술을 고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출판사 간부들은 한결같이 굳은 표정으로 현장을 떠났으며, 취재진의 질문에는 “노코멘트”라며 입을 다물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한겨레신문, 2013년 5월 31일 자).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한겨레신문, 2013년 5월 31일 자). 교과서 출판사 사장과 편집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이른바 ‘자주 규제’로 일본군 ‘위안부’와 난징대학살 등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술을 약화·삭제시키는 한편, 교과서 검정 제도의 개편 등을 통해 교과서를 왜곡·개악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민당의 교육재생실행본부 산하 교과서 검정제도특별위원회는 2013년 6월 ‘확정된 견해가 없는 역사적 사건을 확정적으로 기술하지 않을 것과 여러 설이 있는 사항은 다수설과 소수설을 균형 있게 다룰 것’ 등을 요구하는 중간보고서를 아베 총리에게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20일 발표된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공약 해설집인 종합정책집에도 연구상 사실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은 기본적으로 본문에서 취급하지 않고, 참고자료 등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특정의 학설만을 기재하지 않으며, 수치 등의 근거를 제시하는 등 발본적 개혁을 추진할 것과 ‘근린제국 조항’ 수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영토·주권·역사 문제에 관한 연구기관을 신설해 그 연구를 활용해서 각종 전후보상 재판과 ‘위안부’ 문제의 언설 등에서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부당한 주장에 대해 정확한 반론과 반증을 실시한다는 것이다(연합뉴스, 2013년 7월 3일 자). 요컨대, 과거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가 야기한 참상을 약화·희석시키거나 배제하는 쪽으로 교과서 내용을 고치기 위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하겠다(서현주, 2014).

3) 일본군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간에 이슈로 떠오른지 20여년이 흘렀지만, 이를 둘러싼 양국 정부와 국민의 인식차는 근래에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2011년 12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양측의 의견차가 극명하게 드러나더니, 2012년 12월 아베 신조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그동안 미흡하나마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해온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인 ‘고노 담화’¹⁸의 수

¹⁸ 1993년 8월 4일 일본 정부는 1991년 12월부터 진행해온 위안부 관계 자료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내각 관방장관이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고노 담화’라고 부른다.

정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양국 간 갈등의 파고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인류 보편적 인권 문제이자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주요 현안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양국 정치지도자와 외교당국의 마찰이 대중의 민족주의적 열기와 상승작용을 함으로써 한 일관계를 수교 이래 최악의 국면으로 몰아넣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성격과 일본 군·정부와의 관계 등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는 학자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위안부’ 제도는 본질적으로 여성들의 의사에 반해 일본 병사들의 성 상대가 될 것을 강요한 ‘성노예제’로서, 일본군 스스로 이 제도를 만들고 운영했다는 사실이 피해자와 일본군 병사 등 관련자 증언과 일본 군·정부의 공문서 등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조사 결과의 상당부분은 이미 1990년대 초에 일본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져 ‘고노 담화’ 등에 반영됐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도 ‘상식’으로 정착돼 왔다(서현주, 2014).

이를테면,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 제출 보고서에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 Coomaraswamy) 여성폭력 문제 특별보고관은 일본군 ‘위안부’를 군사적 성노예로 규정하고, 위안소의 설치·징집·운영은 국제조약 및 국제인도법에 반하기 때문에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한다고 보고했다. 또 1998년 1월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된 「국가에 의한 폭력 보고서」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 정부에 의한 국가폭력으로, 전시 중에 자행된 성폭행은 국제법과 국제관습법, 그리고 국제법정에서 채택한 현장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이상희, 2009). 이런 가운데 미 하원은 2007년 7월 ‘위안부’ 제도가 일본 정부에 의한 강제 군대매춘이며 20세기 최대 인신매매 사례에 포함된다면서, 일본 정부는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위안부’로 알려진 젊은 여성들을 강제로 성노예로 만든 사실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공식 인정·사과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유엔의 움직임은 최근 들어 더욱 활발해지고 강력해지고 있다. 2014년 7월 24일 유엔 시민적·정치적권리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유엔 인권협약기구와 유엔 인권이사회 등을 관장하는 나비 필레이(N.

Pillay)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2014년 8월 6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공평하며 영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2014년 8월 29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시도를 규탄하고, 가해자들을 처벌하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연합뉴스, 2014년 8월 30일 자; 8월 6일 자; 7월 25일 자).

고노 장관은 1993년 발표한 담화를 통해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운영됐던 것으로, 위안소의 설치와 관리 내지 ‘위안부’의 이송에 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위안부’ 모집은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맡았지만, 그 경우에도 감언·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됐던 사례가 많았고, 관현 등이 이에 직접 가담한 일도 있었음이 분명해졌다”는 등 동원·사역에서의 강제를 인정하고 문제의 본질이 중대한 인권침해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 담화는 주체와 주어를 약간 애매하게 처리해 ‘위안부’의 동원 및 위안소 제도의 운영주체가 민간업자로 오해될 소지를 남긴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역대 일본 정부는 이러한 ‘고노 담화’를 공식입장으로 표명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부는 최근 들어 ‘고노 담화’가 한일 양국의 외교적 타협의 산물인 양 흠집을 내면서 희석시키는데 이어, 새로운 담화 발표를 통해 ‘고노 담화’를 폐기하려는 수순에 들어감으로써 ‘위안부’ 문제 해결을 바라는 국제사회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서슴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부터 ‘고노 담화’ 수정을 시사했다. 그 후 줄곧 “고노 담화 발표 때까지 정부가 발 견한 자료 중에는 군과 관현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나타내는 기술을 찾을 수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강제의 본질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 즉 군과 관현에 의한 강제연행만을 강제로 이해하는 아베 총리와는 달리,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행위가 강제이며, 연행 시점의 강제보다는 위안소에서의 강제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더욱이 일본 정부의 강제연행을 직접 기술한 자료가 없다는 주장을 뒤엎는 증거문헌도 잇달아 나왔다. 2013년 4월 일본 참의원의 가미 도모코(紙智子) 의원

은 일본 법무성이 보관하고 있다가 1999년에 국립공문서관으로 이관된 도쿄재판 관계 문서 중에 군과 관현이 ‘위안부’ 피해 여성을 강제 연행한 증거 서류, 즉 중국 구이린(桂林)과 인도네시아에서 일본군 병사들이 중국과 인도네시아 여성들을 강제로 ‘위안부’로 삼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또 일본 중의원의 아카미네 세이켄(赤嶺政賢) 의원도 ‘바타비아(Batavia) 임시군 법회의 기록’에 따르면 일본군이 자바섬 스라랑 등의 억류소에 수용돼 있던 네덜란드인 여성들을 위안소로 연행해 숙박시키고 위협 등으로 매춘을 강요했다고 명기돼 있다고 반박했다(서현주, 2014).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14년 6월 20일 ‘고노 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 정부간의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결론을 담은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중의원 예산위원회 이사회에 보고한 A4용지 21쪽 분량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보고서(제목: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한 간의 협의 경위-고노 담화 작성으로부터 아시아여성기금까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¹⁹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금번 검증 목적이 담화 작성 경위만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것일 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를 다시 밝히려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실제 검증 결과는 사실관계를 호도함으로써 고노 담화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외교부는 “고노 담화는 일본 정부가 자체적인 조사와 판단을 기초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담아 발표한 일본 정부의 문서”라며 “우리 정부는 진상 규명은 양국 간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견지했으며, 일본 측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던 것 뿐”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열여섯 분 피해자 할머니들의 살아있는 생생한 증언이야말로 일본군

¹⁹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보고서는 군위안부 모집의 주체와 관련, ‘군 또는 군의 지시를 받은 업자’로 표기하자는 한국의 의견과 ‘군이 아닌 군의 의향을 수용한 업자’로 하자는 일본의 의견이 대립했으나 결국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를 모집 주체로 표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위안소가 ‘군의 요청’에 의해 설치됐다는 내용도 한국과의 조율을 거친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군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명시하라는 한국 측 의향을 바탕으로 담화에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反)하여 (모집이) 이뤄졌다”는 문구가 들어가게 됐다고 적었다(연합뉴스, 2014년 6월 20일 자).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그 어느 문건보다도 강력하고 분명한 증거 “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2014년 6월 20일 자).

한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에 대해 “강제동원된 위안부는 일본 군국주의가 2차대전 기간에 아시아 등 피해국 국민에게 저지른 엄중한 반인도주의 죄행으로 이에 대한 증거는 명백하다”면서, “일본의 소위 ‘조사’란 것은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고 심지어 침략 죄행의 진실을 미화하고 부인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일본의 역사 눈가리기’라는 제목의 2014년 6월 22일 자 사설에서 일본에 과거를 고쳐 쓰려 하지 말라며 ‘고노 담화’ 검증을 비판하는 사실을 실었다. NYT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고노 담화’ 검증을 지시해 전쟁 피해자를 부당하게 대하는 한편, 편협한 민족주의적 정치집단에 영합해 일본에 해를 끼쳤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 간 관계에서, 특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라면 협의는 필수적(crucial)이고 대화가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한국인들에게 이번 검증 보고서는 일본이 사과를 진지하게 여긴 적이 없었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2014년 6월 23일 자).

4) 동북공정

한중 간에 전례가 드문 역사갈등을 초래하면서 민족주의적 열기를 한껏 고조시킨 ‘동북공정’은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중국변강사지연구센터’가 동북변강지역의 역사와 현실의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2002년에 시작한 국가비준 프로젝트다.²⁰ 동북공정은 2000년부터 준비에 착수해 2002년 2월 28일 공식적으로 출범했으며 2007년 2월까지 진행된 한시적 사업이었다.²¹ 이 연구에 대한 조직적

²⁰ 중국에서 ‘변강’은 정치·지리적 개념으로 사용된다. 변강은 육지 국경과 해양 국경 내부의 일정한 지역,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데 중국에서의 육지 변강은 헤이룽장(黑龍江), 지린(吉林), 랴오닝(遼寧), 간수(甘肅), 윈난(雲南), 내이멍구(內蒙古), 신장(新疆), 시짱(西藏), 광시(廣西) 등이다. 그러나 변강 연구는 단순히 변강지역의 제 문제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대외관계 혹은 내부의 정치적 문제와 모종의 관련성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이희옥, 2007).

²¹ 그러나 중국변강사지연구센터는 국가적 차원의 11차 5개년 계획(2006~2010) 사업의 일환으

책임은 국무원 산하 연구기구인 중국사회과학원이 맡았고, 변강센터가 실무를 담당했다. 여기에 동북3성의 당위원회, 지방 연구기관과 유관 대학 등이 조직적으로 참여했으며, 소요 예산규모는 1,500만 위안(한화 약 25억원) 정도였다(이희옥, 2005; 이희옥, 2007).

동북공정의 연구영역은 중국의 강역이론 연구, 동북지방사 연구, 동북민족사 연구, 고조선-고구려-발해사 연구, 한중관계사 연구, 중국 동북국경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 관계사 연구, 한반도 정세변화와 중국 동북국경지역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전통적인 한국 역사 또는 한반도와 관련된 부분이 이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동북공정의 목표는 동북지역에 존재했던 역사를 체계적으로 중국사에 편입시킨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북공정은 이처럼 기존의 역사를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재구성하고 역사 문제와 현실 문제를 뒤섞는 역사 인식으로 인해 한국 역사학계와 시민사회의 격렬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이희옥, 2005). 서부 변강지역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이 한족의 대규모 식민을 통한 한화(漢化)의 촉진이라는 민족정책을 내포하고 있는데 비해, 동북지역은 동북공정이라는 역사공정을 통해 이 지역에 대한 중화민족의 역사주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셈이다(임지현, 2004).

고구려 및 발해 정권은 중국의 변강민족이 수립한 지방정권이기 때문에 한(韓)민족 정권이 될 수 없다는 점이 동북공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즉, 고구려 정권은 “남하한 부여족 일파와 서한(西漢) 고구려현의 기타 민족이 공동으로 수립한 정권”으로, “초기에 서한 한사군의 직접적인 관할 하에 있었고”, “고구려의 활동 지역이 중국 역대 왕조의 통치 지구였기 때문에 당조(唐朝)가 고구려를 ‘통일’시켰다”는 것이다. 한편, 발해의 인종적 기원을 말갈족으로 하여, 기존의 고구려족이라는 설을 부정함으로써 한민족과의 연계를 차단하고 발해는 중국 영토였고 당(唐)에 조공을 바쳤으며 발해 관리는 당으로부터 임명받았다고 주장한다(윤휘탁, 2006).

로 동북공정을 이어갔다. 한편 일부 연구자들은 중앙에서의 동북공정이 종료되면서 지방수준에서 본격적으로 동북공정의 결과물을 출판하면서 역사왜곡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한다(이희옥, 2007).

동북공정은 남북한에서 고조선·고구려·발해사를 한국사(혹은 조선사)의 일환으로 서술하는 논리를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반박하여 이들 역사가 중국사의 일환임을 강변할 수 있는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이 논리를 조선족 사회에 주입시켜 그들의 민족 정체성의 혼란을 예방하고 중화민족 논리를 재확립하고 강화하는 동시에, 향후 한반도 정세 변화 및 이에 수반될 동북아 국제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동북공정은 현대 중국의 민족이나 영토, 역사적 귀속성에 대한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전제한 것으로,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이라는 한족 위주의 대중화(大中華)주의의 민족의식을 동북지역의 상고사에 투영한 결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동북공정은 우선, 국경에 근거한 영토 관념은 근대의 산물인 바, 중국 정부는 영토의 역사성을 도외시한 채 현재의 영토를 기준으로 고대 민족을 중화민족으로 강변하는 것이다. 둘째, 책봉-조공관계를 근거로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 왕조에 예속된 지방정권이라고 한다면 백제·신라·일본·베트남 심지어 고려나 조선까지도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규정돼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셋째, 중국이 주장하는 ‘지방정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문제를 안고 있으며 고구려나 발해는 독자정권으로서의 요소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다. 중국 정부의 중앙-지방정권의 구도는 현재적 관점이 투영된 자의적 개념에 불과하다. 넷째,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중국에서 출판된 저명한 역사학자들의 저서나 역사 교과서는 고구려사를 한국사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다수 중국 인민은 고구려에 대한 역사적 계승의식이 거의 없다(윤휘탁, 2006). 동북공정이 지닌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한중 간에 외교갈등이 나타났고, 언론의 보도태도에 따라 이러한 갈등은 보다 증폭되고 정치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한국 언론이 동북공정 문제를 처음 보도한 것은 고구려사 왜곡이 본격화되던 2003년이였다.²² 이는 한국 내 민족주의 열기를 고조시켰고, 당시 정부도 대중의 여론을 수용하면서 역사와

²² 중앙일보(2003년 7월 14일 자)의 첫 보도는 고구려사 유적이 분포된 지역의 유적관리비용과 건설비용을 포함해 5년간 약 200억 위안(3조원)이라며 고구려사 왜곡에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 것으로 과대해석하기도 했다(이희욱, 2007).

학술문제는 한중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됐다.²³ 그러나 2006년 9월 북한의 미사 일발사와 북핵위기로 한중협력이 본격화되면서 동북공정 이슈는 수면 아래로 잠복했다. 동북공정 문제가 한중 외교현안으로 재등장한 것은 2006년에 연구 결과물이 출판되면서부터였다.²⁴ 이 시기의 주된 쟁점은 2004년 양국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역사왜곡’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면 동북공정은 한국 언론의 보도 → 한국 내 민족주의 여론의 환기 → 한국 정치권의 자의적 해석 및 수용²⁵ → 외교 문제화 →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경로를 밟아왔다(이희옥, 2007).

한국과는 달리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 냉정하고 신중하게 접근해 왔다. 동북공정에 대한 한국의 비판은 과도한 민족주의적 정서에 기대고 있었고, 중국의 복잡하고 타산적인 의도를 지나치게 단순한 잣대로 재단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중국은 동북진흥의 일환으로 동북변경에 대한 역사연구를 시작했고 동북공정은 새로운 상황변화에 따라 국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어적 측면’이 있다. 또 고구려사 왜곡 문제는 중앙의 치밀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지방 역사학자들의 주장을 중앙이 수동적으로 수용한 측면도 있다면, 외교적 대응방식도 재발방지와 중앙의 지방기구 통제와 역사왜곡의 교과서 반

²³ 그 결과 2004년 3월에는 우리 정부가 출연한 ‘고구려연구재단’이 출범했고, 외교문제로 비화된 한중 간 견해차는 중국의 고위급 인사(중국정치협상회의 주석 자칭린,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 등)의 방문을 계기로 2004년 8월 23일, 5개항의 구두합의를 통해 일단락됐다. 5개항의 구두합의는 ①고구려 문제에 대해 양국간 중대 현안문제로 대두된 것에 대해 중국이 유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 ②양국은 역사문제로 인해 한중간 우호협력관계 손상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③양측은 한중협력 관계라는 큰 틀 안에서 고구려사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도모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해 고구려사 문제가 ‘정치화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④중국 측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고구려사 관련 기술에 대한 한국 측의 관심에 이해를 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감으로써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⑤양측은 학술교류의 조속 개최를 위해 노력하며, 학술교류가 양국 국민의 우애와 이해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한겨레신문, 2004년 8월 25일 자)는 것이다(이희옥, 2007).

²⁴ 2006년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센터가 펴낸 5권의 연구 성과물에는 한국 학계가 인정하지 않는 기자 조선을 등장시켰고, 발해에 대해선 중국 지방정권의 하나라고 분석했으며, 한강 유역까지 고대 중국의 영토였다는 연구도 있었다(SBS 8시 뉴스, 2006년 9월 5일 자).

²⁵ 한국 정치권에서는 여야 합의로 ‘고구려사 왜곡 및 역사 편입 시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그 결과 당시 여야의 정치적 대립 속에서도 2006년 8월, 고구려연구재단을 흡수해 재조직한 ‘동북아역사재단’을 출범시킬 수 있었다(이희옥, 2007).

영을 방지하는 현실적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이희옥, 2007).

3. 안보·경제패권 갈등

1) 군사전략적 갈등

중국은 자국의 긴 해안선을 방어하기 위한 바다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자유롭게 군사작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양 해군력을 기반으로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중국이 최근 빈번하게 제기하는 센카쿠 열도 영유권 주장은 중국 해군의 이러한 압력이 한몫을 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 해군의 근해 적극방어 전략이 미 해군에 대한 견제라고 간주한다. 즉, 대만 급변사태시 동아시아 주둔 미군 증강병력이 중국 연안 해역으로 오는 것을 막는 전략이라고 보는 것이다. 중국의 해양 팽창 전략은 주변국들과의 도서분쟁을 불가피하게 한다(고상두, 2011).

특히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은 미국과 일본의 군사협력 강화라는 역풍을 초래했다. 2010년 9월 7일 센카쿠 해역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한 사건은 일본이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 사건이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면서 일본이 미일동맹의 가치를 실감했기 때문이다.

센카쿠 충돌사건의 배경에는 동아시아를 둘러싼 미중 간의 대립이 자리잡고 있다. 지역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동아시아의 경찰관을 자임했던 미국의 지역패권이 쇠퇴하고 있다고 본다(Fillingham, 2010). 이에 중국은 천안함사건 이후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군사 훈련을 하는 것에 반발했고, 냉전 시대에 미일동맹의 방어지역이었던 동중국해를 자국의 핵심이익 지대로 선언해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다. 반면에 미국은 중국이 영토분쟁을 통해 전략적 팽창을 시도한다고 우려한다.

센카쿠 문제에 대한 과거 중국의 전략은 점진적 접근이었다. 중국은 센카쿠에 대한 영유권을 부단하게 제기해 서서히 분쟁지역화 한다는 전략이었지만, 센카쿠

충돌사건으로 중국의 부상이 이웃국가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평화 외교노선이 신뢰를 잃음으로써 큰 손실을 입었다. 영토분쟁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살펴보면 센카쿠 분쟁이 무력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중국은 1974년부터 2000년까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문제로 주변국과 13차례의 무력충돌을 벌였다. 더구나 중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경쟁관계였고, 오늘날 양국은 역사상 드물게 동시에 강대한 세력으로 대결하는 형국이다(고상두, 2011).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은 중일 간 갈등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미일안보조약에 근거해 미군의 개입여지를 안고 있어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전후 동아시아질서를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이끌어 온 미국으로서 영토 문제로 인해 일본과 갈등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처럼 센카쿠 열도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미일 양국의 중국 견제전략의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센카쿠 열도 분쟁은 중·일·미의 복합적인 이해와 관련된 첨예한 국제정치적 갈등의 구조를 지닌다고 하겠다(김용복, 2013).

한편 안보 측면에서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적극적 해양 진출에 대처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중일 간의 마찰과 대립은 상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중국위협론은 일본 내 보수우파뿐만 아니라, 중도와 진보 진영에도 폭넓게 공유돼 있다. 즉,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의 상대적 역학관계가 변화하는 가운데, 기존의 힘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일본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별로 없는 셈이다.

자민당에 비해 중도·진보적 색채가 강했던 민주당 정권(2009년 9월~2012년 12월)도 중국에 대한 안보정책은 종래의 기초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때로는 자민당에 못지않은 강경함을 보이기도 했다.²⁶ 2010년 12월 민주당 정권은 자민당 시절 마련된 ‘방위계획대강’을 6년만에 개정했는데,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²⁶ 2010년 5월 경주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민주당 대표를 지낸 오카다 가쓰야 외무상이 중일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이 5대 핵보유국 가운데 유일하게 핵무기를 증강하는 나라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핵무기를 감축하거나 최소한 현상을 유지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한데 이어, 이례적으로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또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자, 이에 반발한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과 고성인 오가는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동아일보, 2010년 5월 17일 자).

위해 남서부의 해상 및 공중 감시 능력을 강화하고 도서지역에 대한 대비에 중점을 두는 ‘동적방위력’ 구상을 새롭게 내세웠다. 또한 2010년 센카쿠 충돌사건이 발생하자, 민주당 정권은 마에하라 세이지 국토교통상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오랜 관례를 깨고 중국인 선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었다(조세영, 2014).

최근 중일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킨 센카쿠 국유화 조치를 단행한 것도 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총리였다. 민주당 정권은 총리와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등 역사 문제에서는 중도·진보적 성향이었고, 마에하라 등 지한파 정치인들은 과거사 반성이나 일본군 위안부 등 전후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이었지만,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단호한 자세를 보였다. 따라서 굳이 일본의 우경화 현상을 이유로 들지 않아도 안보 분야에서는 중일 간의 대립 요인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안보적 위협에 대해 미일동맹의 강화로 대처한다는 점에는 일본 국내의 의견이 대부분 일치돼 있다. 하지만, 일본에는 미국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급속히 성장한 중국의 위상을 감안할 때, 과연 미국이 결정적인 순간에 중국과의 충돌을 무릅쓰면서까지 일본을 지켜 주겠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의구심은 1972년의 소위 ‘닉슨 쇼크’ 이래 뿌리 깊은 것이다.²⁷ 더욱 구체적으로는 미국이 오키나와의 기지와 군사능력을 팜으로 후퇴시키고 ‘제2열도선’ 내에서의 중국 해군의 우위성을 인정함으로써 태평양해역의 세력범위를 미중 간에 나누어 갖는다면, 일본은 중국과의 대결구도 속에서 미국으로부터 방기되지 않는더라도 소홀히 취급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2013년 11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해 미국이 초반의 단호한 자세와는 달리, 민간 항공사의 중국에 대한 비행계획 통보를 용인하는 입장을 취한 것도 일본의 이러한 뿌리 깊은 의구심을 자극했다.

민주당 정권에서 외무상까지 역임한 마에하라도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

²⁷ 일본의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자신의 저서에서 ‘지금 일본 국민은 전쟁에 연루될 공포는 그다지 강하게 갖고 있지 않지만, 중도에서 우파까지 미국으로부터 방기될지 모른다는 공포는 가지고 있다’고 언급할 정도다(조세영, 2014).

하고 있으며, 한발 더 나아가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킨다”는 자세로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관계를 바로잡아야 하고, 중국의 급속한 국력 신장 추세 속에서 장차 일본이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확실히 갖추어 줄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은 유사시 미국이 개입을 주저하는 경우에도 독자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다. 일본의 현실주의자들이 안보의 기축은 미일동맹이라는 대전제를 훼손시키거나 불필요하게 공세적인 정책을 취하지는 않겠지만, 자립적 안보능력의 확보라는 중장기적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긴장과 마찰이 고조될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과거에도 종종 그랬듯이 상황에 따라서는 사회 일각에서 핵무장 주장이 대두되기도 할 것이다(조세영, 2014).

2) 경제패권 갈등

동아시아 지역의 갈등구조 가운데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 및 대립구조이다. 미국과 중국이 경제와 안보의 차원에서 협력과 경쟁 사이를 오고갈 때, 동아시아국가들이 중립적인 위치에 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는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 참여 논란만 봐도 알 수 있다. TPP 참여 문제는 동아시아 지역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미중 간 경쟁이 본격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우리 정부도 최종 방침을 정하지 않았지만, TPP 협상 타결 이후 협정 발표 이전에 가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14년 9월 22일 자).²⁸

미국의 TPP 추진 전략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던 동아시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국의 대 아시아 경제패권 추구를 견제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기

²⁸ 12개 TPP 참여국의 인구는 총 7억8천만명,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26조6천억달러, 무역규모는 10조2천억달러에 달한다. 명목 GDP는 전세계 GDP의 38%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최대의 지역경제권이 된다.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전문가인 제프리 쇼트 피터슨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한국은 가급적 빨리 TPP에 가입해야 한다”며 “그러나 선행조건인 일본과의 협상이 여의치 못하다면 협정서명 이후 발효 이전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도 현재 12개국이 진행 중인 TPP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5년 상반기에서부터 협정이 공식발효되는 시점인 2016년 사이의 일정시점에 TPP에 가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14년 9월 22일 자).

반으로 한다(최원기, 2010). 미국은 TPP 참가국들과 ‘경제동맹’을 강화하고 이를 외교·안보 협력체로 공고화함으로써 아시아지역에서 경제·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봉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 4월 TPP 참여를 공식 선언한 아베 총리의 외교 노선은 미일동맹의 강화와 ‘강한 일본’ 정책으로 요약된다. 이는 방위력 강화와 강한 경제의 재생을 추구하는 동시에 광범위한 분야에서 미일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TPP 참여는 이러한 정책기조 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안보 논리를 강조하는 일본의 TPP 참여론은 미일동맹 강화론과 중국전제론으로 이어진다. 결국 일본 정부는 TPP가 부상하는 중국을 봉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TPP 참여 논란은 미중 경쟁 구도에서 일본이 어느 한쪽에 설 수밖에 없는 동아시아의 역학구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김용복, 2013).

한국과 중국은 2014년 11월 10일 FTA를 타결함으로써 앞으로 양국 간 명실상부한 ‘경제동맹’ 효과를 기대하게 됐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각종 경제 기구 구성을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려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1월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21개 APEC 회원국 전체가 참여하는 경제통합 모델인 FTAAP(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실현을 강조하면서 “FTAAP 실현을 위한 로드맵 채택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주도하는 FTAAP는 미국이 적극 추진하는 TPP에 대항하는 성격이 짙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우리 정부는 TPP 참여 의사는 밝혔지만 가입 여부는 미정인 상태다. 그래서 박 대통령의 FTAAP 지지 의사 표명이 한중 FTA 타결과 맞물려 한국의 경제적 대중국 편중화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²⁹ 마치 미중의 아태지역 경제 패권 다툼에서 한국이 중국 손을 들어준 것처럼 비칠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조선일보, 2014년 11월 12일 자).

²⁹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지지한 로드맵에는 TPP 체결 노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며 “FTAAP 자체가 TPP를 포괄하는 큰 틀의 FTA이기 때문에 중국 편을 든 게 아니다”고 했다. 중국 주도의 FTAAP와 미국 주도의 TPP를 모두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도 했다(조선일보, 2014년 11월 12일 자).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4년 11월 10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AIIB(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 참여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AIIB는 미일 주도의 ADB(아시아개발은행) 등에 맞서 중국이 역내 경제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기구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반대’ 입장 속에서 AIIB 가입을 저울질하는 상황이다(조선일보, 2014년 11월 11일 자).

IV. 한·중·일 민족주의의 부상 배경 및 특성

1. 동북아에서의 민족주의의 부상 배경

동북아시아의 근대는 유럽적 근대의 팽창이라는 외부 충격의 작용으로 전개되었다. 왕조체제와 농업문명의 동북아 국가들은 강제 개국에 따라 새로운 문명과 국제질서에 적응하기 위한 개혁이 불가피했다. 동북아 주요국들의 개국에서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기간은 전통적 질서의 해체, 근대화 개혁 시도의 성공과 좌절, 역내 국가 간의 지배와 피지배, 패권과 저항이라는 역사의 불균형 구조가 심화된 시기였다. 일본은 유럽식 제국주의로 변신한 반면에, 한국(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중국은 유럽과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탈에 의한 반식민지로 전락했다. 특히 일본의 선국민국가화와 제국주의화는 동아시아의 근대사를 유럽의 충격에 더해 일본의 충격이라는 이중의 충격구조 속에 몰아넣었다. 1930년대 이후의 동아시아는 일본이 주창한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침략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전쟁과 항전, 수탈과 피수탈의 극단에 빠져들었다가 1945년 일본의 태평양전쟁 패전으로 그 구조가 해체된다(조성환, 2005).

그러나 동아시아적 근대의 해체는 내인적 추동력 보다는 미국의 등장으로 인한 외발적 규정력이 크게 작용한 결과였다. 한·중·일 3국의 현대사는 예외 없이 냉전체제와 구조적인 연관을 맺고 전개되었다. 한국의 건국과 발전 과정은 그 자체가 냉전의 발단과 고정화였으며, 중국의 건국과 사회주의적 체제이행 역시 냉전의 규정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일본 또한 패전에 의한 국가해체의 위기

로부터 ‘평화헌법’을 조건으로 독립을 부여받음으로써 냉전에 의해 국가성격이 결정되었다. 냉전시기에 한·중·일 3국의 국가성격은 자율적이기 보다는 냉전이라는 국제체제에 의해 압도적인 영향을 받았던 셈이다.

1989년 부시-고르바초프의 냉전종식 선언은 유럽에서는 동서독의 통일로, 구소련에서는 공산당과 연방의 해체로 귀착됐다.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탈사회주의 민주화와 시장화 체제이전이 가속화됨으로써 1990년대에 들어서면 유럽은 1947년 이래의 냉전질서가 완전히 종식되게 된다. 이에 비해 동북아의 탈냉전은 유럽에 견주면 부분적이고 비대칭적인 것으로, 이 지역에서의 구소련의 영향력이 후퇴하는데 머물렀을 뿐이다. 한반도는 분단 상태로 남아 있고, 중국은 시장화 체제이행이 가속화됐지만 여전히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으며, 한미·미일 동맹, 북중 동맹 등 냉전기의 동맹구조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1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바야흐로 미중 양강 구도로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즉, 21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인 힘의 저하 속에서도 여전히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 빠른 속도로 강대국으로 대두하고 있는 중국, 양국 중심으로 새롭게 짜여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0년의 2분기 통계에 따르면 국민총생산(GDP) 규모에서 중국이 일본을 앞지르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이는 거시적으로 보면 중국이 120년 전 청일 전쟁에 패배한 이래 일본을 경제 규모에서 앞지른 매우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장기적인 세계사의 관점에서 보면 19세기 후반과 20세기에 걸친 150년이라는 기간은 어쩌면 예외의 시대였는지도 모른다. 이 예외의 시대 150년간 중국은 근대화에 실패하여 세계 열강국가에게 굴종을 강요당하며 강대국의 지위를 박탈당한 반면, 일본은 20세기의 전반기에는 군사대국으로, 그 후반기에는 경제대국으로서 위용을 떨쳤다(이원덕, 2014).

19세기 이래 일본은 국가전략의 핵심개념으로 탈아입구론을 제창했지만 150년간의 예외의 시대에 종말이 다가옴에 따라 아시아로의 회귀를 신중하게 모색하기 시작했다. 2009년 일본에서의 민주당 정권의 출현은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 정권의 아시아 중시 정책은 이러한 동

아시아 국제질서의 근본적인 변화에 적응하려는 현실주의적 노선 전환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1세기 일본은 심각한 재정적자, 성장동력의 상대적 상실, 고령화·저출산으로 상징되는 인구 구조의 변화 속에서 힘의 상대적 저하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본은 예외의 150년을 경과하여 본래의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가운데 2000년대 후반부터 동북아 지역의 국제체제는 큰 지각변동을 맞이하게 됐다. 이른바 국제정치이론에서 말하는 ‘힘의 전이’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강대국으로서의 급부상과 일본의 상대적 힘의 쇠퇴 그리고 한국의 미들 파워로서의 등장이 그것이다. 바야흐로 동북아 지역에서 서서히 등장하고 있는 미중 양강 구도는 한일관계의 성격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어떤 의미에서 2012년 이후 격심한 한일, 중일 간의 대립과 마찰이 벌어진 것은 동북아지역의 세력전이 현상과 더불어 한·중·일 각국에서 일어난 정권교체가 동시 진행하면서 나타난 이른바 세력균형의 유동화에서 그 구조적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이원덕, 2014).

이처럼 냉전의 양극구조가 탈냉전의 다극구조로 탈바꿈하는 가운데 21세기 동북아는 더욱 복합적인 변환을 겪고 있다고 하겠다. 국가 간 관계의 차원에서도 국익에 따른 복잡한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동맹·연합·적대 관계에도 적잖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말하자면, 21세기의 동북아는 세계화·정보화·민주화의 거대 조류를 타고 보다 근본적인 변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이숙중, 2009).

이러한 가운데 동북아 국가들에서는 각기 다른 형태로 부상한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아시아의 새로운 세력 경쟁 판도는 남북한과 양안관계 등 분단 문제, 센카쿠 열도를 비롯한 영토분쟁, 과거사 문제 등과 얽히면서 역내 국가들 간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히 동아시아 탈냉전 질서의 비대칭성이라는 외적 요인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주요국 내부의 민족적 에너지가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북아에서는 냉전종식과 함께 냉전질서가 규정했던 국가의 구조와 체제의 성격을 바꿔 나가려는 개별 국가의 움직임이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의 저변에는

냉전질서가 압도하고 잠재화시켰던 한·중·일 각국 특유의 민족주의가 재활성화 되는 흐름이 작용하고 있다. 탈냉전과 더불어 동북아 3국에서는 각기 고유의 역사적 맥락과 정치적 이유가 개재된 새로운 민족주의가 분출되기 시작한 것이다(조성환, 2005).

뿐만 아니라 한·중·일의 국내정치적·경제적 상황은 3국의 민족주의가 강력한 동원의 이데올로기로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고 있다. 한·중·일 3국 간 민족주의의 충돌은 서로가 상대방을 타자화·배제·배척하는 적대적 관계인 동시에, 서로의 생존을 지탱시켜 주는 내연의 공조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적대적 공조관계 속에서 3국의 민족주의는 서로 국내정치적 입지를 강화시켜 주면서 갈등과 대립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하겠다(배궁찬, 2006).

2. 한국 민족주의의 부상 배경 및 특성

한국 민족의 형성에 대해서 학계는 여러 논쟁에도 불구하고, 기원전 10세기를 전후로 해서 예(濊)·맥(貊)·한(韓) 등의 족(族)이 등장하면서 시발을 이뤘다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거의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예·맥·한의 출현이 외부로부터 이동된 사람들에 의해 발단된 것인지, 아니면 신석기시대 주민이 농경화한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의견대립이 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이 한국 민족형성의 중심에 있다는 견해도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노태돈, 1991).

그러나 한국 민족은 고조선 멸망 이후 나타난 부여·옥저·고구려·삼한 등 여러 원시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여러 소단위 민족들로 융합되어 갔지만, 이들 사이에 동족의식은 희박했던 것으로 보인다. 단지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에 의해 통합된 이래 삼국인에 공통된 일통삼한(一統三韓)이라는 동족의식이 확산됐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근대 민족 형성은 nation이라기 보다는 ethnies의 측면이 농후하지만 근대 이후의 민족국가-국민국가(nation-state) 건설과정에서 출현한 nation과 강한 연관관계를 통한 연결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이완범, 2006).

한국 민족은 지리적으로 한반도라는 공간에서 동일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며 동일한 언어와 유사한 문화를 지녀왔다. 한국 민족주의의 기원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지만, 서구에서 말하는 근대적 창조물로서의 민족주의의 등장 이전부터 ‘생존적·실존적 차원’에서 외부 세계와 구분되는 영토적 범위와 내부적 동질성(identity)을 유지해 왔던 셈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민족주의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일본 식민지 지배의 경험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 기간 동안 당한 ‘이민족’으로부터의 억압과 차별, 일본 문화와 언어의 강요 등으로 한국 민족주의는 서구적 민족주의의 등장 경로와는 다른 차원에서 전개돼 왔다. 서구의 민족주의가 근대국가 형성, 봉건적·종교적 공동체로부터의 탈피 등 새로운 정치 공동체 형성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면, 한국 민족주의는 저항적 속성을 가지면서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식민 지배와 관련된 민족주의적 대응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혈연적·역사적인 고유성을 중시하며 일본과의 ‘다름’을 강조하는 배타적인 속성을 강하게 나타냈던 것이다(강원택, 2008).

하지만 독립운동 세력들은 일본에 배타적이었지만 중국과 미국 등의 연합국과는 연대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항하고 투쟁했다고 해서 외국세력에 모두 배타적이었다고 평가될 수는 없다. 따라서 독립운동 과정에서의 민족주의는 ‘저항적 민족주의’이면서도 동시에 ‘방어적 민족주의’였으며 서구인들이 두려워하는 공격적이며 급진적인 민족주의는 결코 아니었다. 민족자결과 호혜평등, 민주주의를 주창했던 독립운동 과정에서의 민족주의는 침략, 지배, 패권을 추구하는 제국주의적 침략 민족주의에 저항했을 뿐이었다(이완범, 2006).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이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이 두 사안이 모두 영토 주권의 상실이라든지 식민 지배의 정당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기반을 둔 ‘저항적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반향이 크게 나타나는 셈이다. 더욱이 이러한 갈등의 반복적 재현은 일본에 대한 ‘저항적 민족주의’를 끊임없이 재생산해 젊은 세대에게 대물림하게 한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일

본과의 관계는 이러한 식민 시대의 역사적 기억에 기초한 민족주의에 여전히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일본에 대한 ‘저항적 민족주의’는 한국 사회에서 보수·진보의 구분 없이 수용되고 있어서 별다른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강원택, 2008).

또 다른 형태의 민족주의는 남북한 분단과 한국전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남북한 분단과 한국전쟁을 둘러싸고 형성된 민족주의 논쟁의 핵심은 민족의 분열을 가져온 분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족주의적 관점은 대체로 진보 진영에 의해 주도됐다. 이에 따르면, 민족국가 건설은 해방 이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일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함으로써 분단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민족국가의 건설이 지연됐다는 주장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단정(單政) 결정 역시 분단체제로 이끌게 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었고, 이에 비해 분단고착이라는 이유로 제헌선거에 불참한 김구는 추앙받을만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수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진보 진영의 민족주의는 동조할 수 없는 것이었다. 보수 진영에서는 진보 진영의 이같은 민족주의를 통일지상주의로 강하게 비판해 왔다. 냉전체제에서 미국을 배제한 ‘자주적 통일’은 곧 북한식 체제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민족 내부의 결속과 번영을 결코 약속할 수 없는 것이었다. 보수의 입장에서 볼 때 민족통합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통일의 형태, 즉 어떤 체제로 통합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통일이 안 되는 것은 바로 북한 공산주의 체제 때문이다. 체제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해 이들에게 북한은 통합의 대상이기 이전에 타도돼야 할 대상이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족통일을 위한 올바른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우방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존재와 민족주의는 보수 진영에게 전혀 모순되지 않는 것이다. 보수 세력의 3.1절 기념집회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함께 게양되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인식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박정희의 통치시기를 거치면서 또 다른 특성이 포함되었다. 박정희 집권기에 민족주의는 우선 정치적 동원을 위한 수사로 활용됐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되는 박정희 시대의 ‘국민교육현장’이 말해주듯, 민족은 근대화를 위한 동원의 주요한 수단이었

다. 그리고 민족주의는 정치적 측면보다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생존권 형성, 즉 경제발전과 근대화의 논리로 이어지게 된다(강원택, 2008).

1987년의 민주화와 1990년대 초의 냉전 붕괴 등 국내외 정세변화는 한국 민족주의의 핵심 담론이던 반공·친미주의에 변화를 추동했다. 대북 교류가 차단됐던 권위주의 시기의 통일인식은 민족 동질성에 기초한 감성적이고 당위적인 것이었다. 민주화 직후 전개된 통일운동과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남북교류는 북한에 대한 호기심과 호의를 유발하기도 했지만, 북한의 후진성은 호감도를 떨어뜨리고 이질성을 확인시키면서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높여 대북 인식을 현실적이고 소극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됐다. 북한의 핵개발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은 대북정서를 크게 악화시켰다. 냉전기 특수한 한미관계로 인해 ‘숭미(崇美)’라고 할 정도로 친미적이었던 한국인의 대미관은 1980년 광주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반미정서가 처음 등장했고,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등은 반미의식을 확산시켰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과 중국의 부상, 일본의 우경화 등은 한국의 안보상 미국의 필요성을 인정케 함으로써 현실주의적 대미관으로 바뀌어갔다.

한국 민족주의의 주요 특징인 순혈주의적 단일민족 관념도 1990년대 이후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자, 조선족, 북한이탈주민의 대량 유입으로 인해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 중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1987년 민주화가 불러온 ‘노동자 대투쟁’으로 말미암은 결과다. 즉, ‘노동자 대투쟁’은 노동자의 임금 상승과 권익 향상으로 이어져, 한국 노동자들은 더 이상 3D 업종에서 일하려 하지 않았고, 이에 3D 업종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소수 화교를 제외하고 외국인과 살아본 경험이 없던 한국인은 외국인 노동자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편견을 드러냈다. 이는 단일민족 관념이 지닌 배타성을 보여준다. 그 후 장기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특히 2000년대 들어 결혼 이주자가 대거 유입되면서, 한국 사회는 단일민족 관념을 넘어서 다문화 담론을 통해 외국인을 포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외국인에 대한 배타성은 약화됐지만, 단일민족 관념이 해체될 정도는 아니다.

한민족이지만 장기간 역사적으로 단절됐던 조선족은 처음 호기심과 관심의

대상이었지만, 그 수가 늘고 주로 한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에 종사하면서 동정 내지 무시의 대상이 됐다. 이는 재미·재일 교포에 대한 인식과는 다른 것으로 조선족의 유입은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인의 위계적 인식을 잘 보여준다. 즉, 한국인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를 그들의 형성 역사와 출신국의 경제적 위상에 따라 차별한다는 점이다. 이는 한민족은 모두 하나라는 단일민족 관념의 동질성이 지닌 허구성을 드러낸다. 또 2000년대 이후 목숨을 걸고 탈출해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북한이탈주민도 처음에는 한국인의 관심 내지 동정의 대상이 됐다. 그러나 그 수가 크게 증가하고 이질성이 확인되면서 한국인은 점차 그들과 거리를 두었다. 북한이탈주민의 등장 역시 단일민족 관념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결국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족주의에서 반공이나 통일지상주의, 친미에 기초한 당위적 인식은 현실주의적으로 변화했다. 반면에 단일민족 관념은 외국인·재외동포·북한이탈주민의 유입 과정에서 그 허구성을 노정했지만 아직도 한국인의 의식에서 지배적 위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보편적 민주주의와 인권의식의 확산,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주자를 필요로 하는 한국 사회의 구조로 인해 점차 혈통적인 단일민족 관념은 약화되고 시민권적인 국민 개념의 범주는 개방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전재호, 2012).

3. 중국 민족주의의 부상 배경 및 특성

중국의 민족주의는 19세기 아편전쟁 이후 서양·일본과의 투쟁 과정에서 형성됐다. 특히 제국주의 일본이 중국 민족주의 형성에 큰 역할을 했다. 이처럼 근대 외세의 침탈이라는 역사적 경험에서 생겨난 중국의 민족주의는 기본적으로 주권과 영토의 보전이라는 개념과 결합된 상징 가치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역사에서 이처럼 긍정적 가치를 부여받으며 생성된 민족주의는 중국 공산당에 의해 그 효용성이 재조명되면서 중요한 사회통합 이념으로 부상했다. 즉, 민족주의가 개혁개방으로 쇠락하게 된 사회주의를 보완하는 이념으로 새롭게 대두된 것이다. 개혁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사회주의 정치 이념은 갈수록 경

제 현실과 유리돼 갔다. 특히 국유기업의 민영화, 관료의 부패, 소득격차의 확대, 인플레이션, 실업의 증가 등은 사회주의적 가치에 어긋나는 현상들로서 1989년 천안문사건 발생의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천안문사건 이후 중국에서는 장쩌민의 주도 아래 애국주의 캠페인이 전개됐는데, 이 캠페인은 중국의 굴욕적인 과거사를 재부각시켜 중국민족을 구원한 공산당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과거의 민족주의는 사회주의가 배격하던 부르주아 민족주의였다면, 오늘날 새롭게 대두된 민족주의는 사회주의 정권에 의해 재조명되고 활용되는 민족주의인 셈이다(고상두, 2011).

또 동구 및 소련의 붕괴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을 뒷받침해 왔던 사회주의 이념은 그 위상이 크게 추락했다. 이에 중국 공산당은 새로운 정당성의 원천을 민족주의에서 찾았다. 중국이 탈사회주의적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경제적으로는 고도성장을 이뤘지만 과거 사회주의 이념이 발휘하던 사회통합 기능이 약화되면서 국민을 하나로 결속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치체계를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과거 중국의 민족주의가 주권수호를 위한 이념이었다면, 새로운 민족주의는 사회결속 기능을 위해 생겨났다. 특히 반일주의에 대한 호소는 결속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중국의 민족주의는 다민족 국가라는 특성 때문에 종족성보다 영토성과 문화성을 강조한다. 국가분열을 막고 중국 국민을 결속시키기 위해 하나의 영토와 문화를 강조하는 것이다. 먼저 영토성의 관점에서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의 반환 이후 대만·남사군도·센카쿠 등에 대한 영토 주권을 제기하는 고토 회복주의를 주창한다. 또한 티베트·신장 등지의 소수민족 분리주의 운동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하고, 동북지역의 영토 주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동북공정’을 강행했다. 센카쿠 분쟁에서 중국 정부가 보여주는 강경한 태도는 중국 내부의 분리주의자와 대만의 독립주의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³⁰

³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센카쿠에 대해 중국과 대만이 함께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그 주장의 함의에는 차이가 있다. 대만이 민족 자존심과 영토보전의 차원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중국은 그러한 명분뿐만 아니라 센카쿠는 대만의 일부로서 중국의 영토이며, 센카쿠의 영토주권을 회복하는 것은 대만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Pan, 2007).

문화적 차원에서 중국 문명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문화민족 개념을 내세우는 ‘중화(中華)민족주의’는 국내적으로는 소수민족을 포괄하는 문화공동체를 뜻하며, 국외적으로는 화교사회로까지 확대되는 생활공동체를 의미한다(조성환, 2005). 중국에는 다양한 종족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분리주의 성향을 가진 종족적 민족주의를 억제하기 위해 종족적 편향성을 가진 한족민족주의 대신에 중화민족주의를 표방해 소수민족을 포용하려는 것이다.

중국에서 이처럼 새로운 민족주의가 부상한 것은 19세기와 유사하게 중국이 주변세계와 충돌하면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하겠다. 첫째, 중국과 대만의 관계다. 중국에게 대만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내전인 셈이다. 이는 서구와 일본 제국주의의 간섭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대만 통일이 민족 과업이며, 민족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과제인 것이다. 둘째, 중국과 일본의 관계다. 일본의 침략사는 중국인의 근대 민족주의 의식형성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중국 정부가 그것을 정치적으로 자주 활용함으로써 일본과의 관계는 중국에서 민족주의를 강화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 셋째, 중국과 국제사회의 관계다. 중국의 민족주의는 태생적으로 반서구주의다. 하지만 1980년대 중국 지식인들 간에는 중국 사회의 발전모델로서 서구사회에 큰 관심을 가졌다. 천안문사건은 대학생들이 제기한 서구식 자유주의 개혁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억압적 대응이었다. 그 결과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아시아적 가치를 내세우면서, 서구식 발전모델을 비판하고 중국식 발전모델을 주창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고상두, 2011).

중국 민족주의는 이러한 천안문사건 이후 공식 이데올로기가 현저하게 약화된 상황에서 사회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하나의 ‘출구전략(exit strategy)’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 민족주의는 경향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고 하겠다. 첫째, ‘강한 국가’에 대한 열망이 민족주의를 통해 표출되고 있다. 개혁개방 과정에서 국가권력이 약화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사회적 공공성을 확대하고 재증양회를 통해 ‘강한 국가’를 건설하자는 논의가 확대되었다(이희옥, 2009).

둘째, 대중 민족주의의 수용과 배제이다. 중국의 민족주의 활용은 ‘양날의 칼’과 같다. 민족주의는 사회주의체제의 정당성의 위기를 보완하거나 유예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약화시키거나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인터넷 공간에서 성장하고 있는 대중 민족주의의 급진화는 위로부터의 기획의 결과라기보다는 무정형적이고 때때로 공격적인 특징을 띠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국가의 태도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당정은 민족주의의 위험성에 주목해 그것이 외부세계에 대한 적대성에 기초하기 보다는 문화적 가치, 사회주의적 도덕성, 경제발전을 위한 민족 응집력을 강화하는 데에 기능하도록 유도하면서 민족주의 담론과 운동의 급진화 모두를 우려하고 이 과정에 개입하기도 했다.

셋째, 중화의 가치를 메타이론으로 발전시켜 사회주의가 민족주의와 결합하고 있다는 모순적 문제 설정을 피하고자 했다. 이런 점에서 1990년대의 민족주의의 발전은 과거 중화제국의 부활이라기보다는 민족과 국가를 하나의 문화적 유기체로 간주하고 민족과 문화가 하나의 차원 높은 중화의 가치를 위해 존재한다는 문화민족주의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후진타오 체제가 ‘중화의 위대한 복원’을 최상위의 국가목표로 설정한 것도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추구하는 것을 중국 민족주의의 상위개념에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이희옥, 2009).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2년 11월 29일 ‘중국의 꿈(中國夢)’ 연설에서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화된 사회주의 현대국가”를 수립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세계일보, 2012년 11월 30일 자). 시진핑 시대에 중국은 경제발전뿐 아니라 사회발전과 정치발전도 함께 이룩해야 한다. 게다가 미국과 함께 세계를 경영하는 G2로서의 책임도 다해야 한다. 이러한 ‘중국의 꿈’을 추구하는 것 역시 중국 민족주의의 상위개념에 두고 있다고 하겠다.

넷째, 중국 민족주의는 여전히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 무엇보다 56개의 민족이 공존하는 현실적 조건과 민족동화 정책의 일정한 성과를 고려할 때, 인종적 민족주의나 한족 중심주의(Han chauvinism) 대신 중화민족에 기초한 대민족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 민족주의는 우리(we-ness)와 타자(they-ness)를 구분하는 감정(xenophobic passion)에 근거하고 있지만, ‘우리’

라는 긍정적인(affirmative) 요소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중국 내부에 여전히 많은 병목현상이 남아 있고, 중국 스스로도 강대국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제사회에 형성돼 있는 중국위협론을 불식하기 위한 의도와 관련이 있다. 중국이 평화부상론을, ‘부상’이 주는 민감성을 고려해 평화발전론으로 바꾼 것이나, 미중관계의 안정을 외교정책의 핵심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인식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중국 민족주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보완이라는 맥락에서 국가주도의 성격이 있고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는 차원에서는 실용적 성격이 강하다. 또 중국 민족주의는 여전히 강대국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방어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한편, 새로운 제국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중화의 가치와 사회주의를 결합하는 애국주의와 문화민족주의의 특징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이희옥, 2009).

한편 중국의 동북공정은 체제전환기 중국의 변강 민족의 정체성 위기에 대한 예방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중국 정부의 ‘방어적 민족주의’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동북공정은 현재의 중국 정부의 민족주의적 동원의 필요성에 의해 과거를 작위적으로 해석하는 ‘이고위금(以古爲今)’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급조한 정치사관에 근거하고 있다. 아울러 동북공정은 “현재의 중국 영토 내에서 각 민족이 이루어낸 역사적 활동은 모두 중국사”라는 영토 지상주의적 역사 인식에 근거하여 영토주권과 역사주권의 동일화를 인위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이다(윤휘탁, 2006). 중국 정부의 영토 지상주의적 역사인식은 중국 내 변강 민족의 정체성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남북한 등 주변 국가의 역사주권과 심대한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의 동북공정은 근린국가와의 민족주의적 갈등을 내포하고 장차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정치적·영토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내적이고 방어적인 차원과 함께 국제적이고 공세적인 성격을 함께 지닌다고 하겠다(조성환, 2010).

4. 일본 민족주의의 부상 배경 및 특성

일본의 민족주의는 19세기 명치유신 시기에 형성됐다. 근대 일본의 민족주의는 파시스트적인 성격을 띠었고, 그 결과 동아시아의 평화질서와 안정을 해치고 말았다. 이에 따라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사회에서 민족주의는 부정적인 이념으로 간주되고 기피돼 왔는데, 이는 무엇보다 일본인의 자신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들은 민족주의 의식을 억제하지 않으면 또다시 동아시아 평화를 깨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2차 세계대전에서의 치욕적인 패전과 히로시마·나가사키에의 원폭투하 경험 등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일본인들은 평화헌법에 명시된 군대 보유 및 전쟁 금지 조항을 건설적인 자기구속으로 평가해온 것이다. 말하자면,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민족주의가 평화주의에 의해 압도되는 이념지형이 형성되었던 셈이다.

하지만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이 격화된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과거의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와는 또 다른 공세적 ‘수정 민족주의’가 본격적으로 부상했다(고상두, 2011). 이러한 일본의 수정 민족주의는 2006년에 이어 2012년 12월에 두 번째로 집권한 아베 신조 총리의 급진적인 우경화정책으로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우경화 질주는, A급 전범 용의자였으면서도 총리까지 지낸 외조부 기시 노부시케(岸信介)로부터 물려받은 아베 총리의 ‘유전적 우경화 성향’ 때문만은 아니다. 일본의 ‘우경화’를, 일본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이 보수화되고 국민들의 민족주의적 국가의식이 높아지며 대외관계나 안전보장 문제에 관해서 보수적·현실적 색채가 짙어지는 것으로 개념 정의한다면, 그러한 경향은 1990년대 중반 이래 지속돼 왔고, 분명히 현재의 일본 사회는 과거보다 상당히 우경화됐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조세영, 2014).

일본의 공세적 ‘수정 민족주의’는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역사에 대한 재해석이다. 그동안의 역사교육이 미국에 의해 강요된 ‘자학사관’이라고 규정하면서 소위 ‘자유주의 사관’을 역사 교과서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이러한 운동은 1995년과 1997년에 각각 결성된 ‘자유주의사관

연구회'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 의해 주도되었다. '수정 민족주의'는 일본의 과거사를 재해석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한국과 중국이 일본의 과거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비판에 무조건 굴복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또한 애국심과 국가의식의 고취, 국가정체성의 강화 등으로 나타난다. 국기와 국가에 관한 법률의 제정(1999년)이나 교육기본법의 개정(2006년), 교과서와 학습지도요령의 개편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책임 회피도 같은 범주에 들어간다.

둘째는 영토 문제다. 이는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가운데, 센카쿠 열도에 대한 실효지배 강화, 독도와 남쿠릴열도(북방영토)에 대한 영유권 주장, 영토 문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강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는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현행 평화헌법의 개정 문제이다. 일본 사회에서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개헌을 지지하는 이유는 1947년에 제정된 평화헌법은 미군정에 의해 강요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개정해 특히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전환하고 합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참의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발의한 후 국민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하는 엄격한 요건 때문에 개헌의 문턱은 상당히 높다. 따라서 아베 정부는 헌법의 해석을 변경하는 '해석개헌'의 편법을 동원해 2014년 7월 1일 각의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결정했다(연합뉴스, 2014년 7월 1일 자). 그간 유엔 평화유지활동협력법의 제정(1992년)과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1997년)에 이어, 주변사태법(1999년), 테러특조법(2001년), 이라크특조법(2003년), 유사법제(有事法制)의 제정(2003년) 등에 이어, 무기수출 금지원칙도 2014년 4월에 폐지했다. 드디어 헌법 개정만 마지막 과제로 남은 상태다.

넷째, 정치지도자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활발해졌다. 야스쿠니 참배는 일본 민족주의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이 안장돼 있을 뿐만 아니라,³¹ 경내에 건립된 전쟁박물관은 식민통치를 미화하는 등 '수정 민족주의'의 역사관을 잘 보여주고 있다(조세영,

³¹ A급 전범 14명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것은 1978년 10월 17일이며, 그것을 일본의 유력지 '아사히신문'이 특종으로 보도한 것은 이듬해 4월 19일의 일이었다(박진우, 2014).

2014).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한국과 중국이 격렬하게 비판하기 시작한 것은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1985년 8월 15일 역대 총리로서는 최초로 ‘공식 참배’를 한 것이 계기가 됐다. ‘공식 참배’란 총리가 관용차를 타고 야스쿠니 신사에 가는 것, 야스쿠니 신사에 헌금을 공금으로 지출하는 것, 그리고 방명록에 ‘일본국 총리대신’이라고 명기하는 것의 세 가지가 모두 갖춰진 경우를 말한다. 이는 곧 총리가 일본 국민을 대표해서 참배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아직도 과거의 침략전쟁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나카소네 총리는 이른바 ‘전후 총결산’을 내세운 정치가이며, 당시의 일본은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서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국제화’와 ‘국제공헌’을 슬로건으로 외치는 한편, 교육 현장에서 ‘히노마루’ 국기와 ‘기미가요’ 국가 사용을 의무화하고 국제일본연구센터를 설립해 ‘일본적 아이덴티티(identity)’를 모색하는 등 국가주의적인 지향성을 명백히 하는 이른바 ‘더블 스탠더드(double standard)³² 정치를 추진하고 있었다. 나카소네 총리는 이러한 일본 민족주의의 재구축을 위해 공식 참배를 강행한 것이었다(박진우, 2014).

이처럼 역사 재해석, 영토 문제, 평화헌법 개정운동,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은 1990년대 이래 일본의 ‘수정 민족주의’의 부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들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수정 민족주의’가 생겨나게 된 데에는 근본적인 배경 원인이 있다(Matthews, 2003). 우선, 인구학적 배경으로서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일본 사회의 주류가 된 점을 들 수 있다. 과거 역사에 대한 직접적인 죄의식, 전쟁에 대한 공포, 파시즘에 대한 경험 등이 없는 신세대는 60여년 전의 과거행위에 대해 일본이 주변 국가에 충분히 사과를 했다고 생각하며, 헌법이 일본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에 걸맞는 정상적인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한다.

³² 더블 스탠더드란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전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전쟁책임 문제를 사실상 부정하거나 불문에 부치는 식으로 대외적인 자세와 국내적인 대응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구분해서 사용하는 문제의 처리방식을 말한다(박진우, 2014).

둘째, 경제적 배경으로서 일본이 장기불황에 빠지게 되면서 일본 국민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이 생겨났다. 즉 일본이 오랫동안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해왔던 중국이, 부상하는 동아시아 세력으로서 일본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고, 또 일본이 경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았던 동남아는 중국의 세력권이 돼가고 있다는 인식이다. 일본은 국제기구의 재정 분담, 해외원조, 해외투자 등에 적극성을 보여왔는데도,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떠맡는 데에 실패하고, 중국이 국제사회의 주도국으로 부상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셋째, 안보적 배경으로서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점증하고 있는 점이다. 중국은 경제적 성장을 기반으로 군사력을 크게 증강시키고 있는데, 매년 두 자리 수의 방위예산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일본에게 보다 직접적인 위협을 주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일본국민의 안보 불안을 야기했는데, 특히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으로 날아갔을 때, 일본은 격렬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상두, 2011).

2000년대에는 테러와의 전쟁에 의해 추동되었지만, 최근에는 중국의 급속한 부상과 이에 따른 외교안보적 위협 인식이 핵심요인이 되고 있다. 말하자면, 일본의 우경화 현상은 안보분야에 관한 한, 새로운 도전에 대처한다는 나름대로 전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추진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냉전의 시작과 더불어 제기된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물론 일본이 이를 활용하는 측면도 병존하겠지만) 안보체제를 정비하고 군사적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안보 위협에 대처해 왔다. 이러한 전략은 한때는 ‘보통국가론’으로, 지금은 ‘적극적 평화주의’의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반면, 역사 문제나 영토 문제에서는 안보분야 만큼 치밀한 전략이 뒷받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교육기본법 개정을 비롯한 교육내용 개편은 상당히 계획적인 포석을 두고 있고, 독도에 대해서는 분쟁지역화라는 분명한 전략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명확한 청사진도 없이 대중요법에 따른 근시안적 행보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야스쿠니 참배를 반복한 고이즈미 전 총리의 고집이 한중 양국과의 외교를 훼손한 것 이외에 어떤 긍정적 의미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2013년

12월 26일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도 그로 인한 국내외적 파장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전략이 뒷받침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영토 문제만 해도 중국의 공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센카쿠 국유화에 이어 해외홍보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다는 유리한 입지를 약화시키면서 분쟁지역화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잃어버린 20년’의 상실감과 중국과의 국력 역전에 따른 무력감이 ‘강한 일본’에 대한 원망(願望)으로 나타나며 우경화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지만, 우경화의 실상은 여론을 의식한 포퓰리즘과 외교적 단견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조세영, 2014).

V. 한·중·일의 민족주의와 갈등의 상호작용 검토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 간 갈등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강도가 높은 갈등을 중심으로 그 성격에 따라 아래의 <표 1>에서처럼, 크게 △영토·해양경계 갈등 △과거사 갈등 △안보 갈등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 간 갈등과 민족주의는 어떠한 상호작용을 보이는지를 주요 사례로 든 갈등들의 유형 및 성격에 따라 검토해 본다.

<표 1> 한·중·일 3국 간의 갈등 유형 및 성격

유형	주요 사례	성격
영토·해양경계 갈등	독도, 센카쿠 열도(중국명:다오위다오); 이어도, 동중국해 해저자원 개발	영토 주권 갈등; 관할권 및 경제적 이익 갈등
과거사 갈등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일본 교과서 왜곡, 일본군 ‘위안부’, 동북공정	역사 해석 및 역사 주권 갈등
안보·경제패권 갈등	군사전략적 갈등, 경제패권 갈등	지역 헤게모니 갈등

1. 민족주의와 영토·해양경계 갈등의 상호작용 검토

영토 갈등은 주권적 갈등이어서 국민국가의 정체성에 직결되기 때문에 민족주의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가장 높은 강도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한 일간의 독도 갈등과 중일 간의 센카쿠 열도(다오위다오) 갈등이 이러한 영토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 두 갈등은 단순히 독립국가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인 영토 주권만을 놓고 대립하는 게 아니라 그 근저에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의 과거사, 그리고 이들 도서의 주변 해역의 자원개발을 둘러싼 경제적 이익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해법을 찾기가 무척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일본은 독도와 센카쿠 열도에 대해 오로지 국제법상의 ‘무주지 선점’ 이론에 따라 획득한 자국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말하자면, 일본은 독도와 센카쿠 열도에 얽혀 있는, 국력이 허약했던 근대 시기의 한국과 중국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입은 뼈아픈 역사의 트라우마를 외면하는 셈이다.³³ 바로 이 지점이 저항적 민족주의를 건드리는 뇌관이라고 하겠다. 패전국 일본은 가해 사실을 그만 잊고 싶겠지만, 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죄가 결여된 치욕적인 역사의 기억을 쉽사리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다. 일본은 ‘무라야마 담화’ 등을 통해 이미 충분한 반성과 사죄를 했고 언제까지 이러한 반성과 사죄를 해야 하느냐는 볼멘소리를 내지만,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패전국 독일이 나치 만행 등에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며 또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모습과 대조를 이뤄 설득력을 잃고 있다. 유럽은 독일의 반성과 사죄를 밑거름으로 대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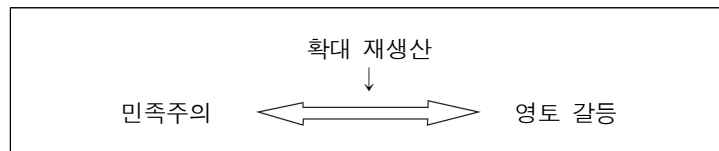
더욱이 쓰라린 근대사를 딛고 절치부심해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인 중견국과 G2의 일원으로 각기 부상한 한국과 중국의 자신감과 자존감은 민족주의를 한층 더 고양시키는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에 히로시마와 나가사

³³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가해사실을 쉽게 잊지만 피해자는 피해사실이 쉽게 잊혀지지 않는 법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2013년 3·1절 기념사 중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1,000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이라는 대목은 일제 식민지배로 인한 한국 국민의 깊은 트라우마를 상기시킨다.

키의 원폭 피해를 침략전쟁의 ‘자업자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도 전쟁 피해자인양 행세하고 있는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으로 상징되는 국력의 쇠퇴에 직면해 자신감과 정체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에 대한 그동안의 미흡한 사죄와 반성마저 ‘자학사관’으로 치부하고 그러한 가해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역사 수정주의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다.

따라서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토 갈등은 한국과 중국으로서는 트라우마가 장전된 민족주의 정서의 방아쇠를 당기게 하고, 이렇게 해서 분출된 민족주의가 다시 영토 갈등의 동력을 제공하는 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영토 갈등이 직접적으로 민족주의와 맞물려 일종의 상승효과를 일으킴으로써 이러한 민족주의 열기는 꺾기도 쉽지 않거니와 수그러들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요컨대, 한·중·일의 민족주의와 영토 갈등은 아래 <그림 3>과 같이 서로 자양분을 대주면서 서로를 확대 재생산하는 구조의 강고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림 3> 민족주의와 영토 갈등의 상호작용



한편 해양경계 갈등은 유엔해양법협약 상의 대륙붕과 EEZ의 경계획정을 둘러싼 관할권 갈등인 동시에 대륙붕에 매장된 석유와 천연가스 등 해저자원 개발을 둘러싼 경제적 이익 갈등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중 간에 이어도 해역을 둘러싼 관할권 갈등과 중일 간에 춘샤오 유전 등의 해저자원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해양경계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어도는 유엔해양법협약 상의 섬이 아닌 수중암초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토 분쟁의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에게 민족주의 정서를 환기시키는 독특한

존재다.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돼 있는 이어도는 동중국해 한복판에 위치해 군사 전략적 가치 또한 높다. 특히 이어도는 화산섬에서 고달픈 삶을 영위해야 했던 옛 제주도민이 그려온 풍요의 섬으로, 전설속의 ‘이상향’이었다. 제주의 설화나 민요를 보면, 이어도는 옛날부터 해양활동을 해온 제주인에게는 풍성한 어장이자 중국·일본 등 외부세계로 나가는 해로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에도 제주에서 이어도는 상호(商號)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듯이 뿌리깊은 생활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더욱이 이어도 해역에는 석유·천연가스 등 풍부한 광물자원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평가돼 그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이어도 주변 해역을 포함한 동중국해가 세계 최대의 유전지대일 가능성이 있다는 ‘에머리 보고서’에 주목해온 중국으로서는 이러한 자원 보고의 관할권을 놓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³⁴ 특히 동중국해는 수심이 얇은 대륙붕으로 이뤄져 있어 중국의 북해 함대나 동해 함대는 이어도 해역을 거치지 않고는 태평양 진출이 어렵다는 시각이 있는 등 안보전략적 가치가 높은 점도 중국이 이어도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이유다.³⁵ 이는 중국이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일본과 첨예한 갈등을 벌이면서 2013년 11월 이어도 상공을 일방적으로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킨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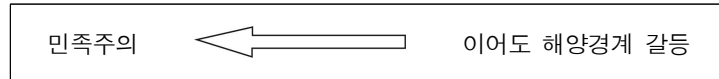
따라서 민족주의가 이어도 해역을 둘러싼 한중 간 관할권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라기보다는 해저 광물자원의 보고이자 높은 전략적 가치를 지닌 이어도 해역의 관할권 갈등이 오히려 민족주의를 환기시키고 강화시키고 있다고 보는

³⁴ 한국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에 나서자 중국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이어도 부근을 집중 탐사, 그 북동쪽 4.5km 수역에서 길이 372m, 폭 169m의 산 모양의 수중 암초를 발견하고 ‘딩옌(丁岩)’이란 중국식 이름을 붙이기까지 했다.

³⁵ 2012년 3월 24일, 우리 해군은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어선으로부터 잠수함으로 보이는 수상한 물체가 이어도 서북쪽 40마일 해역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신고를 받고 3함대 사령부 소속 호위함 두척을 급파했지만, 이미 사라져 버려 접촉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당시 이 해역에 우리 군 잠수함은 없었으며 중국 해군 잠수함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어도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군 동해 함대 소속으로 보고 있으며, 수면으로 떠오른 점으로 미뤄 디젤 잠수함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그 이튿날 새벽에도 잠수함이 목격됐던 해상 인근에 또다시 중국 해군 호위함 두 척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우리 군함이 다가가자 우리측 EEZ 바로 앞에서 급선회해 돌아갔다”고 말했다(JTBC 뉴스, 2012년 4월 13일 자).

게 보다 정확할 것이다. 이 경우 민족주의와 이어도 해양경계 갈등의 상호작용은 아래 <그림 4>와 같이 역방향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림 4> 민족주의와 해양경계 갈등 (이어도)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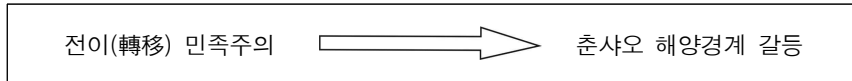
한편 춘샤오 석유가스전의 개발을 둘러싼 중일 간의 해양경계 갈등은 전형적인 경제적 이익 갈등이라 하겠다. 중국이 춘샤오 가스전에 대해, 동중국해 상의 중일 간 중간선에 가까운 지점에서 개발에 착수하자 일본은 자국 측 해양에 매장돼 있는 자원이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항의해 양측이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우여곡절 끝에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 후쿠다 일본 총리의 정치력 발휘로 2008년 6월 마침내 일본 기업이 춘샤오 유전의 개발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2010년 7월에는 양국이 공동개발을 위한 조약 체결 협상에 들어갔다. 하지만 2010년 9월 센카쿠 충돌사건 이후 양측 간 추가 협상은 중단됐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센카쿠 충돌사건 직후와 2013년 9월에 해군 주력함을 투입해 동중국해 가스전을 순찰하고 보호 훈련을 한 것은 분쟁 해역에서 에너지 개발권을 비타협적으로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이에 일본도 정찰기와 군함, 해상보안청 소속 대형 순시선 등을 동중국해의 중일 중간선 부근에 집결시키면서 중국의 공세에 맞불을 놓았다. 이에 따라 춘샤오 유전을 둘러싼 해양경계 갈등은 원래 경제적인 차원의 이익 충돌의 성격을 지녔지만, 영토 주권이 걸린 센카쿠 열도 갈등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파급되면서 민족주의 정서가 뒤엉킨 다소 복잡한 갈등으로 변질되고 있는 양상이다.

양국 간에 영유권 귀속 문제를 후대에 해결하기로 약속한 센카쿠 열도에 대해 일본이 일방적으로 국유화를 선언하면서 약속을 깬기 때문에, 비록 별개의 사안이라 하더라도 춘샤오 유전에 대한 합의를 준수하라는 일본의 목소리에 중국이 귀를 기울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처럼 춘샤오 유전을 둘러싼 해양경계 갈등은 영토 주권 갈등에서 전이된 강력한 민족주의 정서의 지배를 받게 됨

으로써, 민족주의와 해양경계 갈등의 상호작용은 아래 <그림 5>와 같이 전이 민족주의가 해양경계 갈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특이한 케이스라고 하겠다.

<그림 5> 민족주의와 해양경계 갈등 (춘샤오 유전)의 상호작용



2. 민족주의와 과거사 갈등의 상호작용 검토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일본 교과서 왜곡, 일본군 ‘위안부’, 그리고 동북공정은 한·중·일 3국 간의 과거사 해석을 둘러싼 대표적인 갈등 사례들이다. 특히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교과서 왜곡 문제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함으로써 일제 군국주의의 망령을 불러일으키면서 미래 세대에까지 파장과 영향을 미치는 공세적 ‘수정 민족주의’의 핵심 사안들이다. 또 일본군 ‘위안부’는 전시에 여성을 성적으로 철저히 유린한 ‘성노예제’로서 국제사회에서 광범한 지탄과 공분을 사는 사례이다.³⁶ 중국의 동북공정은 이들과 성격이 다르지만 역사 주권에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다.

2013년 4월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침략에 대한 정의는 정해진 것이 없다”³⁷는 상식밖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아베 신조 총리는 2014년 8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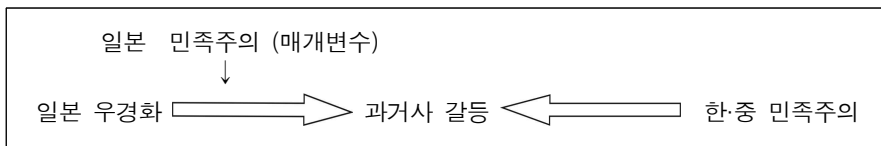
³⁶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3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한국 정부가 다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3주년을 맞아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인류 보편적 인권 문제이자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로서 현재의 문제”라면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일본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강력한 어조의 비판 성명을 발표한 것을 비롯해 유엔 시민적·정치적권리위원회(B규약 인권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이어 최근 인종차별철폐위원회까지 가세하면서 거의 모든 유엔 인권기구가 다루는 주요 국제문제로 자리잡았다(연합뉴스, 2014년 8월 30일 자).

³⁷ 아베 총리는 2013년 4월 2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침략과 식민 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침략에 대한 정의는 학계나 국제적으로도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국가 간 관계에서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침략의 정의가) 다르다”고 답변했다(연합뉴스, 2013년 4월 23일 자).

전몰자 추도식 추도사에서는 역대 총리와 달리 침략 사죄 문구를 빼버리는 등 스스로 역사 수정주의의 선봉에 서 왔다.³⁸ 구소련과 동구권의 몰락과 함께 탈냉전기에 들어서면서 일본의 정치권에서도 진보세력의 급격한 퇴조로 인해 우경화 현상이 몰아쳤고, 장기 경제침체가 겹치면서 일본사회는 총체적 보수화의 길을 치달아 왔다. 보수우파 정치세력은 이러한 일본 내 사회 분위기를 틈타 정권 장악 및 유지를 목적으로, 일본 특유의 국가주의적 민족주의를 조장하고 역사 왜곡 등의 뒤틀린 방식으로 이를 동원해 한국과 중국 등 외부 세계에 투사해 온 셈이다. 이러한 일본의 행태에 반사적으로 한·중 민족주의가 촉발돼 상호작용하면서 에스컬레이트돼 왔다고 하겠다.

여기서 일본의 민족주의가 과거사 갈등을 유발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보수우파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집권과 우파 이념의 실현이라는 정치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민족주의를 조장하고 활용해 왔다고 하는 게 보다 정확할 것이다. 요컨대, 과거사 갈등은 일본 정치권 자체가 동력을 부여한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펼친 국내 우경화 정치 프로세스의 외부 효과에 한·중 민족주의가 반발하면서 격화돼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민족주의와 과거사 갈등의 상호작용은 아래 <그림 6>과 같이 일본 민족주의가 과거사 갈등의 매개 변수로 작용하는 가운데 한·중 민족주의가 저항하는 구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 민족주의와 과거사 갈등 (일본)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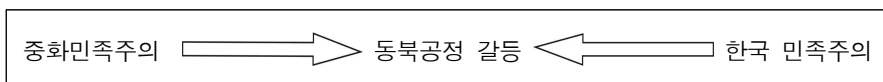
³⁸ 아베 총리는 이날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의 일본 부도칸(武道館)에서 정부 주최로 열린 ‘전국 전몰자추도식’ 식사에서 1994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 이후 일본 총리들이 추도식에 포함했던 ‘아시아국들에 대한 가해의 반성’과 ‘부전(不戰) 맹세’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은 아베 총리가 2014년 7월 1일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며 자국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든 뒤 처음 돌아온 패전일이어서 추도식 메시지에 관심이 쏠렸지만 결국 2년 연속으로 전쟁에 대한 반성의 메시지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연합뉴스, 2014년 8월 15일 자).

한편 중국이 추진해온 동북공정은 한국 민족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고조선사와 고구려사, 그리고 발해사를 자국의 지방정권의 역사로 무리하게 편입하는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한중 간 역사 충돌의 대표적 사례이다. 초등학교의 어린 시절부터 고조선사와 고구려사, 발해사를 민족의 혼과 얼이 담긴 정통 국사로 배워온 한국 국민에게 동북공정은 우리의 역사 주권을 송두리째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정치권과 일반 대중 가릴 것 없이 이러한 중국에 대해 극심한 불신과 격렬한 반발을 여과없이 분출하면서 한국의 저항적 민족주의의 불길이 거세게 타오른 셈이다.

오늘날 분리 독립 요구가 있는 광대한 영토의 보전과 함께, 극심한 빈부격차와 관료의 부패 등으로 분열된 사회의 통합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는 중국 당국으로서는 날로 퇴색되고 있는 사회주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중화민족주의를 주류 민족인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을 하나로 결속시키기 위한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부각시켜 왔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한국에 뿌리의식을 가지고 있는 소수민족인 조선족이 거주하는 동북변강 지역의 한민족 고대사를 자국의 역사에 작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영토 주권과 역사 주권의 동일화를 추구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리한 역사 해석은 한국의 역사 주권과 심대한 마찰을 불러오고 한국 민족주의의 심지에 불을 당기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처럼 동북공정은 중화 민족주의에 의거해 진행된 인위적인 역사 통합 프로젝트에 한국의 민족주의가 강력하게 저항한 케이스이다. 요컨대, 중국의 정치적·정책적 산물인 중화 민족주의가 역사 갈등을 초래하면서, 반사적으로 한국의 강력한 저항적 민족주의 역풍을 불러왔기 때문에, 이 경우 민족주의와 역사 갈등의 상호작용은 단선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아래 <그림 7>과 같이 쌍방향적으로 이뤄졌다고 하겠다.

<그림 7> 민족주의와 과거사 갈등 (동북공정)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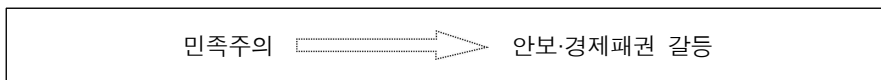
3. 민족주의와 안보·경제패권 갈등의 상호작용 검토

2011년 11월 오바마 미 대통령이 선언한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는 동아시아에서 경제적·군사적으로 급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을 뜻한다. 이러한 아시아 회귀 정책의 가시화를 위해 미국은 아태지역에 해군력을 증강 배치하고 ‘세계 최대의 광역 FTA’로 불리는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에 일본을 참여시킨 가운데 조기 타결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은 또 미일 동맹의 강화를 동아시아 안보전략의 기본축으로 삼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을 환영하고 센카쿠에 대한 미일안보조약의 적용을 공표함으로써 동중국해를 미일 대 중국의 헤게모니 갈등의 중심지로 끌어올렸다.

이러한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을 극도로 경계하는 중국은 동아시아에서의 자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신형대국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반접근 및 지역거부 전략(A2AD)’으로 미 해군력의 활동을 억지하고 대양해군으로 이른바 ‘제2열도선’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다. 또 중국은 동중국해를 핵심이익 지대로 선포하는 한편, FTAAP에 주력해 미국 주도인 TPP에 맞섬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패권 장악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의 헤게모니 갈등은 미일 간의 세력전이 과정에 있어서의 현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족주의와 이러한 안보·경제패권 갈등의 상호작용은 직접적 인과관계에 있다기보다는 아래 <그림 8>과 같이 미국이 개입하면서 민족주의가 중일 간의 갈등을 추동하는 간접 요인(점선 화살표로 표시)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림 8> 민족주의와 안보·경제패권 갈등의 상호작용



이상에서 살펴본 민족주의와 유형별 갈등의 상호작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유형별 갈등과 민족주의의 상호작용

갈등 유형	주요 사례	유형별 갈등과 민족주의의 상호작용
영토·해양경계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도 •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민족주의와 독도, 센카쿠열도 영토 갈등은 서로 자양분 대주며 서로를 확대 재생산하는 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어도해역 관할권 	이어도 해역의 관할권 갈등이 역으로 민족주의를 환기시키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중국해 춘샤오 유전 개발 	센카쿠열도 영유권 갈등에서 전이된 민족주의가 춘샤오 유전 공동개발에 악영향
과거사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스쿠니신사 참배 • 교과서 왜곡 • 일본군 위안부 	민족주의가 일본과의 과거사 갈등에 매개변수로 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공정 	중화민족주의가 동북공정 갈등을 초래, 반사적으로 한국의 민족주의 역풍 불러옴
안보·경제패권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전략적 갈등 • 경제패권 갈등 	민족주의는 종일 지역 헤게모니 갈등을 추동하는 간접요인

Ⅶ. 한·중·일의 민족주의 대응 및 갈등 완화 방안

1. 한·중·일의 민족주의적 갈등의 유형별 완화 방안

1) 영토·해양경계 갈등의 완화 방안

한·중·일 간의 영토 갈등은 강한 민족주의 정서에 직접 영향을 받으면서 서로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조기에 해결책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 그렇다고 이러한 갈등이 3국의 전반적인 관계에 부정적인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는 상황을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도 없는 문제다. 따라서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더라도 갈등을 더 이상 키우지 않고 점차 완화해 나가기 위한 단계적 해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3국의 정치지도자들의 미래지향적인 결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

들도 당해 갈등 도서를 둘러싼 자국의 입장에 대한 성찰과 함께, 상대국의 주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그리고 상대국의 국민정서를 충분히 헤아리는 이성적 자세가 요구된다. 특히 네티즌을 비롯한 관련 시민단체 등도 민족주의적 정서에 지나치게 매몰돼 폐쇄적 ‘애국의 틀’에 갇혀 상대방의 반작용을 초래하는 과도한 행동을 자제하는 슬기를 발휘해야 한다.

독도에 대한 한국의 ‘조용한 외교’가 성공을 거두지 못한 배경에 이러한 과도한 행동이 있었던 점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으로 한일관계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악화된 가운데 오히려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전략에 빌미를 제공하는 우를 범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센카쿠 열도 또한 일본의 일방적인 국유화 선언이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사면서 결과적으로 참여한 군사적 대결마저 우려되는 분쟁지역으로 급속하게 전환된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독도의 경우 과도한 행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가운데 실질적 지배를 신중하게 견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 지검은 2013년 8월 당시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등 한국 국회의원들과 서울시의원 등이 독도를 방문한 것이 불법 입국에 해당한다는 일본 정치단체 등의 고발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다. 마쓰에 지검은 불기소 사유에 대해 “다케시마는 한국에 실효지배되고 있어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설명은 과거의 경우와 약간 차이가 있다. 즉, 마쓰에 지검은 2012년 독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일본 단체의 고발사건을 불기소로 끝내면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국제관습상 일본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연합뉴스, 2014년 4월 26일 자).

독도와 달리 유전 등 해저 광물자원 매장 가능성으로 경제적 이익이 얽혀 있는 센카쿠 열도의 경우 일본은 일방적인 국유화 선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유보한 가운데 이 문제를 놓고 중국과 대화할 의사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최악의 관계에 있던 중국과 일본의 정상이 2년 6개월만인 2014년 11월 10일 베이징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매우 좋은 신호라고 하겠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일본 총리 간의 이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전에 양국은 관계 개선을 위한 4개항의 원칙에 합의했다.³⁹ 앞으로 양국은 갈등 완화의 획기적인 수순으로,

센카쿠 주변 해역의 자원 탐사에 공조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양국은 협량한 자국만의 이해를 초월해서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이라는 대의와 세계적 추세인 지역통합을 지향하는 상징적·시범적 프로젝트임을 명분으로 내세워 이를 전향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실타래처럼 얽힌 한·중·일 간의 갈등 현안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중단돼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조속히 재개하는 게 중요하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1월 13일 미얀마에서 열린 제17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지난 9월 서울에서 한·중·일 3국 고위관리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멀지 않은 장래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고, 이를 토대로 한·중·일 3국 정상회담도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따라서 종전 70주년을 맞는 2015년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려 일본이 ‘무라야마 담화’ 등의 계승을 재천명하는 가운데, 3국 정상은 미래지향적인 선린우호 관계 정착을 위한 새로운 결의와 그에 따른 가시적 조치의 이행을 표명하는 게 바람직하다. 요컨대, 영토 갈등은 그 성격상 완전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자극과 도발을 삼가고 민족주의 정서를 억제하는 가운데,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이 보다 더 유용할 것이다.

한편 이어도 해역을 둘러싼 한중 간 갈등은 민족주의로 인해 유발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어도 해역의 해양자원과 전략적 가치가 민족주의를 환기하고 강화한 특수한 케이스다. 특히 제주도에는 오랜 옛날부터 이어도 전설이 내려오고 제주의 대표적 민요인 해녀노래는 이어도를 주제로 하는 등 이어도는 제주도민의 일상 속에서 호흡을 함께 해 오면서 ‘뿌리깊은 문화’로서 자리잡아 왔다. 이에 따라 제주 방문 경험이 있는 대다수 한국인들로서는 이어도 문제가 제기될

³⁹ 일본 외무성은 2014년 11월 7일 4개 항목으로 이뤄진 ‘일·중 관계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은 △전략적 호혜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확인했다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 지향의 정신에 따라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약간의 인식의 일치를 봤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동중국해 해역에서 최근 긴장 상태가 생기고 있는 것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정세의 악화를 막고 위기관리 메커니즘을 구축, 불의의 사태 발생을 회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양한 다자·양자 채널을 활용하고, 정치·외교·안보 대화를 서서히 재개, 정치적 상호 신뢰관계 구축에 힘쓰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고 규정했다(중앙일보, 2014년 11월 8일 자).

때면 민족주의적 정서와 자연스럽게 연계되기 십상이다.

해녀노래의 가사⁴⁰는 중국으로 가는 해로의 절반가량 되는 곳에 이어도가 있음을 알려준다.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는 이어도가 표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해역의 항해도가 1653년 8월 16일 제주도에 표착했던 네덜란드인 헨드릭 하멜(Hendric Hamel)에 의해 제작됐음을 최근 밝혀내기도 했다.⁴¹ 하멜의 항해도에는 이어도로 추정되는 곳이 ‘OOST’라고 표기돼 있는데, 이어도 외에는 이 해역에 섬이나 거대한 수중 암초가 없기 때문에 현재의 이어도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독된다. 따라서 이어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법적 측면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역사·설화·민요 등을 포함한 인문사회학적 지식의 통섭을 통해 이어도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한중 EEZ 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는 국제적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적극 활용하는 정책이 요청된다. 즉, 해양이나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연구 성과를 제후한다면 국제사회에 이어도에 대한 평화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서 생산되는 관측 자료들이 한·중·일 3국 간의 국제적 공유 및 활용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진행남, 2012). 한중은 해양경계 획정 협상을 조기 타결함으로써 이어도 해역을 둘러싼 갈등 해소는 물론 양국간 해양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춘샤오 유전을 둘러싼 중일간의 해양경계 갈등은 원래 전형적인 경제적 이익 다툼으로, 양국이 윈-윈 차원에서 합작개발이라는 묘수를 찾아 가까스로 봉합한 것이었다. 하지만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여기서 분출된 민족주의 정서가 전이돼 복잡한 갈등으로 변질되었다. 양국이 센카쿠 분

⁴⁰ 해녀노래의 가사에는 “강남(江南: 중국 양쯔강 남쪽지역)을 가건 해남(海南)을 보라/이어도가 반(半)이엿 한다”는 대목이 있다.

⁴¹ 하멜 일행은 제주도에 상륙하자마자 자신들의 위치를 측량한 결과, 위도 33도 32부로 켈파트(Quelpaert), 즉 조선사람(Coreesen)이 제주(Scheluo)라고 부르는 섬이 틀림없다고 하멜표류기에 기록했다. 하멜의 이 항해도는 17세기 중엽에 이미 동아시아 해역을 항해하는 이들에게 제주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어도라 부르는 수중 암초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시사한다(이어도연구회, 2011).

쟁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무력시위 등 ‘강 대 강’으로 맞섬으로써 춘샤오 문제도 센카쿠 갈등과 떼어놓기 어렵게 되면서 당초의 합작개발 합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센카쿠 갈등의 완화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춘샤오 유전에 대한 합의 이행을 추진함으로써 센카쿠 갈등 해소의 돌파구를 여는 역발상이 아쉬운 형편이다. 중일 양국이 동북아 지역협력 차원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국제사회도 적극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 과거사 갈등의 완화 방안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1월 14일에 동북아 미래에 대한 인식 공유를 위해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폴란드의 예처럼 한·중·일 3국이 공동 역사교과서를 발간할 것을 제안했다.⁴² 정부 채널의 한일·중일 간 역사공동연구위원회 보고서 등이 이미 나와 있지만, 3국 간 역사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한·중·일 공동 역사교과서 발간을 제안한 것은 3국 정상 중 처음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연합뉴스, 2013년 11월 14일 자).⁴³

한·중·일 공동 역사교과서 발간은 공동의 역사인식과 서술이라는 ‘공동체적 집단기억’을 만드는 작업이다. 여기에 활용해야 할 자산과 해결해야 과제가 있다. 우선, 자산으로서 지금까지의 민간차원에서의 공동 역사부교재 발간의

⁴² 박 대통령은 2013년 11월 14일 국립외교원 설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개회식에서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해 먼저 역내 국가들이 동북아 미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중·일 공동 역사교과서 발간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통해) 갈등과 불신의 근원인 역사문제의 벽을 허물 날이 올지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독일과 프랑스의 공동 역사교과서 출간은 2003년 1월 엘리제조약 체결 40주년을 계기로 독일과 프랑스 청소년 의회에 참석한 양국 청소년 대표가 공동 역사교과서 출간을 제의하고, 양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시작됐으며 2006년 7월 현대사부분이 먼저 발간됐고 2008년 4월에는 근대사 부분인 2권(1814년~1945년)이 출판됐다(연합뉴스, 2013년 11월 14일 자).

⁴³ 중국 외교부는 이를 지지하여 “일본이 관련 문제에서 진실하고 성실한 태도를 취하기 바란다”고 언급했고, 왕안거(王恩哥) 북경대 총장도 “아시아 대학들이 나서서 공동 집필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선일보, 2013년 12월 7일 자). 일본 정부도 당초 부정적 반응에서 하루만에 환영으로 입장을 선회해, 공동 역사교과서가 평화로운 동아시아공동체 수립에 중요한 사안임을 인정했다(김정현, 2014).

노력⁴⁴과 유네스코의 국제교과서 추진 경험,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져온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폴란드 등 유럽의 국제교과서 대화를 참고해야 한다. 한편 과제로서는 공동 역사교과서 발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와 다양한 학술활동을 통한 합의과정, 집필기준 결정 등이 뒤따라야 한다. 예컨대, 정권이 바뀌어도 공동연구와 교재편찬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기구와 기금 등이 필요하다. 동북아의 국경을 넘은 협력의 역사를 더욱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한편, 역사에서 영토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조사하는 공동연구와 사례 축적도 병행돼야 한다. 또한 동아시아 역사에 관심을 가진 세계의 학자와 NGO 등 시민단체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공동연구가 바람직하다(김정현, 2014). 따라서 한·중·일은 독일·프랑스 공동 역사교과서 출간팀 등의 자문 아래 3국 공동 역사교과서 발간을 위한 사전 준비모임을 갖고 이러한 자산과 과제부터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역사 문제로 악화된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조기에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는 ① 아베 정부의 기존의 역사 인식 및 역사 정책의 계승 입장에 대한 명료한 확인, ② 양국관계의 긴급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자 보상 문제⁴⁵에 대한 해결 원칙 합의,

⁴⁴ 한·중·일 3국의 역사학자와 시민단체는 자발적인 역사대화를 통해 『미래를 여는 역사』 등 공동 역사 부교재를 발간해 왔다(김정현, 2014).

⁴⁵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우선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한 일본 법원의 판결이 우리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판결은 일제 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우리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봤다. 일본 법원 판결의 효력을 승인하는 것은 우리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또 1965년에 한일 청구권협정이 체결됐지만 개인의 청구권 자체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식민지배에 따른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일 양국은 그동안 1965년 6월 맺은 청구권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는지 여부를 놓고 해석의 차이를 보이며 다툼을 벌여왔다. 일본은 개인 배상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주장한 반면, 우리 정부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협정만으로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해왔다. 대법원은 국가와 국민 개인이 별개의 법적 주체인 점을 들어 조약 체결로 국민의 개인적인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양국 간 재정적 관계 등을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청구권협정에는 개인 청구권의 소멸에 관

③ 한일 간 미래 협력의 방향 설정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 정부는 주요 현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차원의 협상에 박차를 가해 한일 국교정상화 50년을 맞는 2015년에는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1998>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21세기 한일 신시대 선언 2015>의 채택을 적극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이원덕, 2014).

핵심 현안인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자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접근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진행중인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통해 대체적인 타결안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양국 정부는 각각 야당과 시민사회를 포함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도출되면 정상회담을 개최해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의 합의 아래 가치 <한일 역사 화해를 추진하는 새로운 공동기구>를 조직해 2015년 6월까지 두 가지 핵심 현안의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기존의 한일 역사공동위원회가 역사학자들의 공동연구 조직이었다면 새로운 공동기구는 보다 확장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정책 입안적 성격을 띤 기구다. 이 기구에는 한국의 경우 역사학, 정치학, 한일관계 분야의 전문가는 물론,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 그리고 변호사 단체·헌법재판소·대법원이 추천하는 법조계 인사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각계각층의 관계자와 전문가가 두루 포함되는 게 바람직하다.

물론 국장급 협의를 통한 타결안 도출 방식이든 공동기구에 의한 합의안 도출 방식이든 기한 내에 양국 정부와 국민 모두가 박수갈채를 보낼 수 있는 해법이 나올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결론 도출 여부를 떠나, 좁은 국익이나 국내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양국의 민간, 시민사회, 학계의 인사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와 총의를 모으는 작업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가지 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양국의 역사마

해 한일 양국 정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한겨레, 2012년 5월 24일 자).

찰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국 최고지도자 간의 암묵적인 합의와 공동 노력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 최고지도자 사이의 신뢰와 그에 기반한 대화가 전제돼야 한다(이원덕, 2014).

한편 동북공정 갈등은 중화 민족주의에 의거한 중국의 작위적인 역사 통합 프로젝트에 한국의 민족주의가 역사주권 침해라며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충돌을 빚은 사안이다. 동북공정은 영토주권과 역사주권의 합치를 무리하게 추구한 중국의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학술적으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 역사적 진실은 바뀌지 않는 만큼, 학술적 차원의 실증작업이 계속될수록 한국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이미 중국의 동북공정 의도와 배경을 잘 파악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동북지역에 인접한 러시아, 몽골, 북한의 학계와 연계해 더욱 학문적으로 심도 있게 접근해서 연구 결과를 세계 학계에 널리 알려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민족주의적 감정 표출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외교적 대응을 병행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한중 간의 역사 갈등을 완화해 나가는 합리적인 길이라고 하겠다.⁴⁶

3) 안보·경제패권 갈등의 완화 방안

동북아 지역의 헤게모니 갈등은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한 세계적 차원의 세력전이 과정에서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민족주의 부상과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동북아에서는 군사전략적 포석과 광역FTA 결성을 둘러싼 안보 갈등을 추동하는 민족주

⁴⁶2014년 들어 중국에서 ‘신드롬’이라 할 정도의 한류 열풍을 재현한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남녀 주인공(김수현·전지현)이 중국의 생수 광고에 모델로 출연했다가, 생수 원산지가 창바이산(長白山)으로 표기됐다고 해서 논란을 빚은 일이 있다. 한국의 네티즌들은 “백두산의 중국 명칭인 ‘창바이산’ 표기는 동북공정의 일환”이라며 광고 출연에 응한 한국 배우들을 비난했고, 이들의 소속사는 광고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중국 측은 이에 크게 반발했고, 국내 학계도 “그 나라의 고유 지명을 문제 삼는 건 자칫 국수주의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반응을 내놓으면서 결국 광고모델을 계속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는 민족주의적 감정이란, 제대로 통제되지 않을 경우 얼마나 사소한 일에서도 불거질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하겠다.

의가 수면 아래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화이(華夷)질서로써 천하를 다스렸던 과거의 영화를 재현하려는 ‘중국의 꿈’에 자양분을 제공하고 있는 중화민족주의와, 대동아공영권의 허망한 꿈이 깨진지 60여년 만에 평화헌법의 족쇄를 풀고 정상국가로 육일승천하려는 ‘강한 일본의 꿈’에 동력을 불어 넣고 있는 ‘수정 민족주의’가 그것이다.

지역 패권을 놓고 줄다리기하는 이 두 강대국이 오늘날 동북아의 중층적 갈등을 완화하는 길로 가려면, 위협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지역의 공동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책임대국’으로서의 중국의 행보가 절실하고,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바탕으로 이웃국가들의 축복 속에 ‘보통국가’로 재탄생하기 위한 일본의 겸허한 자세가 아쉽다. 분업 구조나 다름없는 경제적·산업적 밀착과 상호의존 심화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적 협력 부재와 극심한 불신에 허덕이는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선도적 중견국인 한국이 중도적 입장에서 균형을 잡고 갈등의 골을 메워나가야 할 것이다.

2. 한·중·일의 민족주의적 갈등의 층위별 대응 방안

1)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

한·중·일 3국은 전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 전 세계 GDP의 약 5분의 1, 전 세계 교역액의 약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⁴⁷ 한·중·일 3국의 이러한 경제규모와 급변하고 있는 동북아 정세 등을 고려할 때 한·중·일 정부 간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동북아 역내에 갈등 요인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3국 정부 간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한·중·일 3국의 민족주의적 갈등 완화를 위해서는 정부 차

⁴⁷ 한·중·일 3국의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22%인 15.3억명(IMF 2012년 추정치), GDP는 전 세계 GDP의 21.2%인 15조3,108억불(IMF 2012년 추정치), 교역액은 전 세계 교역량의 16.9%에 해당하는 6조6,180억불(WTO 2012년 기준)에 달하고 있다. 한·중·일 3국간 교역액은 1999년 1,294억불에서 2012년 6,702억불로 5.2배 증가했으며, 3국간 인적 교류는 1999년 658만명에서 2012년 1,680만명으로 2.5배 증가했다(외교부 『한·일·중 협력 개황』 2013.12).

원의 대응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 3국 간에는 아래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한·중·일 정상회의⁴⁸를 비롯, 정치·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18개 장관급 회의를 포함한 58개 정부 간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

<표 3> 한·중·일 정부 간 주요 협의체

수준 분야	정상	장관급	고위급실무자	국장	실무자	분야별 협력체수
전반/ 지역·국제 정세		· 외교장관회의	· 외교부 고위급차관보회의 · 대터러협력회의	· 중남미국장회의 · 대아프리카 정책대화	· 외교부 부국장급회의	7
통상/산업		· 통상장관회의 · 관세청장회의 · 특허청장회의	· FTA 협상	· 투자협정 협상 · 국장급 표준협약체 · 한·중·일 지적재산 · 한·중·일 경제기술 교류회의	· 동북아 표준 협력포럼 · 한·중·일 지적재산 · 워킹그룹	9
금융/거시 경제		· 재무장관회의 · 중앙은행총재회의				2
농업/어업		· 농업장관회의	· 수산연구기관장회의			2
에너지			· 원자력안전규제 · 책임자회의(TRM)		· TRM 실무대표조정 · 그룹회의	2
환경	3 국 정 상 회 의	· 환경장관회의 (TEMM)	· 환경과학원장회의 (TFM)	· 황사 대응 국장급회의 · 환경장관회의 준비 국장급 · 회의(IDGM) 회의(IDGM)	· 황사공동연구단 운영 · 위원회/실무그룹 · 화학물질 정책대화 · 환경산업 리운드테이블 · 회의	7
관광		· 관광장관회의			· 청사진교육관광포럼	2
문화		· 문화장관회의	· 문화콘텐츠 산업포럼			2
교육				· 고등교육교류 전문가 · 위원회	· CAMPUS Asia 실무 · 위원회	2
과학기술/정 보통신		· 과학기술장관회의 · 정보통신장관회의		· 과학기술 국장급회의 · 국제협력 실무협약체 · IT 국장급회의		5
운송/물류		· 교통물류장관회의		· 동북아 항만 국장회의 · 교통물류 국장급회의	· 교통물류 과장급회의	4
방재		· 자진협력청장회의 · 재난관부기관장 · 회의		· 재난관리 국장급회의		3
감사		· 감사원장회의 (부총리)			· 실무협력회의	2
인사 행정		· 인사장관회의		· 인사국장회의	· 인사국제심포지엄	3
보건		· 보건장관회의		· 고령화회담 · 식품안전 국장급협의	· 의약품 국장급회의 · 보건포럼	5
학술		· 3자 협력포럼			1	
수준별 협력체수	1	18	8	17	14	58

출처: 외교부 『한·일·중 협력 개황』 2013.12, p.12.

⁴⁸한·중·일 정상회의는 1999년 ASEAN+3(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간 오찬 회동으로 시작됐으며, 2008년부터는 3국간 별도 정상회의를 개최해, 지금까지 5차례 3국간 별도 정상회의와 11차례의 ASEAN+3 계기의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됐다(외교부 『한·일·중 협력 개황』 2013.12).

그러나 과거사와 영토 문제 등으로 한일관계와 중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2013년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6차 한·중·일 정상회의는 끝내 열리지 못했고, 2014년에도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되지 못했다. 이처럼 3국 간 최고위 회의체인 한·중·일 정상회의가 중단됨에 따라 58개의 3국 정부 간 협의체 전체가 그 동력을 크게 상실하고 있다.⁴⁹ 이에 따라 얽히고설킨 3국 간 갈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해법 마련도 적극적으로 시도되지 못한 채 손을 놓은 형국으로 이어지고 있다. 물론 민족주의와 3국 갈등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감안할 때 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층위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하겠지만, 한·중·일 정상회의의 재개야말로 갈등 완화 내지 해소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가장 핵심적이고 효율적인 접근방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한·중·일 정상회의의 재개에는 그 여건과 분위기 조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3국 정상회의가 열리더라도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게 될 경우 오히려 더 큰 관계 악화만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상회의에 올릴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부터 3국 정부 간 대화가 이뤄지는 만큼 갈등 완화를 위한 접점을 모색하기 위한 다각적인 실무 접촉은 결코 무의미하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대화와 소통의 빈곤은 온갖 억측과 불신만 양산해 갈등을 치유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상회의가 안 열리더라도 상관없다거나 끄덕없다’는 식의 자존심 대결만으로 일관하기에는 현재의 난마처럼 얽힌 3국 간 갈등이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한일 간에는 과거 정부 간 갈등을 중재했던 원로 정치인 등 막후 채널이 오늘날 거의 사라진 점이 정부 간 대화의 물꼬를 쉽게 트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정부 관료보다 유연하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간 대화 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특히 한·중·일 정상회의는 3국을 윤번제로 오가며 개최되고 있고 제 6차 한·중·일 정상회의는 한국이 의장국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11월에

⁴⁹ 물론 2013년에도 두 차례의 3국 FTA협상이 진행되는 등 경제·통상 분야의 3국 협력이 이뤄졌고, 환경·재난관리·문화 등 분야에서도 협력 강화가 추진됐지만, 한·중·일 정상회의의 중단으로 전반적인 3국 협력의 모멘텀은 크게 약화됐다.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한 만큼, 한국 정부는 난국 타개의 이니셔티브와 함께 일종의 ‘의무감’을 갖고 ‘물밑 작업’이라도 부단히 시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3국 최고 정치지도자들의 대승적 결단이 정상회의 재개에 필수적인 요건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특히 일본 총리가 국내의 정치적 이해타산과 포퓰리즘적 유혹에서 벗어나 신뢰회복의 가시적 조치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렇게 딱 막힌 정부 간 대화를 잇는 데에 도움을 줄 창구로서, 2011년 서울에 상설된 ‘3국 협력 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하다. 3국 관계가 이처럼 악화될수록 3국 협력의 제도적 틀을 보완하고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된 ‘3국 협력 사무국’의 역할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⁵⁰ 3국 정상회의는 물론, 외교장관회의와 각종 정부 간 협의체 운영의 지원을 받고 있는 ‘3국 협력 사무국’의 활동 영역도 더욱 확대되고 보완되어야 것이다.

2) 1.5트랙 차원의 대응 방안

동북아의 적지 않은 갈등이 정부 차원의 문제와 민간 차원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점을 감안하면 1.5트랙의 활성화는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는 데에 유용한 통로가 될 수 있다. 민감한 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직접 입장을 표명하기가 무척 조심스럽고, 그렇다고 민간 부문에서 실효성있는 대응 방안을 만들어 내기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1.5트랙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현재 동북아 지역의 협력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다양한 대화채널이 존재하고, 민간에서는 자발적인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편이지만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의 지역협력 기제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이러한 1.5트랙의 독자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각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활용하려 들기 때문이

⁵⁰ ‘3국 협력 사무국’은 2012년 신규 협력 사업으로 ‘한·중·일 3국 의회 포럼’을 비롯, 재난관리 상시연락 네트워크 구축 및 재난관리 모의 도상 훈련 등을 발굴했다. 2013년에는 제1회 재난관리 모의 도상 훈련, 한·중·일 FTA 세미나, 3국 대학생 UCC 경연대회, 3국 대학생 여름 프로그램 등의 협력 사업을 실시했다(외교부 『한·일·중 협력 개황』 2013.12).

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1.5트랙의 참가자들 간에 신뢰가 형성되기보다 상대방을 정부나 민간 부문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 정도로 간주하기 십상이어서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1.5트랙을 활성화하려면 단기적으로 정부나 기업 등 민간 차원의 특수한 목적을 위해 활용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목표와 활동규범을 명확하게 한 바탕 위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남주·배기찬, 2009).

이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다양한 차원의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갈등현안과 갈등영역에 따라 정부와 국회 등의 정책담당자와 학자·언론인·NGO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를 장기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부합하는 운영원칙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1.5트랙의 활동에는 한·중·일 3국의 인사만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미국, 유럽 등의 역외 인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 ASEAN+3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1.5트랙 포럼으로서, 우리나라의 주도로 창설된 EAF(East Asian Forum)를 동북아 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AF는 한·중·일과 ASEAN의 정부·재계·학계 대표가 참석해 동아시아 지역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포괄적 성격의 포럼이다.⁵¹ 따라서 ASEAN+3를 매개로 한·중·일 정상회의가 시작되고, 별도의 한·중·일 정상회의가 만들어졌듯이, EAF 공간을 활용해서 동북아 3국 간 1.5트랙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이후 독립적 활동의 틀을 만들어가는 방식의 접근도 가능할 것이다(이남주·배기찬, 2009).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외교부 등의 후원으로 매년 5월에 열리는 한국의 대표적인 국제포럼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약칭 ‘제주포럼’)에 동북아 갈등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1.5트랙’의 세션을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주포럼’은 정치적 색채가 얇은 휴양지인

⁵¹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중 ASEAN+3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비전그룹 등의 창설을 제안했고, 이를 바탕으로 2002년 캄보디아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EAF 창설이 결정돼 2003년 12월 서울에서 창립총회가 열렸다.

제주도에서 2박3일간 열리는 민간포럼인 만큼, 동북아 국가들이 별다른 부담감 없이 자연스럽게 참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민간 차원의 대응 방안

현재 한·중·일 간에는 △비즈니스 서밋 △FTA 민간공동연구 △30인회 △문화교류포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 △민간어업협의회 등 민간 차원에서의 다양한 교류·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은 3국의 경제단체장 등 재계 지도자들이 모여 3국 간 무역·투자 활성화 및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데,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로 개최된다. 또 ‘한·중·일 30인회’는 3국의 주요 언론기관(중앙일보·신화통신·니혼게이자이신문)의 공동 주최로 열려 3국의 정치원로, 경제인, 석학 등 각국 10명씩 30명이 참석해, 동북아의 바람직한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민간 정책포럼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중·일 30인회’는 경제·통상, 환경, 문화·교육 등 3개 분과로 나눠 집중 토론한 후 그 결과를 정부에 건의하기도 한다. 또 ‘한·중·일 문화교류포럼’에서는 3국 지식인·문화인들이 모여 3국 간 문화교류 관계를 검토·평가하며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한다(외교부 『한·일·중 협력 개황』 2013.12).

이러한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은 3국간에 우호친선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갈등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저변을 더욱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3. 국가정체성과 지역정체성의 공존 방안

동북아에서는 기존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새로운 갈등요인이 추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새롭게 추가되는 갈등요인을 보면 민족주의 강화 추세에 따른 국가정체성⁵² 문제와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 새로운 국

⁵²일반적으로 ‘국가정체성’은 어느 한 국가의 이익과 행동기준에 대한 지표로 삼는 특성과 특질의 집합으로, 국가가 처한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인식, 그리고 규범과 가치에 해당하는 자의식에 의해 역사적으로 자신을 타자와 차별화하는 준거를 말한다(이수형, 2014).

가정체성 모색이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특히 한·중·일 3국은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근대 국민국가로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춘기 국가(adolescence state)’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Blanchard, 2003), 정체성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이에 대한 외부의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 국가는 근대화 과정에서 겪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에는 격렬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의 갈등요인을 더욱 강도 높은 갈등으로 전환시키는 한편, 억제될 수 있는 문제도 갈등요인으로 만들어 가는 셈이라고 하겠다(이남주·배기찬, 2009).

이를테면, 일본이 영토분쟁을 적극화하는 데에는 실질적인 영유권 다툼 외에도 또 다른 효과를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영토 문제의 부각은 역사 문제를 국가 간 이슈로 전환시키는 효과가 있다. 영토를 둘러싼 갈등은 일본 내 정체성, 나아가 ‘주권’에 대한 위기감을 선동하는데 적합하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영토 문제는 주변국과의 역사인식을 둘러싼 갈등을 국가 간 대립으로 전화, 수렴시키는 가장 좋은 소재인 셈이다. 즉 역사 문제를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은 일본 사회 내의 대립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지만, 영토분쟁화는 국가정체성 논란으로 이끌어 일본사회를 단결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또 국가 간 갈등의 침체화로 내부의 민족주의적·국가주의적 정서를 동원해 보수우경화의 현안들을 해결하는 국내정치의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연유로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인식은 큰 차이가 난다. 한국인은 독도 갈등을 영토 문제이자 역사 문제로 인식한다. 즉, 교과서 왜곡이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과 같이, 과거사 청산 차원에서 독도 문제에 접근한다. 이에 따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과거사의 정당화 논리에서 비롯된 잘못된 역사인식의 소치라고 본다. 그러나 일본인에게 독도 문제는 국가정체성과 관련된 영토 문제로서 역사인식 문제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평화주의 세력에게도 민족주의적 정서를 불러일으킨다(김용복, 2013).

동북아에서는 단순히 민족주의를 비판하거나 탈민족주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민족주의 문제를 해결하기란 어렵다. 왜냐하면 민족주의가 각국 내에서 상당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국가로서의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계시민과 같은 전망만으로는 민족주의가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기는 어렵다(이남주·배기찬, 2009).

동북아에서는 민족주의·국가주의 그 자체보다도 민족주의·국가주의를 보편주의⁵³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더 문제일 수 있다. “하나의 민족국가, 하나의 문명, 하나의 언어, 그리고 하나의 인종을 갖고 있는 나라는 일본 외에는 없다”⁵⁴는 2005년 당시 일본의 아소 다로 총무상의 언급에서 읽혀지는 인식과 같은 경우다. 한편 중국의 세계관은 자민족중심주의를 넘어서는 강력한 매력을 지닌 우주관에 기초한다. 중국(中國)이라는 명칭 자체에 내재돼 있는 인식이나 동서(東西) 국제관계를 중서(中西) 국제관계와 동일시하는 인식은 동북아 지역주의를 중국적 보편주의와 쉽게 동일시해 버린다(김명섭, 2007). 이것이 유럽보다 동북아에서 지역정체성을 창출하기 어려운 배경이라 하겠다.

그러나 1842년 아편전쟁에서의 패배 이후 중국인들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문명’으로서의 중국을 정점으로 하는 ‘화이(華夷)질서’가 조각조각 떨어져 나감을 경험하게 되고 이후 여러 가지 변법 및 자강 운동에도 불구하고 100여년에 걸친 ‘국치’의 기억을 공유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국 내의 민족주의가 하나가 아닌 복수라는 점이다. 물론 이들 복수의 민족주의는 공히 ‘100년의 국치’라는 실제 경험과 공감대로서의 재구성을 거치긴 했지만, 그 대외적 발현의 모습은 상당히 다른 것이 사실이다. 즉, 위계적인 중국적 세계관의 재현이라는 가장 보수적인 민족주의의 모습으로부터 내적으로는 견고한 유대를 가지되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성에 대해 열린 소통을 원하는 민족주의 경향까지 여러 가지가 병존하고 있기 때문이다(정재호, 2008).

⁵³ ‘보편’은 공간적으로 인간이 거주하는 전 지구를 포괄하며, 시간적으로 국가의 수명을 뛰어넘는 정도의 문명사적 지속성을 지닌다. ‘보편주의(universalism)’는 특수주의 또는 개체주의와 대칭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국제질서와 관련해서 보면 개체로서의 국가나 민족, 또는 개체로서의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가치가 있다고 믿거나 그것을 추구하는 신념체계이다(김명섭, 2007).

⁵⁴ 이는 2005년 10월 15일 당시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무상이 큐슈국립박물관 개관식 축사에서 한 말이다(서울신문, 2005년 10월 17일 자),

유럽인도 유럽연합 형성 과정에서 유럽의 정체성과 이념을 끊임없이 문제 삼아 왔다. 유럽의 정체성은 각국의 전통과 문화에 바탕을 두면서도 유럽의 전통과 문화라는 보편성 위에, 또 하나의 보다 열려있는 이념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유럽 내의 전통과 문화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전통과 문화를 포용하는 것인데,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비유럽적인 문화와 전통이 현재의 유럽 내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유럽연합이 다른 지역의 공동체와 공존공영하면서 세계시민이 추구하는 공동체를 지향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이는 전제조건으로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내세운다. 즉, 유럽연합은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공동체라는 인식을 명백히 하고, 이를 그 구성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각인시켜 유럽연합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

동북아에서는 국가정체성의 정립과 함께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선 지역주의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지역정체성을 모색해 왔다. 지역정체성 구성을 위한 이론적 대안 중 하나로 ‘순화된 애국주의(purified patriotism)’,⁵⁵ ‘유연한 국가주의’가 근래에 주목받고 있다. ‘순화된 애국주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매개된 특수한 민족 집단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정신이기 때문에 국민국가의 틀을 유연하게 하고 지역적·세계시민적 질서와 결합될 수 있는 정서와 태도를 배양하는 데에 유용한 토대 역할을 할 수 있다(나종석 외, 2009).

‘순화된 애국주의’를 동북아 지역정체성 형성에 적용하면, 우선, 각국의 국가정체성 내용 중 단일 인종, 단일 문화, 자기보전적 집단주의 등의 폐쇄적 특징을 타 인종, 타 문화, 타 집단과의 공존을 위한 개방적 형태로 변경할 수 있다. 둘째, 근래 들어 국민국가 단위로는 해결할 수 없는 환경, 평화, 인권, 경제위기 등의 문제가 다발하고 있는데, 이는 다자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셋째, 국제결혼 및 다문화가정의 증가, 예술·문화·역사·스포츠 교류 등 각국이

⁵⁵ 타국민을 배려하는 ‘순화된 애국주의’는 미국 시카고대학교 법학·윤리학 석좌교수인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이 주장한 이론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순화된 애국주의’라는 용어는 독일 민족주의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준 헤르더(Herder)의 것이다. 누스바움이 ‘순화된 애국주의’의 역사적 사례를 검토하면서 그 전형적 사례로 든 인물은 링컨, 킹, 간디, 넬슨 등이다(나종석 외, 2009).

중첩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공동 대응할 수 있다.

여기서 동북아 지역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으로서, 과거사에 대한 공유인식 확보 및 확장에 ‘순화된 애국주의’의 원칙을 적용하면, 한·중·일 3국의 역사학자·시민·교사가 함께 만든 부교재 『미래를 여는 역사』의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3국역사에 대한 단순비교의 틀을 넘어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역사인식의 공유가 가능하려면 국민국가의 기억을 병렬적으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가 3국의 근현대사에 나타난 애국주의 및 민족주의 흐름을 중층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이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서술지침이 ‘순화된 애국주의’의 흐름을 비교하는 것이다. ‘순화된 애국주의’는 국민국가의 저항적 민족주의와 침략적 제국주의를 구조적 맥락으로 파악하는 것을 허용할 뿐 아니라, 저항적 민족주의 정신을 좀 더 보편적인 방향으로, 즉 동북아의 지평이나 인류공동체의 지평으로 확장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 한·중·일의 민족주의 흐름 및 이를 상징하는 지도자들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를 비교분석해 동북아 정체성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작업이 이뤄지면 그 결과를 대중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또 ‘순화된 애국주의’를 매개로 한 공동의 역사 인식을 구체화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공동의 기억 현장을 발굴해 이를 교육의 장 및 3국 교류의 매개로 활용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근대 국민국가의 경험을 상대화하고 이 지역의 공동성을 드러내는 한중, 한일 교류사나 상호 영향사를 발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를테면, 과거 삼국시대 이래 상호교류의 기억복원 프로그램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동북아 인재 공동육성 프로그램’을 가동해 동북아 공동의 맥락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의 육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연구소나 단체를 3국이 함께 설립해 자료와 정보를 공유할 길을 열어 줄 수 있다(나종석 외, 2009). 한편 한·중·일 교육 당국이 2011년부터 공동 추진하고 있는 ‘캠퍼스아시아’ 사업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캠퍼스아시아’ 사업은 3국 대학의 공동학위제 등을 구축해 상호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유럽

의 ‘에라스무스 플랜’⁵⁶을 모델로 하고 있다. 한·중·일 대학에서 지난 3년 동안 10개팀 800명의 학생이 여기에 참여했다(김미덕, 2014).

요컨대, 한·중·일의 국가정체성과 3국 협력의 토대인 지역정체성의 조화로운 공존이야말로 3국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 하겠다.

4. 한국의 포지셔닝 파워의 적극 구사

동아시아에서는 보다 나은 지역적 거버넌스로서의 ‘다자주의’⁵⁷ 협력체제가 끊임없이 추구돼 왔다. 동아시아의 다자협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1997년 ASEAN+3(한·중·일) 정상회의가 처음 개최되면서부터였다. 그 후 정상 간 전략대화체로 출발한 EAS(동아시아 정상회의)가 동아시아 지역협력 기제로서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하면, ‘한·중·일 정상회의’가 ASEAN+3와는 별도로 열리면서 2011년에는 ‘3국 협력 상설 사무국’이 서울에 설치됐다.

한·중·일은 1999년 이후 해마다 열린 ASEAN+3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했으며, 2008년부터는 ASEAN+3 정상회의와 별도로 이를 정례화함으로써 독자적인 포럼으로 발전시켰다. 내용면에서도 초기에는 경제, 인적·문화 교류, 대 ASEAN 협력 등의 문제가 중심이 됐지만, 점차 비전통적 안보의 문제(재난관리, 해양구조)와 주요한 지역 및 국제 문제(북한 핵 문제, 환경·기후변화)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됐다.

⁵⁶ ‘에라스무스 플랜’은 유럽연합이 경제·군사·정치 영역에 이어 문화적 영역에서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유럽내 대학교류 프로그램이다. 1987년 출범 당시에는 지역대학간 학생 및 교수 교환, 상호 학점인정, 공동 커리큘럼 개발 등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1995년을 기점으로 그 영역을 평생교육으로까지 확대하면서 에라스무스 플랜은 ‘소크라테스 플랜’으로 흡수 통합되었다(나중석 외, 2009).

⁵⁷ 다자주의(multilateralism)는 특정한 원칙에 의해서 셋 이상의 국가 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지칭한다. 하지만 이러한 형식적인 정의를 넘어서는 하나의 이즘(ism)으로서의 다자주의란 단순히 다자적(multilateral)이라는 형용사의 명사형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즉, 다자주의의 실현이란 불가분성(indivisibility), 일반화된 행위원칙(generalized principle of conduct), 포괄적 호혜성(diffuse reciprocity)의 속성이 세계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공유되고 제도화되어 지는 것으로 지적된다(Caporaso, 1992).

1999년 ASEAN+3 정상회의와 연계해 최초로 개최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ASEAN 주도로 출범해 운영되고 있는 ASEAN+3 협력체제 내에서 동북아 3국 간 협의채널 형성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이후 한·중·일 3국은 2003년 역사상 최초의 공동성명 채택과 '3자 위원회' 설치 등 초보적인 제도화를 이룩했지만, 한일·중일 간 역사 및 영토 문제로 한동안 정상회의가 중단되는 파행상태를 맞았다. 그러나 2007년 일본 후쿠다 수상 취임 이후 한·중·일 3국 내 정상회의 순환개최 합의 등 협력의 진전을 보였다. 특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3국 협력에 모멘텀을 제공했다.

2008년 12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됨으로써 ASEAN+3과 연계되지 않는 독자적인 3국 정상회의가 태동한 것은 동북아 협력의 큰 전환점이 됐다. 이 제1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한·중·일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 「국제 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 「한·중·일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등이 채택됐다. 이 정상회의의 중요한 성과는 당면한 국제 경제위기에 대응해 한일·한중간 금융협력 방안에 합의함으로써,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은 각각 300억 달러에 해당되는 양자 통화 스와핑이 가능해진 점을 꼽을 수 있다(배궁찬, 2009).

2009년 10월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한·중·일 협력 1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지역 및 범지구적 문제에 대한 대화와 협력 강화를 추구함으로써 '한·중·일 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강화'를 제창했다. 이는 3국 협력이 종래의 경제·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기능주의적 협력에서 점차 정치 협력을 모색하는 단계로 이행하고 있음을 의미했다(조양현, 2009).

2010년 5월 제주도에서 열린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천안함 사건과 북핵 문제 등 동아시아 정세를 뒤흔든 안보 현안뿐만 아니라 한·중·일 FTA 추진 등 3국 간 경제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한 의제 등이 다뤄졌다. 더욱이 3국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3국 협력의 향후 10년에 대한 미래상과 비전을 제시하는 「협력비전 2020」을 채택했다. 또 이를 효과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국 협력 상설사무국'을 2011년 한국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⁵⁸ 이 '3국 협력

상설사무국'은 2011년 9월 27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S타워에서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2011년 5월 일본 동경에서 열린 제4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3·11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제기된 재난구호 및 원자력 안전 등과 관련된 현실적 필요에 대한 협력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⁵⁹ 특히 제4차 정상회의는 2010년 9월 센카쿠 분쟁과 2011년 3월 일본 교과서 검정 문제 등으로 경색된 중일관계 및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

2012년 5월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다양한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과 2개의 부속문서를 채택했다. 공동선언문은 △정치적 신뢰 증진 △경제·통상 협력 심화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사회적·인적·문화적 교류 확대 △지역적·국제적 문제에서 소통 및 공조 강화 등 5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 부속문서를 통해 식량안보를 위한 3국 간 농업 협력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사막화 방지·야생동식물 보전 협력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역내 및 세계적 환경위험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제5차 정상회의에서는 3국 간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하고,⁶⁰ 한·중·일 FTA 협상이 연내에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3국 정상은 또 한반도 정세, 동아시아 지

⁵⁸ '3국 협력 상설사무국' 설치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북경에서 열린 제2차 3국 정상회의때 처음 제안했었다.

⁵⁹ 한중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전날 3·11 대지진 재해지역인 센다이시를 방문하여 피해주민을 위로하였고, 3국 정상회의 및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재해지역의 재건 부흥이 "3국의 이익 및 운명"에 중요함을 강조하여 재난에 대한 공동대응 의지를 표명하고 협력 분위기를 제고하였다 (조양현, 2011).

⁶⁰ 투자보장협정은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서명이 이뤄졌지만, 협정 발효에 필요한 3국의 자체 국내절차가 완료되지 못해 만 2년 만인 2014년 5월에야 뒤늦게 발효됐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2013년 8월과 12월에 국내절차를 마무리하고 상대국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지만 중국은 2014년 4월에야 국무원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한국과 일본에 절차완료 사실을 통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와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그동안 경색된 중일관계를 감안해 일본과 공식적인 협정 체결에 부담을 느껴 미뤄온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한 관측통은 중국이 갑작스럽게 협정을 발표시킨 이유와 관련, "일본에 대한 중국의 강경한 태도가 변화된 것인지, 경제분야의 필요성이 반영된 것인지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국 간 경제 분야 협정으로는 최초인 이 협정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또 3국 간 경제협력 가속화를 위한 추진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낳고 있다(연합뉴스, 2014년 4월 28일 자).

역협력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같이 제1~3차 정상회의에서는 한·중·일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제1차), 3국 협력 10주년 기념 공동성명(제2차), 3국 협력 VISION 2020(제3차) 등을 통해 3국 협력의 원칙, 방향성, 미래비전 제시와 함께 협력사업의 발굴에 주력했다. 이에 비해 제4차 정상회의부터는 기존 합의의 확인 및 협력사업의 구체화를 위주로 한 정상선언문과 공동선언이 발표됐다(조양현, 2012). 그러나 2013년에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6차 한·중·일 정상회의는 영토 및 과거사 갈등으로 3국 간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다시 중단됐고, 2014년에도 연이어 무산되었다.

지정학적 요충인 한반도에 자리잡은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있어 중요한 행위자이자 ‘정직한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다양한 기제가 혼재하는 동아시아 다자협력을 위해 한국이 적극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중견국으로서의 한국이 놓인 ‘중간자적 위치’를 활용해 다양한 범주의 다자문제의 해결에 나서는 ‘가교역할(bridging role)⁶¹이라 하겠다. 이는 한국이 이른바 ‘포지셔닝 파워(positioning power)’를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한국은 이러한 가교역할을 하는 데에 중요한 자산으로서 우선 강대국들과는 달리 전략적 야심이 없어서 위협적이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이 한·중·일 ‘3국 협력 상설사무국’을 유치한 사례는 중국과 일본이 상호 견제와 경쟁 속에서 유보적이 되는 문제에 대해 한국이 가교적·중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3국 협력 상설사무국’의 서울 유치가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진전에 던지는 의미는 심장하다. 한·중·일 다자협력이 공존적 질서 구축의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공고하게 자리잡게 되면 장차 역내 타국가들의 참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열린다. 한·중·일로 구성되는 ‘3자주의(trilateralism)’의 형태는 자체의 자율성을 가지면서 지역의 다자적 협력의 중추(hub)로 기능하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다(신육희, 2010). 이 ‘3자주의’는 우선 경제협력과 비전통안보 영역에서 점차 정

⁶¹ ‘가교역할’이란 특정 국제문제에서 대립되는 입장을 절충하거나 또는 간극을 메움으로써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역할을 말한다(신각수, 2010).

차·군사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모델로 제도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이러한 다자협력의 장에서 ‘가교역할’을 수행한 또 하나의 사례로는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 간에 1,200억달러 규모의 상호자금 지원을 하기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의 다자화과정에서 한국이 일본과 중국간의 경쟁관계로 인해 배분이 어려웠던 기여율을 중국·일본 32%, 한국 16%, ASEAN 20%로 정하는 중재역할에 성공했던 일을 들 수 있다(신각수, 2010). 이처럼 우리나라가 가교적·중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동북아의 관문에 자리잡은 지정학적 특수성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말하자면, 동북아라는 지역적 차원에서 한반도가 미국과 일본을 축으로 하는 해양세력과, 중국과 러시아를 축으로 하는 대륙세력이 맞닿은 곳에 자리잡고 있어, 한국은 이를 잇는 역할을 함으로써 ‘포지셔닝 파워’를 자연스럽게 발휘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2013년에 열릴 예정이었던 제6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무산되면서 특히 한국이 주최국으로서 이러한 중재적인 ‘포지셔닝 파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을 남긴다. 민족주의 부상과 영토·역사 갈등으로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될수록 역설적으로 한국의 ‘포지셔닝 파워’가 발휘될 수 있는 공간은 오히려 더욱 넓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에 한국은 그만큼 역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동북아 민족주의적 갈등의 완화 차원에서라도 중단된 한·중·일 정상회의의 재개를 위한 한국의 ‘포지셔닝 파워’ 구사를 위한 세심한 전략과 선도적 행보가 절실히 요청된다.

5. 한·중·일 갈등 현안에 대한 언론의 공정정보도 노력

2013년 7월 7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의 착륙 사고를 전하던 한국의 종편 ‘채널A’의 앵커가 “사망자 두 명이 중국인으로 확인돼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실언했다. 중국 언론들은 ‘채널A’ 앵커의 발언을 그대로 전하면서 중국 국민의 분노를 보도했다. 이로 인해 불과 8일 전의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의 성과가 빛이 바래게 되고 말았다.⁶²

‘채널A’ 앵커의 실언 사고는 언론보도의 파급력을 망각한 미디어의 행태가 어떻게 국익을 해치고 타 국민과의 관계에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입증했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뉴스 정보가 시공을 초월해서 실시간으로 전달돼 국제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증유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절감케 한다(진행남, 2013). 특히 한·중·일 간의 민감한 갈등 사안에 대한 3국 언론의 공정하고 신중한 보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한·중·일 언론인들이 갈등 현안 자체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함은 물론, 3국 언론인들 간의 활발한 교류 등을 통한 상대국 입장의 숙지가 필수적이다. 또 이들 언론인들은 자국이 관련된 갈등 이슈에 대해 민족주의적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진실보도에 힘쓰으로써 해법 마련에 기여해야 한다.

한중 간의 역사 주권이 걸린 사안인 동북공정에 관한 한국 언론의 첫 보도는 “고구려를 중국사의 일부로”라는 제목으로 2003년 7월 14일에 이뤄졌다. 이 첫 보도는 동북공정이 ‘나라의 통일과 변방지역의 안정’에 대한 정치의식 등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5년간 약 2백억 위안(약 3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일보, 2013년 7월 14일 자). 동북공정 프로젝트의 소요 예산 규모는 약 1,500만위안(한화 약 25억원)에 불과한데도 첫 보도 기사에는 ‘약 2백억 위안(약 3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만 돼 있어서, 고구려사 왜곡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고구려 유적이 분포된 지역의 유적 관리 비용과 건설 비용을 포함한 것이라는 예산 용도에 관한 내용이 기사에는 생략돼 있었기 때문이다.

고구려사 왜곡 문제는 중국 중앙정부의 치밀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지방 역사학자들의 주장을 중앙정부가 수동적으로 수용한 측면이 있었다(이희옥, 2007). 중앙정부의 관심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연

⁶² 2013년 6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을 국빈 방문하던 중 베이징의 칭화대에서 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20년을 여는 한중 신뢰의 여정’이란 주제의 연설을 했다. 연설의 시작과 마지막 부분을 박 대통령이 중국어로 말하자, 인민일보와 신화통신 등은 박 대통령의 중국어 실력에 찬사를 보냈고, 텡쉰·신랑·바이두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이와 관련한 뉴스가 일제히 최상단에 올랐다.

구비 경쟁과 학자의 욕망이 함께 결부돼 만들어진 결과였던 셈이다(서이종·탕 레이, 2013). 동북공정은 역사적 민감성 때문에 곧 한중 간 갈등으로 이어졌고, 언론의 경쟁적 보도에 따라 이러한 갈등은 보다 증폭되고 정치화돼 갔다. 이는 한국 내 민족주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켰고, 당시 정부도 대중의 여론을 수용하면서 한중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됐다. 요컨대, 한·중·일 간에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민족주의적 편향을 최대한 억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신중하게 보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최근 일본의 미디어와 우익계 잡지는 한국의 대중국 경사 경향을 마치 한국이 과거의 사대주의 외교로 회귀하고 있는 양 묘사하는 논조를 보이고 있다.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의 대중 외교를 한국이 중국에 달라붙어 일본을 사사건건 비난하는 모양새로 비아냥거리는 인식조차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이원덕, 2014).⁶³ 이러한 언론 풍토와 험한 분위기 속에서 자국이 관련된 갈등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적 편향에 사로잡히지 않고 대체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일본 아사히신문의 보도 태도는 매우 돋보인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일본 사회에 알려지는 데 큰 역할을 한 아사히신문은 2014년 8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5개 면을 할애한 특집 기사를 통해 여성에 대한 자유의 박탈과 존엄 유린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직시

⁶³ 일본의 교토대 교수인 오구라 기조(小倉紀藏)는 한국에서는 혐일 서적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 반면에 일본에서는 혐한 서적이 잘 팔리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한국인들의 경우 일본에 대한 정보가 축적돼 있다. 일본 역시 최근 10년간 한국에 대해 많이 알게 됐지만, 보통의 일본인들에게 한국은 아직 낯설다. 한류가 기대 이상으로 성공했고, 한국을 제대로 알자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일 우호를 주장했던 친한(親韓) 일본인들이 그랬던 모습과 다르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이들이 생겨난 것이다. 그런 ‘일본을 싫어하는 한국’에 대한 존재를 부각시킨 것이 2005년부터 본격화된 혐한파들이었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좋은 면, 안 좋은 면을 두루 접하면서 종합적인 정보를 흡수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혐한 서적이 거의 모두 비슷한 내용에 수준도 낮기 때문에 일본인들도 곧 다음 단계의 한국을 보는 과정으로 넘어갈 것이다. 내가 한국에 유학했을 당시인 1990년대 한국에서 ‘일본은 없다’라는 책이 나왔다. 기성세대로부터 지금까지는 ‘일본을 배워야 한다’는 말만 들었는데, 직접 접해보니 ‘그런 일본은 없더라’는 내용이였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혐한 서적들은 기존의 친한파 일본인들이 말했던 한국은 ‘실제 접해보니 없더라’는 식의 내용을 좀 더 수준 낮고 과격한 방식으로 풀어낸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조선일보, 2014년 11월 25일 자).

하자고 제언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우익세력이 부정하는 ‘위안부’ 강제 연행에 대해 “인도네시아 등 일본군의 점령하에 있던 지역에서는 군이 현지 여성을 강제 연행한 것을 나타내는 자료가 확인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스기우라 노부유키 편집담당자의 8월 5일 자 1면 칼럼을 통해 “위안부로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여성으로서의 존엄이 짓밟힌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2차대전 때 제주도에서 다수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갔다고 증언한 일본인 요시다 세이지(사망)씨의 주장에 기반해 작성한 1980~90년대의 자사 기사들에 대해 “요시다가 제주도에서 군위안부를 강제 연행했다고 증언한 것은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기사를 취소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14년 8월 5일 자).

아사히신문이 이처럼 용기있게 오보 사례까지 공개하고 정정하며 “위안부 강제 동원은 없었다”는 일본 주류의 주장을 다시 비판하자,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위안부=아사히신문 조작설’을 공식화하면서 ‘고노 담화’ 철회를 요구했다. 극우 논조의 일부 매체뿐만 아니라 대중지와 잡지까지 ‘아사히 때리기’⁶⁴와 ‘고노 담화 폐기론’ 공세를 펴는 것은 아베 총리와 자민당이 ‘위안부=아사히 조작설’을 공식화한 데 따른 것이다. 자민당은 아사히 조작설을 내세우며 일본 정부에 고노 담화 폐기를 요청해 왔고, 아베 총리도 산케이(産經)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가 확산된 것은 아사히신문의 책임”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요시다 증언은 고노 담화 작성 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며 위안부 문제가 여성 인권 침해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는 반박 기사를 내보냈다(조선일보, 2014년 8월 29일 자).

⁶⁴ 이러한 ‘아사히 때리기’를 혐한 현상과 연관짓는 시각도 있다. 즉 오구라 기조 교토대 교수는 “혐한 현상은 한국에 대한 비판인 동시에 전후(戰後) 일본의 헤게모니에 대한 비판이다. 일본의 혐한은 이 두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다. 혐한파들은 전후 일본의 언론·학계 등이 전부 좌편향 혹은 중도에 치우쳐 있다고 본다. 메스컴의 경우 아사히신문을 대표로 하는 한·일 우호 주장 세력이 지금까지 주도권을 잡아왔고, 한국을 연구하는 학계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이 없으면 조선에 대한 연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식의 풍조가 지배해 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사히로 대표되는 좌파 논리를 타도해야 한다는 것이 혐한파의 주된 목표 중 하나다. 최근 ‘아사히 때리기’는 단순히 아사히의 ‘위안부’ 강제 동원 기사 철회 및 사과 문제뿐 아니라 이 같은 의도의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 한다”(조선일보, 2014년 11월 25일 자).

일본군 ‘위안부’를 둘러싼 아사히신문의 진실보도를 위한 ‘전쟁’은 20년이 넘었다.⁶⁵ 그럼에도 조·석간 합쳐 하루 1,027만부를 발행하는 아사히신문은 요미우리신문과 함께 일본 지식인의 담론 공간을 양분한다. 아사히와 요미우리를 흔히 진보와 보수로 구분하지만, 아사히에는 그런 잣대로 분류할 수 없는 독보적 가치가 존재한다. 신문 판매에 불리한 걸 알면서도 민족주의를 배격하고 국제주의를 존중하는 것, 독자를 불편하게 하는 걸 알면서도 과거사 반성을 요구하고 금기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사히신문은 일본의 100년 언론사에서 ‘양대지’의 위상을 잃은 적이 없다. 이는 일본 지식사회가 그만큼 넓다는 것을 증명한다(조선일보, 2014년 8월 9일 자).

한·중·일 간에 참여한 갈등 사안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3국 언론인들 간에는 상대국 입장을 파악하기 위한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편협’)의 경우만 미흡하나마 3국간 현안 논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1957년 창립된 ‘편협’은 국내 언론사의 부장급 이상 간부 및 경영인이 회원으로 있는 단체인 만큼, 언론인 교류 사업도 이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편협’은 1966년 이래 매년 ‘한·일 편집간부 세미나’를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열고 있고, 2008년부터는 ‘한·중·일 편집간부 세미나’를 3국을 오가며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다(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2009~2012 연차보고서』).

이러테면, 2013년 10월에 ‘한·일 양국 관련 보도의 특징과 과제’를 주제로 서울에서 열린 제48회 ‘한·일 편집간부 세미나’에서 양국 언론인들은 주제 발표에 이어 독도, 일본군 ‘위안부’,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일본 역사교과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 등 다양한 양국의 현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이어갔다. 한편 2013년 5월에는 ‘편협’과 중국기자협회, 일본신문협회의 공동 주최로 ‘문화·뉴미디어·재해 보도와 3국 언론협력’을 주제로 한 제3회 ‘한·중·일 편집간부 세미

⁶⁵ 1987년 5월 3일 일본 아사히신문 한신(阪神)지국 기자 2명이 사무실에 들이닥친 괴한의 총격을 받았다. 옆구리에 총상을 입은 29세의 기자는 다음 날 사망했다. 괴한은 사흘 후 우의 비밀 조직 ‘세키호타이(赤報隊)’ 명의로 일본의 통신사 2곳에 편지를 보냈다. ‘반일 여론을 육성하는 아사히신문은 악질… 아사히 사원 전원에게 사형을 언도한다. 최후의 한 명까지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내용이였다. 그러나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조선일보, 2014년 8월 9일 자).

나'가 중국 베이징의 중국기자협회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한국신문방송편집인 협회, 2013). 대체로 1박2일 또는 2박3일의 짧은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들 세미나의 참석자들로는 부장급 이상의 간부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파원 출신들이 흔히 발견된다. 이러한 세미나의 주목적은 중견 언론인들이 현안을 놓고 토론을 벌이면서 상호 이해를 높이는 데에 있고, 친목도모는 부차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3국 간 갈등 현안에 대해 직접 취재해 보도하는 일선 기자들의 교류는 찾아보기 어렵다. 전국의 신문·방송·통신사 소속 현직 기자 8,000여명이 회원으로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언론단체인 「한국기자협회」는 90년대 이후 중국 및 베트남기자협회와 매년 상호 방문하는 교류 사업을 벌여왔다. 중국과 베트남 두 나라와의 언론인 교류는 주로 양측기자협회의 간부들이 매년 7~10일의 일정으로 상대국을 교환 방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왔다. 한·중 기자교류, 한·베트남 기자교류 프로그램에서 양측 언론인들은 국가적 현안에 대해서도 토론한다. 하지만, 대체로 한국기자협회의 언론인 교류 사업은 간부들에 의한 해외방문이 주를 이루고 있어 아직은 해외 언론인 단체와의 '우호증진' 차원에 그치고 있다(진행남, 2013).

한편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일본 외무성 산하 '일본국제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한·일 양국의 중견 언론인들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를 2011년 이래 해마다 열고 있다(한국국제교류재단, 2013). 요컨대, 한·중·일 언론인들이 갈등 현안을 놓고 격의 없는 토론과 상호 이해를 위한 회합이 다양한 레벨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게 절실한 실정이다.

6. 인터넷 민족주의에 대한 대응 방안

독도와 센카쿠 열도 등 영토 문제라는 근대적인 사안을 둘러싸고 폭발한 갈등이 인터넷이라는 탈근대적 공간에서 확산된 점은 21세기 한·중·일 관계의 새로운 양상을 엿보게 한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이들 쟁점에 대한 극단적인 국수

주의적 주장을 반복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기반으로 상대국에 대한 편향을 일삼는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번역기술이 발달하면서 타국의 웹 콘텐츠를 열람하는 것이 가능해져, 이를테면 일본 인터넷 게시판의 우익적인 발언이 주변국들에 바로 전달되어 아시아 지역 내 상호우경화라는 악순환에 빠지는 측면도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가 본격화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0여년 동안, 한·중·일 3국의 인터넷 민족주의 갈등은 일부 이데올로기적 편협성을 가진 네티즌들 간의 한시적 격돌인 ‘네트워크 극단주의(network extremism)⁶⁶와 배외주의의 모습으로 표출돼 왔다. 주요 의제를 둘러싼 갈등의 반복과 확산이 이뤄질 뿐, 이성적인 갈등 해결이나 미래의 대안이 논의된 바는 드물다. 말하자면, 전통적 민족주의에서 표방한 주권 획득이라는 목표가 해결된 이후, 신민족주의 특성을 표출하고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민족 균열은 발전적인 민족주의 의제를 제시하지 못하는 일부 극단주의자의 ‘발작’으로 폄하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공간에서의 민족주의 의제와 관련 정보의 확산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며 순간적인 허상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류석진 외, 2013).

다카하라(高原)는 일본, 나아가 한·중·일 네티즌들이 민족주의적 성향을 드러내게 된 배경에는 사회경제적 불안이 있다며 이를 ‘불안형 내셔널리즘’이라 명명했다. 과거 일본 우익들의 내셔널리즘이 고도성장기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형성된 데 비해, ‘불안형 내셔널리즘’은 불황과 사회유동화로 불안을 느끼는 젊은층이 증가하면서 인터넷상의 하위문화를 기반으로 성장했다는 것이다(다카하라 모토아키, 2007). 하지만, 한국과 중국은 집단주의적 문화와 더불어, 경제 발전에 따른 국가적 자부심이 인터넷에서 민족주의적 정서를 증폭시키는 특징이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인터넷 민족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표현의 영역인 반면에, 중국의 인터넷 민족주의는 정부에 의해 철저히 혹은 상당부분 통제되거나 방조되고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조장되는 측면도 있다(서이종·탕레이, 2013).

⁶⁶ 여기에서의 네트워크 극단주의는 극단주의자들의 온라인 활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을 사용하면 할수록 극단화되고 끼리끼리 파편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류석진 외, 2013).

동북아 내 인터넷에서의 민족주의적 움직임 중, 1990년대 후반에 등장한 일본의 ‘넷우익’⁶⁷은 최근 몇 년 사이 반한·반중 공세를 펼치는 과정에서 규모가 크게 성장했고, 온라인에만 머물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행동하는 단체로 거듭났다. 넷우익은 일본 우익계 언론으로부터 △일본 총리 및 정부 고위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평화헌법 개정 △국방군 창설과 핵무기 보유 등의 논지와 사상적 기반을 제공받아 자신의 주장으로 재생산해 인터넷에서 전파한다. 이러한 넷우익의 활동이 해외 사이트로 확장되면서 한국의 인터넷 민족주의와 정면 충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넷우익은 청와대와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VANK)’의 홈페이지를 공격하는가 하면,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의 온라인 청원란 ‘위 더 피플(We the People)’을 무대로 한국 네티즌과 대립하는 일도 잦아지고 있다(이원경, 2013).⁶⁸

중국의 인터넷 민족주의는 2005년 일본 정부가 난징대학살 등 일제 시기의 역사를 왜곡하는 교과서를 승인하자 중국인들의 분노가 사이버 공간에서 대규모로 분출되면서 표면화됐다. 이러한 분노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만 아니라 인스턴트 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광범하게 표출되었다. 하지만 중국의 인터넷 민족주의는 가두시위와는 달리, 해킹 등 과격한 방식에서부터 의견 표현 정도의 온건한 방식에 이르기까지 그 수위에서 상당한 편차가 있다. 이렇게 형성된 인터넷 여론은 중국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중국 내에서 인터넷 민족주의는 일반 네티즌뿐만 아니라 지식인의 광범한 참여, 그리고 정부의 정치적 활용 등이 결합된 복합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서이중·탕레이, 2013).

한편, 2009년 이전까지 오프라인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일본의 넷우익은

⁶⁷ 넷우익(ネット右翼)은 ‘인터넷’과 ‘우익’의 합성어로, 민족주의 혹은 국수주의를 신봉하는 일본의 인터넷 이용자, 특히 인터넷상에서 민족주의적 시각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이용자들을 지칭한다.

⁶⁸ 이를테면, 2012년 3월 13일 ‘위 더 피플’에 게재된 “일본해라는 표현을 바꾸어서는 안된다”는 청원에 대해 넷우익이 서명운동을 벌이자, 버지니아 한인회의 “일본해 표기를 ‘동해’로 바꾸자”는 청원에 대해 한국 네티즌들도 조직적으로 서명해 대응했다. 또 “미국 뉴저지주 펠리세이즈 파크시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추모비를 철거해 달라”는 청원에 단시간 내에 3만여 명이 서명한 것도 일본 넷우익 주도의 운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이원경, 2013).

2011년 7월 일본 배우 타카오카 소스케의 반한류 트윗을 계기로 전환점을 맞게 된다.⁶⁹ 후지TV의 한류 집중 방영에 불만을 품고 있던 넷우익 세력의 독려로 같은 해 8월 7일(약 6백명 참가)과 8월 21일(약 5천명 참가)에 후지TV 본사 앞에서 반한류 시위가 열린 것이다.

오프라인에서 넷우익의 정치세력화도 활발해지고 있다. 2007년 1월 넷우익에서 파생돼 오늘날 일본 최대 규모의 우익 단체로 성장한 ‘재특회(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모임)’는 조총련·한국계 일본 영주권자에 대한 지원금과 연금을 폐지하라고 주장한다. 재특회는 한국과 거래를 하는 일본 기업을 비난하는가 하면, 대표적인 한인타운이자 한류의 중심지인 도쿄 신오쿠보와 오사카 츄루하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과격한 반한 시위를 벌여 일본 내 한국 문화 전파를 가로막고 있다.⁷⁰

넷우익은 한국의 반일교육과 함께 독도 실효지배와 대마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다. 물론 이러한 넷우익의 역사 및 영토문제에 대한 주장은

⁶⁹ 타카오카는 자신의 트위터에 후지TV가 한국 프로그램을 지나치게 많이 방영하고 있어서 한국 TV 같이 느껴지며, 그래서 최근 후지TV를 시청하지 않는다고 적었고, 이후 인터넷 상에는 그에 동조하면서 “후지TV가 한류를 밀어주고 있다”, 심지어 “일본을 모욕하는 방송이다”라는 여론이 고조되었다.

⁷⁰ 이와 관련, 오구라 기조 교토대 교수는 “한국에서는 재특회로 대표되는 헤이트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증오 발언) 세력과 혐한파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은 엄연히 다르다”면서 “헤이트스피치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보통 일본인들 사이에서 혐한파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한다. 그는 “재특회 중심의 헤이트스피치 세력은 언행이 저급하고 과격해 이들을 좋아하는 일본인이 거의 없고 한·일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제한적”이라면서도 “일본에 일반인 혐한파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도 객관적 시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오구라 교수는 “1980년대와 비교하면 지금의 일본은 심리적으로 좁아지고 타자(他者)에 대한 포용력도 줄었다”며 “여유가 줄고 고독감이 일본 사회를 지배하면서 혐한 정서가 강해졌다”고 말한다. 그는 또 혐한파의 주장에 대해 “한마디로 하면 ‘한국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1965년 한·일 수교 이후 50년간 양국이 우호 관계를 맺어 왔는데, 일본인 시각에서 보면 ‘일본과 더 이상 사귀지 말자’는 것처럼 보이는 한국을 배척하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한국의 중국 쏠림 현상을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본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매력이 많은 중국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일본이 지금까지 한국과 우호적으로 지내온 오랜 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한국이 중국 쪽으로만 가버리느냐는 서운한 마음이 일본인들에게 생기는 게 사실이다. 그것이 혐한 감정을 더 부추긴다. 자신을 혐한파라 부르지 않는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혐한파로 분류할 수 있는 일본인들이 꽤 많아졌다”고 분석하고 있다(조선일보, 2014년 11월 25일 자).

일본 국내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2007년 총리직 사임 이후 두드러지는 활동이 없었으나, 2012년 1월 페이스북을 사용하면서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⁷¹ 이전까지 아베의 자민당 총재 및 총리 재임 가능성은 낮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 발언, 자민당 총재 선거 직전 센카쿠 영토문제로 촉발된 중국의 폭동,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이 일본의 민족감정을 자극해 우파 세력을 키울 수 있었던 만큼 향후에도 아베 총리 및 자민당이 넷우익을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넷우익이 한일 간의 역사 및 영토문제에 있어서 간접적인 형태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이원경, 2013).

넷우익과 같은 왜곡된 인터넷 세력이 인류가 공유하는 중요한 가치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릴지라도 인터넷 공간이 자생적으로 정화될 수 있도록 내·외부적 자극 요인을 줄여가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일본에서는 넷우익의 급격한 성장에 위기감을 느낀 시민운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등장하고 있다. 온라인상으로는 넷우익의 행태를 기록하고 그들의 주장을 분석해 증거 등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넷우익이 일본 내 한국인 밀집지역에서 갖는 험한 및 반한 시위에 대항하는 ‘반혐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반혐한 운동은 한일관계뿐 아니라 인종차별 등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일본과 한국은 친구” 등의 메시지를 적은 플래카드를 제작해 언론에 노출시키는 등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우익 시위대를 압도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넷우익의 주장이 전파되면서 이들의 의견에 위협성을 느낀 사람들도 증가해 넷우익을 자체적으로 정화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일본을 당구공처럼 단단한 하나의 의견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넷우익은 전체 일본인 중 소수에 불과하며, 일본 내에는 다양한 의견의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

⁷¹ 아베는 특히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페이스북에 “지극히 비상식적인 행위”, “폭거”라 비판했으며, 이에 대해 약 2만5천명이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등 넷우익을 지지 기반으로 인터넷상에서 인기를 모을 수 있었다(이원경, 2013).

이 엄존한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동시에 넛우익의 영향력을 평가절하하는 것도 위험하다. 여론조사를 통해 중국이나 한국에 비판적인 시각을 지닌 일본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데, 이 인구가 최근 활동을 다각화해 가는 넛우익과 결합했을 때의 위험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이원경, 2013). 따라서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위해서는 한국에 대해 호의적인 집단의 행동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한국 인터넷 공간에서부터 왜곡된 정보로 일본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행태를 줄여나가 넛우익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겠다.⁷²

또한 인터넷은 개방성과 소통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시공을 뛰어넘는 대규모의 열망이나 분노가 표출되고 증폭될 수 있지만, 동시에 쌍방향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열린 민족주의’ 혹은 ‘소통적(communicative) 민족주의’의 장을 지향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 소통적 민족주의로 나아가는 데는 이중언어 사용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테면 한국어와 중국어에 능한 조선족과 기타 이중언어 사용자는 한국과 중국의 인터넷 공간에서 상대방의 입장이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일시적으로 갈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대화와 토론을 가능케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양국의 민족주의에 대한 보다 균형적이고 중립적인 자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인터넷 공간이 한쪽으로 편향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서이종·탕레이, 2013). 이러한 칸막이 허물기야말로 소통적 민족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하겠다.

⁷² 오구라 기조 교토대 교수는 한국이 어떻게 일본에 접근하고 또 일본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문제와 관련, “물론 일본이 변해야 하지만 한국도 1965년 한·일 수교 이후 양국이 함께 축적해왔던 화합의 노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일본 측의 그런 노력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제스처를 취한다면, 일본 사회 분위기가 단번에 달라질 수도 있다”고 진단한다. 그는 또 “한국인들이 일본을 비판만 한다는 인식을 주면 협한파와 아베 정권에 성장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주는 것밖에 안 된다”며 “지금의 한·일 사회를 보면 일본보다 한국이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다. 협한파를 친한파로 돌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한국에 충분히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하고 있다(조선일보, 2014년 11월 25일 자).

VI. 맺는 말

흔히들 “19세기가 유럽의 세기였다면, 20세기는 미국의 세기였고, 21세기는 동아시아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말해 왔다. 오늘날 유럽과 미국이 상대적 침체와 쇠퇴를 겪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동아시아의 핵심 3국인 한·중·일은 정녕 21세기를 동아시아의 세기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3국은 경제적 상호의존,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한 공동생활권화, 제반 영역의 신속하고 광범한 상호 침투와 파급 등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파트너십을宿命적으로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한·중·일 3국은 상호이해와 협력의 구심력을 키워 조화로운 공생관계 속에서 유럽연합처럼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지역공동체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보다는, 민족주의·국가주의의 재부상 속에서 분열과 대립의 원심력만 증대시키고 있는 게 현주소라 하겠다.

미국과 함께 G2로 급부상한 중국은 “21세기는 중국의 세기가 될 것”이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이라는 이른바 ‘중국몽(中國夢)’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핵심이익(core interest)으로 규정해 ‘반접근(anti-access/area denial)’ 전략을 펴는 가운데,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대양해군을 길러 태평양을 미국과 양분할 것을 요구하는 ‘신형대국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 영유권을 놓고는 일본과, 남중국해의 파라셀·스프래틀리 군도를 놓고는 아세안 국가들과 타협 없는 힘겨루기로 일관해 ‘중국위협론’을 실감케 하고 있다. 중국은 또 제주도민의 전설 속 이상향 ‘이어도’의 상공을 자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에 일방적으로 포함시키는가 하면, 고조선사·고구려사·발해사를 자국의 지방정권 역사로 작위적으로 편입시키는 동북공정도 감행했다. 이제 중국은 중화민족주의의 열기 아래 ‘도광양晦(韜光養晦)’는 어느덧 자취를 감추고 ‘유소작위(有所作爲)’ 내지 ‘주동작위(主動作爲)’로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겨냥한 행보를 서슴지 않고 있다.

‘잃어버린 20년’을 거치면서 국가적 자신감과 민족적 우월감에 상처를 입은 일본은 보수우경화에서 타개책을 찾아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는 역

사 수정주의로 치닫고 있다. “침략의 정의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상식밖 발언으로 ‘속내’를 드러낸 현직 총리가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가 하면, 여성의 보편적 인권과 존엄을 유린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분과 지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안부’의 강제동원을 인정하 「고노담화」를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훼손한 데 이어 폐기 수순을 밟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은 독도에 대한 분쟁지역화 시도를 노골화하고, 후대에 귀속을 결정키로 한 중국과의 약속을 뒤집고 센카쿠 열도를 일방적으로 국유화해, 침탈의 역사가 서린 도서 분쟁을 국가정체성이 걸린 영토 분쟁으로 재포장하면서 공세적 민족주의를 동원하고 있다. 평화헌법에 대한 ‘해석개헌’의 편법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결정한 일본은 미국의 힘의 공백을 메울 재무장으로 중국과 동아시아 패권을 다투는 양상이다.

이러한 일본의 독도 도발에 한국은 ‘저항적 민족주의’의 과도한 반응으로 ‘조용한 외교’의 실리를 챙기지 못했고,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돌연한’ 독도 방문과 신중치 못한 일왕 관련 발언으로 일본의 ‘근린제국 조항’ 폐기에 빌미만 제공하면서 양국관계를 최악으로 몰아넣었다. 강대국들로 둘러싸인 동북아에서 중견국인 한국이 이들 국가들을 아우르는 평화협력 체제 구성에 이니셔티브를 갖기 위해서는 정교한 전략과 창의적인 외교적 행보가 요청되지만 일본의 우경화 질주에 제대로 브레이크를 걸지도 못하고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한 돌파구도 좀처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또 한국은 이른바 ‘아시아 패러독스(Asian Paradox)’ 현상의 근저에 가로놓인 신뢰부족을 치유하는 다자대화 프로세스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제안해 놓고 있지만, 이 또한 아직 ‘발화(發火)’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동북아가 이처럼 자기파괴적인 분열 속에 패권 다툼과 자국 이익의 극대화에만 골몰하는 한, 그리고 한·중·일 3국이 ‘열린 민족주의’로 나아가지 않고 폐쇄적인 자민중중심주의적 행보를 계속하는 한, “21세기는 동아시아의 세기가 될 것”이라는 ‘예언’은 한낱 ‘말의 성찬’에 그치게 될 것이다. 또 ‘21세기는 중국의 세기가 될 것’이라는 ‘중국의 꿈’도 현실화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벌써부터 동중국해가 동아시아의 ‘화약고’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은 동북아가 민족주의의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고 공동체로서의 지역정체성을 가다듬어 평화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야말로 21세기를 진정한 동아시아의 세기로 만드는 길일 것이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은 태평양전쟁 종전 70주년을 맞는 2015년을 과거사와 영토 갈등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동북아 평화질서 재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한일 간에는 2015년에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만큼, 양국관계의 반세기를 성찰하는 가운데 갈등 해소를 위한 발상의 대전환과 대승적 결단으로 반목과 대립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가적·국민적 에너지의 엄청난 소모를 요구하는 상호 불신과 증오의 덩어리를 해체하기 위한 전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순화된 애국주의’ 내지 ‘유연한 국가주의’로써 완고한 민족주의의 ‘판도라 상자’를 밀어내고, 동북아의 지역정체성을 보듬어 공존공영의 공동체로 거듭 나기 위한 여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가정체성이 현저히 약화되면 자칫 ‘실패한 국가’로 전락할 수 있듯이 지역정체성이 현저히 약화되면 지역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고 만다. 따라서 동북아 3국은 국가정체성과 지역정체성의 공존을 추구하고으로써 적어도 지역통합이라는 세계사의 흐름에 역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동북아는 그동안 ‘한·중·일 정상회의’라는 소다자주의(mini-lateralism)를 지역협력의 소중한 자산으로 일궈왔다. 이 ‘한·중·일 정상회의’를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견실하게 지속해 파행을 막아 왔다면 3국관계가 이토록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현재 한·중·일 간에는 장관급 협의체 18개를 포함해 58개의 정부간 협의체가 설치돼 있는데, 그 최고위 협의체가 바로 ‘한·중·일 정상회의’이다. 이 3국 정상회의가 상징적·실질적 차원에서 역내 협력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는 지대하다. 따라서 중단된 ‘한·중·일 정상회의’의 조속한 재개야말로 3국 간 갈등 해소의 돌파구 마련에 거의 절대적 관건인 셈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은 ‘포지셔닝 파워’를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동북아의 선도적 행위자이자 합리적 중재자로서의 막중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동북아의 패권을 다투는 중국이나 일본은 상호 견제와 불신으로 인해 현재의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카드’를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이 어느 국가도 갖

지 못한 ‘포지셔닝 파워’로써 ‘한·중·일 정상회의’의 복원에 앞장서는 한편, 갈등 완화 내지 해소를 위한 ‘카드’를 제시하는 ‘peacemaker’가 돼야 한다. 진정한 동아시아 세기를 열기 위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한 미래지향적 화해 협력의 가시적 조치를 담은 ‘3국 정상 선언’이 절실하다.

참고문헌

- 강상중(2004), 『내셔널리즘』, 임성모 역, 서울: 이산.
- 강원택(2008), “한국의 민족주의와 대외관계”, 『동북아 민족주의 갈등과 한반도평화』, KPI 연구총서 08-02, (제9회 한반도평화포럼 자료집), 한반도평화연구원.
- 고상두(2011),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 영유권 분쟁과 민족주의”, 『21세기정치학 회보』 제21집 2호, 21세기정치학회.
- 구민교(2011), “지속가능한 동북아시아 해양질서의 모색: 우리나라의 해양정책과 그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제20권 2호(2011 여름), pp. 1-36.
- 구영록(1975), “갈등과 국제정치: 갈등이론의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15집 (1975.12), 한국국제정치학회.
- 김관원(2012),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에 대한 소고”, 『영토해양연구』 Vol. 4, 동북아역사재단.
- 김명섭(2007), “국가(민족)주의와 보편주의의 조화 방안”, 동북아시대위원회·동북아역사재단 공동주최 심포지엄 「동북아를 보는 눈: 국가주의와 보편주의」(2007.5.30.) 발표논문.
- 김미덕(2014), “아베 정권의 ‘보수·우경화’ 행보 어떻게 볼 것인가”, 『일본공간』 Vol. 15(2014.6) 기획좌담,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 김영구(2008), 『이어도 문제의 해양법적 해결방법』, 동북아역사재단.
- 김영구(1999),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부산: 효성출판사.
- 김영명(2002), “세계화와 민족주의: 약소국 시각 정립의 방법”,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2호, 한국정치학회.
- 김용복(2013), “일본 우경화, 한일관계 그리고 동아시아: 과거사 갈등과 영토분쟁”, 『경제와 사회』 2013년 가을호(통권 제99호), 비판사회학회.
- 김정현(2014), “동북아 공동역사교재 발간의 필요성과 과제”, 『동북아 역사넷』 역사칼럼(166), 동북아역사재단.
- 나이트 세이추(内藤正中, 2009), 『한일 간의 독도·죽도 논쟁의 실체: 죽도·독도 문제 입문 일본 외무성 죽도(竹島) 비판』, 광진오·김현수 역, 도서출판 책사랑.
- 나중석·권용혁·이진원(2009), “동아시아공동체의 정체성 형성의 문제”, 『동아시아공동

체 논의의 현황과 전망』, 동북아역사재단.

남상구(2005), “전후 일본의 전쟁희생자 ‘보상’에 관한 고찰”, 『일본역사연구』 제22집, 일본사학회.

노태돈(1991), “한국민족 형성과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고대사논총』 1, 한국고대사회연구소.

다카하라 모토아키(高原基彰, 2007), 『한중일 인터넷 세대가 서로 미워하는 진짜 이유』, 정호속 역, 서울: 도서출판 삼인.

동아일보, 2014년 4월 8일 자; 2011년 7월 27일 자; 2010년 5월 17일 자.

류석진·조희정·박설아(2013), “온라인 신민족주의의 정치화 가능성: 한·중·일 온라인 갈등 유형과 확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22집 제3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류석진(1999), “정보통신혁명과 정체성”, 『한국과 국제정치』 제15집 제1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마영삼(2011), “공공외교의 현황과 우리의 정책 방향”, 『JPI 정책포럼』 No. 2011-27(2011년 9월), 제주평화연구원.

매일경제, 2012년 3월 7일 자.

박진우(2014), “야스쿠니 문제의 논리적 비판을 위해서”,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 60, 동북아역사재단.

박창건(2008),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한일갈등의 규범 확산: 다케시마(竹島)의 날’과 ‘대마도(對馬島)의 날’ 조례 제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8집 4호(2008.12), 한국국제정치학회.

박철희(2011), “한국 공공외교의 거버넌스 시스템 개혁을 위한 제언”, 한국국제교류재단 총회 세미나 발표문.

배궁찬(2009), “이명박 정부의 지역협력 외교과제와 전략”, 2008 정책연구과제 『국제정세 변화와 이명박 정부의 외교 과제』, 외교안보연구원.

배궁찬(2006), “한·중·일 3국 협력의 도전과 과제: 최근 역사논쟁과 민족주의 문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브리프』 통권 제1호(2006.1), 성균중국연구소.

배기형(2010), 『국경없는 TV, 경쟁하는 프로그램』,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서울신문, 2005년 10월 17일 자.

- 서이중·탕레이(2013), “중국과 한국의 사이버민족주의 비교연구 서언”, 『세계정치』 제18권,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 서정경(2006), “미·중 민족주의의 특성과 양국관계: 메시아니즘과 천자관의 조우”, 『국가전략』 제19권 3호, 세종연구소.
- 서현주(2012), “일본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기술 추이와 전 망”, 『일본 아베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 60, 동북아역사재단.
- 세계일보, 2012년 11월 30일 자.
- 손기섭(2008), “북방 4도와 센카쿠 열도 해양분쟁의 특성”, 『일본문화연구』 제11집, 동아시아일본학회.
- 신각수(2010), [특별기고] “가교외교 구상 : 한국 다자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국제관계연구』 제15권 1호, 일민국제관계연구원, pp. 293-324.
- 신용하(2006), “민족의 사회학적 설명과 ‘상상의 공동체론’ 비판”, 『한국사회학』 제40집 제1호, 한국사회학회.
- 신용하(1996, 2009),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 신육희(2010), “동아시아 다자주의의 제도적 디자인: 세 유형의 비교”, 『동아시아 다자협력 제도화: 이론적 논의와 추진방안』, 제주평화연구원, pp. 1~28.
- 아주주간(亞洲週刊), 2008년 7월 6일 자(22권 26기).
- 양희철(2012), “중일 동중국해 자원 개발 합의의 법적 해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국제법학회논총』 제67권 제1호, 대한국제법학회.
- 연합뉴스, 2014년 9월 22일 자; 2014년 8월 30일 자; 2014년 8월 15일 자; 2014년 8월 6일 자; 2014년 8월 5일 자; 2014년 7월 25일 자; 2014년 7월 1일 자; 2014년 6월 23일 자; 2014년 6월 23일 자; 2014년 6월 10일 자; 2014년 4월 28일 자; 2014년 4월 24일 자; 2014년 4월 23일 자; 2013년 12월 25일 자; 2013년 12월 8일 자; 2013년 11월 23일 자; 2013년 11월 27일 자; 2013년 11월 14일 자; 2013년 9월 20일 자; 2013년 7월 19일 자; 2013년 7월 3일 자; 2013년 4월 23일 자; 2012년 3월 10일 자; 2010년 9월 21일 자; 2010년 2월 22일 자.
- 외교부(2013), 『2013 외교백서』, 외교부.
- 외교부 『한·일·중 협력 개황』 2013.12, 외교부.
- 윤휘탁(2006), 『신중화주의 : ‘중화민족 대가정’ 만들기와 한반도』, 서울 : 푸른역사.

- 이남주·배기찬(2009), “동아시아공동체 추진과 민족주의 극복방안”,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의 현황과 전망』, 동북아역사재단.
- 이동률(2001), “중국 민족주의가 대외관계에 미치는 영향”, 『국제정치논총』 제41집 3호, 한국국제정치학회.
- 이상희(2009),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유엔인권기구-국제NGO 활동을 포함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법적 쟁점의 정리와 최근 동향의 분석』, 민족문제연구소.
- 이수형(2014),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 조성전략을 위한 주요 전제조건 검토”, 『JPI 정책포럼』 No. 2014-16, 제주평화연구원.
- 이숙중(2009),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의 현황과 전망』, 동북아역사재단.
- 이어도연구회(2011), 『이어도 바로알기』, 서울: 도서출판 선인.
- 이완범(2006), “21세기 세계화시대 한국의 열린 민족주의와 동북아시아 평화”, 『국제평화』 제3권 2호, 서울평화상문화재단.
- 이월경(2013), “일본 인터넷 민족주의의 전개와 한국에 대한 함의”, 『동아연구』 제32권 2호, 서강대 동아연구소.
- 이월덕(2014), “한일 역사마찰의 정치학: 한중일 협생을 지향하며”, 동북아역사재단·국민대학교 공동주최 한·중·일 국제학술회의 「한중일 3국간 갈등을 넘어 협력을 향하여」(2014.9.12.) 발표논문.
- 이월덕(2012), “일본측 한일회담(1945~1965) 외교문서 중 독도 관련 문서의 검토”, 『영토해양연구』, 2012년 여름호(vol.3),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 이춘복(2012), 「탈 냉전기 한중일 민족주의 특성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이희옥(2009), “중국 민족주의 발전의 이데올로기적 함의”, 『중국학 연구』 제47집, 중국학연구회.
- 이희옥(2007), “동북공정의 정치적 논란에 비판적 해석”, 『동아연구』 제 53집, 서강대 동아연구소.
- 이희옥(2005),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현황과 참여기관 실태”, 『중국의 동북공정과 중화주의』,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총서 12, 고구려연구재단.
- 임지현(2004), “고구려사의 딜렘마: ‘국가 주권’과 ‘역사 주권’의 사이에서”, 임지현 엮음, 『근대의 국경, 역사의 변경』, 서울: 휴머니스트.

- 전재호(2012), “민주화 이후 한국 민족주의의 변화: 통일, 북한, 미국, 외국인, 재외동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제5권 제1호,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 정재호(2008), “중국의 민족주의와 한-중관계”, 『동북아 민족주의 갈등과 한반도평화』, KPI 연구총서 08-02, (제9회 한반도평화포럼 자료 집), 한반도평화연구원.
- 조선일보, 2014년 11월 25일 자; 2014년 11월 12일 자; 2014년 11월 11일 자; 2014년 8월 29일 자; 2014년 8월 9일 자.
- 조성환(2010), “체제전환기 중국의 국가민족주의”, 『국제문제연구』 제10권 제3호(통권 39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 조성환(2005), “세계화 시대의 동아시아 민족주의”, 『동양정치사상사』 제5권 1호, 한국 동양정치사상사학회.
- 조세영(2014), “일본의 우경화와 중일관계”, 『성균차이나 포커스』 제10호, 성균중국연구소.
- 조양현(2012),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와 동북아 협력”, 『주요국제문제분석』 No. 2012-16, 외교안보연구원.
- 조양현(2011), “제4차 한·중·일 정상회의 평가 및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No. 2011-14, 외교안보연구원.
- 조양현(2009),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와 동북아 협력”, IFANS FOCUS, IF2009-002K(2009.10.19), 외교안보연구원.
- 중앙일보, 2014년 11월 8일 자; 2003년 7월 14일 자.
- 진덕규(2011), “한국 민족주의의 이념적 전개와 그 지향에 대하여”, 『국제학술교류보고서』 제1집, 대한민국학술원.
- 진행남(2013), 『한국의 미디어 공공외교의 강화 방안』, 제주평화연구원 연구 사업보고서 [13-1], 제주평화연구원.
- 진행남(2012), “이어도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모색”, 『JPI 정책포럼』 No. 2012-04, 제주평화연구원.
- 최원기(2010), “미국의 환태평양 파트너십(TTP) 추진 전략: 추진 배경 및 향후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 최장근(2011), “독도문제와 내셔널리즘”, 한국학술연구원 제13차 코리아포럼 「동아시아 민족주의와 영토분쟁」, 한국학술연구원.

최장근(2006), “전후 일본의 센카쿠 제도에 대한 영토전략”, 『일본문화학보』, 제44집, 한국일본문화학회.

한겨레신문, 2004년 8월 25일 자; 2013년 5월 31일 자; 2012년 5월 24일 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2012), 『2009~2012 연차보고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2), “이어도 협상에서 우리나라에 유리 - 국제해양법재판소, 벵골만 사건에서 해양경계 중간선 원칙 재확인”, 보도자료(2012.4.17.).

SBS, 「8시 뉴스」, 2006년 9월 5일 자.

Anderson, Benedict(2002),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윤희숙 역,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서울: 나남.

Blanchard, Jean-Marc F.(2003), “Maritime Issues in Asia: The problem of Adolescence”, Alagapa, Muthiah ed., *Asian Security Order: Instrumental and Normative Features*,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Caporaso, J.(1992)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Multilateralism: The Search for Found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 3, pp. 599-632.

Fillingham, Zachary(2010), “Senkaku: The Dawn of a New Era of Tensions in East Asia”, *Geopolitical Monitor* (Sep. 20).

Hobsbaum, Eric J.(1994),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강명세 역,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서울: 창작과비평사.

Matthews, Eugene A. (2003), “Japan’s New Nationalism”, *Foreign Affairs*, Vol. 82, No. 6.

Smith, Anthony D.(2010), *Nationalism*, Polity, 2 edition.

한국국제교류재단 웹사이트 <http://www.kf.or.kr>

한국기자협회 웹사이트 <http://www.journalist.or.kr>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웹사이트 <http://www.editor.or.kr>

The Characteristics of Nationalism and Conflict Alleviation Ways in Korea, China, and Japan

In a new approach to various aspects of conflict including territorial and historical conflicts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reciprocal influence of the 'identity' problem of these countries is worthy of notice. One of the major variables of their identities is nationalism. This research paper classifies the conflicts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into three types - territorial and maritime boundary conflict, historical conflict, and security conflict. The paper searches for characteristics of nationalism in these countries, examines their interaction with three types of conflicts and suggests six ways to alleviate such conflicts between the three countries.

key words: nationalism, territorial and maritime boundary conflict, historical conflict, security conflict